

# 지방자치의 허와 실

장복산

## 소개글

평범한 시민의 시각에서 바라본 지방자치의 허상과 실상을 이야기 합니다.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주민의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2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아직은 요원하다는 생각입니다.

## 목차

1	스타트잡 2011년 처음한 정모후기	4
2	안홍준 의원의 정계은퇴를 요구하는 이유	9
3	수토양민(守土養民) 정신	12
4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말 한다.	17
5	창원시의회 한나라당 의원들은 각성하라.	20
6	오늘도 나는 창원시의원들에게 메일을 발송했다.	23
7	'안홍준 발언' 핵심은 '정치적 당사자' 밝힐 일	26
8	지방자치의 허와 실(虛와 實)	30
9	존경하는 창원시의원님께 드립니다.	34
10	지방자치단체장 업무추진비 공개를 환영한다.	40
11	연구대상인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43
12	진해 군항제 준비상황 현장중계사진입니다.	49
13	자치단체장이 3선(選) 못하면 바보다.	69
14	동문서답(東問西答)하는 창원시장	72
15	고집(固執)과 주관(主觀)	76
16	위법(違法)한 조례는 무효다	79
17	비판(批判)과 비난(非難)의 차이	84
18	전자메일도 읽지 않는 창원시의회 의원들	87
19	정답 없는 창원시장의 정치적 계산	90
20	깊은산속 옹달샘 하루명상 체험기	93
21	지나침은 모자람만 못하다.	120
22	결론 없는 시대적 담론(談論), 정의(正義)	125

# 01

스타트잡 2011년 처음한 정모 후기



스타트잡 카페의 소모임인 아이디어창업연구회 마케팅연구본부가 2011년에 처음 한 병개모임이다. 마케팅본부장인 피터팬광고님의 열정으로 예다원 1층 다실이 짝 찬 성공적 병개였다. 저녁 7시반 부터 시작해서 밤 11시까지 3시간 반을 발표하고 토론하는 강행군이었지만 누구 하나 크게 불평하는 사람 없이 진지한 토론을 이어 갔다.

너무 토론시간이 늦게 끝나는 바람에 2차 뒤풀이를 한다는 구이소에는 참석을 하지 못하고 돌아 온 터러 누가 상세한 후기를 올려 준다면 몰라도 뒤풀이 내용은 알 길이 없다. 좀 아쉬운 점이라면 성공사례 발표를 한 번에 3명이나 한다는 자체가 무리고 무려 30여명이 돌아가며 자기소개도 하고 경험담도 하도록 시간을 배정한 일정을 소화한다는 자체가 문제였다. 그래도 간간히 박수치는 연습을 유도하는 마케팅본부장의 제치로 무리없이 마무리한 병개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 새벽 잠이 없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던 기억이다. 나도 이제는 주로 새벽시간에 글쓰기를 하는 것으로 보아 나이가 들기는 들었다는 생각이다. 어제 병개모임에서도 여러번 나이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지만 세상을 오래 살았다는 사실은 여러가지 삶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많다는 생각이다.

나도 65년의 세상을 살면서 스스로는 후회 없는 세상을 살았다고 생각하지만 순간 순간을 떠올리면 성공보다는 실패의 순간들이 더 강한 이미지로 남아서 이제는 점점 용기를 잃어가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일을 추진하려는 추진력이나 순발력도 점점 무뎌진다는 느낌이다.

요즘은 자신이 어질러 놓은 주변의 일상들을 서서히 정리해 보겠다는 생각으로 자비출판하는 책이라도 한번 만들어 보려고 나 자신의 과거들을 이리저리 뒤지고 있는 중 이다. 어제밤 병개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경험담을 이야기하고 스스로 터득한 마케팅기법도 발표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3~40년 전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우리집 장녀인 큰 딸이 태어나던 1973년도에 사진기도 없이 달랑 돈 8만원을 들고 사진관을 개업했던 용기를 이제는 나 스스로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지만 그 때는 그렇게 했던 기억이다.

언젠가는 지금 생각하면 황당하다는 생각이 드는 이런 이야기들도 글로 엮어서 남기고 싶다는 생각은 있지만 아직은 그냥 생각으로 머물러 있다.

요즘은 내가 우연한 기회에 접하게 된 시민운동에 대한 이야기나 지방자치에 관한 이야기들을 글로 엮어서 65회 생일이 들어 있는 3월 중에는 책이라도 한 권 만들겠다는 생각이다.

오늘 새벽에도 내가 운영하는 블로그에서 이런저런 자료들을 찾다가 1996년 신경남일보 「경일 춘추」에 실었던 『나는 몇점짜리인가』라는 글을 보는 순간 입가에 미소가 떠오르며 스타트업 병개에서 여러 멤버들이 하던 이야기들이 오버랩(overlap)되면서 이 글을 쓰고 있다.

---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 원칙과 상식이 무너진 사회적병폐에 분노 한다.  
원칙과 상식에는 보수와 진보가 없다. 높고 낮음, 옛것과 요즘 것 차이도 없다. 원칙과 상식이 지닌 힘이다. -최근 내가 운영하는 블로그의 정체성이다.-

---

## < 나는 몇점짜리인가 >

[1996, 9, 15 신경남일보 경일춘추]

저녁 늦은 시간에 젊은 세일즈맨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눈적이있다.  
그와 거래를 시작한지 몇 달 되지않는 사이지만 밤 늦게라도 거래처를 방문하며 상품거래보다 인간적인 거래관계를 맺어보겠다는 노력이 역력했다.  
그런 그에게 호감이 가 술자리에 앉게 되었다.

소주잔이 서너순배 돌아 그는 과감하고 예리하게 나의 모든 것을 간파하고 있는 것같이 자신감에 넘치는 어투로 나에 대한 인상과 점포 운영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했다.  
나의 인상에 대해 너무 차갑고 철두철미하여 융통성이 없는 것 같아 쉽게 접근하기 어려웠으며 현재 점포의 규모나 운영방식으로 봐서 약간의 융통성과 기교(상술)만 가미한다면 급성장할 수 있으며 매출도 배 이상 신장할 것이라는 등 자기가 보고 느낀데로 솔직히 털어놓았다.  
밤이 늦어서야 약간 거나한 기분으로 집에 돌아와 잠자리에 들었으나 그 젊은 세일즈맨의 말이 자꾸만 뇌리를 스친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신도 모르게 주위로부터 점수가 매겨지고 평가를 받으며 살아간다는 생각을 하니까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을 자평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며 밤잠을 설쳤다.  
하루에 한번은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하라는 말을 어떤 책에서 읽은 기억이 나지만 내 자신이 주위로 부터 여러 측면에서 체크되고 평가된다는 사실에 새삼 놀랐다.

사업의 파트너는 사업적 측면에서 나를 평가하고 점수를 매기고, 친구는 우정이라는 잣대로 나의 키재기를 하면서 점수를 매기고 있을것이다.  
또 가족은 가정의 잣대로 키재기를 할 것이고, 또 다른 주위에서는 성숙한 시민으로서의 잣대로 키재기를 할 것이다.  
나는 그 모든 잣대의 어느 위치에 자리하고 있을까..?

그리고 몇 점이나 될까..?

우리 모두 자기점수를 성적표에 기록하며 세상을 살아간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1996년(단기 4329년) 9월 15일 日요일 (日刊)

아침신문

## 慶日春秋

저녁 늦은 시간 거래처의 젊은 세일즈맨과 소주잔을 기울이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다. 그와 거래를 시작한 지 몇 달 되지 않은 사이지만 밤늦게라도 거래처를 방문하며 상품거래보다 인간적인 거래관계를 맺어보겠다는 노력이 역력했

무만 뇌리를 스쳤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신도 모르게 주위로 부터 점수가 매겨지고 평가를 받으며 살아간다는 생각을 하니 까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을 자평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며 밤잠을 설쳤다. 하루에 한번은 자신을 돌아보

### 나는 몇점짜리인가

다. 그런 그에게 호감이 가 술자리에 앉게 되었다. 소주잔이 서너 손배 돌아 그는 과감하고 예리하게 나의 모든 것을 간파하고 있는 것같이 자신감에 넘치는 어투로 나에게 대한 인상과 점포운영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했다.

나의 인상에 대해 너무 차갑고 철두철미하여 융통성이 없는 것 같아 쉽게 접근하기 어려웠으며, 현재 점포의 규모나 운영 방식으로 봐서 약간의 융통성과 기교(상술)만 가미한다면 급성장할 수 있으며 매출도 백 이상 신장할 것이라는 등 자기가 보고 느낀대로 솔직히 털어놓았다.

밤이 늦어서야 약간 거나한 기분으로 집에 돌아와 잠자리에 들었으나 그 젊은이의 말이 자



이 춘 모

고 반성하라는 말을 어떤 책에서 읽은 기억이·나지만 내 자신이 주위로 부터 여러 측면에서 체크되고 평가된다는 사실에 새삼 놀랐다.

사업의 파트너는 사업적 측면에서 나를 평가하고 점수 매기고, 친구는

우정이라는 잣대로 나의 키재기를 하면서 점수를 매기고 있을 것이다.

또 가족은 가정의 잣대로 키재기를 할 것이고, 또 다른 주위에서는 성숙한 시민으로서의 잣대로 키재기를 할 것이다.

나는 그 모든 잣대의 어느 위치에 자리하고 있을까. 그리고 몇 점이나 될까. 우리 모두 자기점수를 성적표에 기록하며 세상을 살아간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진해예총 회장〉

# 新慶南日報

創刊: 1909년 10월 15일

發行·編輯 金 興 治

兼印刷人 朴 泳 鎮

編輯局長 朴 泳 鎮

660-340 晉州市 上坪洞 237-4

전화 안 내 751-1000

F A X 57-1722

社 會 部 751-1060

政 經 部 751-1050

文化特輯部 751-1055

廣 告 局 751-1010

F A X 57-1010

구독배달 751-1030

서울支社 277-8633

購 讀 料 月定 5,000원

購 讀 料 1部 3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 '매일경제'가 '한남일보' 제호를 되찾았습니다

경남매일의 인내에 감사드립니다.

'매일경제'가 '한남일보'로 제호를 되찾았습니다. 그동안 '매일경제'라는 제호를 사용하면서 본지의 인내에 '매일경제'의 실수를 용서해 주신

다. '매일경제'의 제호와 정감은 '매일경제'가 '매일경제'의 이름을 바꾸는 데 있어 용서와 용서할 줄 아는 자세를 보여줍니다. 제호를 정하지 못하고 또다시 변경하는 것이 독자의 혼란을 일으켜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제호로 인한 불편과 애초

한의 도덕적 기준을 지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매일경제'는 독자의 용서와 용서할 줄 아는 자세로 용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잘못 된 무언은 자숙히 고지합니다. 비변변의 사정을 이해 부탁드립니다.



ISSUE

'행운지진' 대신 '행운TV'

9면 신변·기법 >

# 한남일보

2011년 2월 22일 화요일 정가 4344원 (매체 1매 20원)

www.hannamilbo.com

제 385 호 대표전화 055-638-0138

## 신년 모임

한남일보가 신년사원을 모집합니다

## 모임처

가장적(주)가정·공공영양실 ○명

## 제출서류

임사직증서, 자기소개서, 주민등록등본

## 접수기간

2011년 2월 22일까지

문의: 055-638-0138

주소: 경남 거제시 고현동 973-2

## 나라문고

055-632-4131

010-6542-4131

## 이준모 칼럼

## 인터넷카페 모임을 다녀와서



이 준 모

진해시민모임 집행위원장  
객원칼럼니스트

개인들의 창업을 도와주고 영세 상인들의 영업전략이나 사업장 운영문제를 컨설팅 해 주는 스타트업이라는 인터넷 카페가 있다.

스타트업 카페의 소모임인 아이디어창업연구회 마케팅연구부가 2011년에 처음 한 병개(병개)모임이다. 마케팅본부장인 피터팬광고님의 열정으로 예다원 1층 다실이 꽉 찬 성공적 모임이었다.

저녁 7시반 부터 시작해서 밤 11시까지 3시간 반을 발표하고 토론하는 강행군이였

지만 누구 하나 크게 불평하는 사람 없이 진지한 토론을 이어 갔다.

너무 토론시간이 늦게 끝나는 바람에 2차 뒤쫓이를 한다는 구이소에는 참석을 하지 못하고 돌아 온 터라 누가 상세한 후기를 올려 준다면 몰라도 뒤쫓이 내용은 알 길이 없다.

좀 아쉬운 점이라면 성공사례 발표를 한 번에 3명이나 한다는 자체가 무리고 무려 30여명이 돌아가며 자기소개도 하고 경험담도 하도록 시간을 배정한 일정을 소화한다는 자체가 문제였다. 그래도 간간히 박수치는 연습을 유도하는 마케팅본부장의 제치로 무리없이 마무리한 모임이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 새벽 잠이 없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던 기억이다. 나도 이제는 주로 새벽시간에 글쓰기를 하는 것으로 보아 나이가 들기는 들었다는 생각이다.

어제 모임에서도 여러번 나이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지만 세상을 오래 살았다는 사실은 여러가지 삶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많다는 생각이

나도 65년의 세상을 살면서 스스로는 후회 없는 세상을 살았다고 생각하지만 순간순간을 떠올리면 성공보다는 실패의 순간들이 더 강한 이미지로 남아서 이제는 점점 용기를 잃어가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 어떤 일을 추진하려는 추진력이나 순발력도 점점 무뎠다는 느낌이다.

요즘은 자신이 어질러 놓은 주변의 일상들을 서서히 정리해 보겠다는 생각으로 자비출판하는 책이라도 한번 만들어 보려고나 자신의 과거들을 이리저리 뒤지고 있는 중이다.

어제밤 모임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경험담을 이야기하고 스스로 터득한 마케팅기법도 발표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3~40년 전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젊음이라는 크나큰 자산을 가지고 용기와 희망을 이야기하는 참석자들의 발표를 보면서 부럽다는 생각이다.

나는 큰 딸이 태어나던 1973년도에 사진기도 없이 달랑 돈 8만원을 들고 사진관을 개업했던 용기를 이제는 나 스스로 생각해

도 이해할 수 없지만 그 때는 그렇게 했던 기억이다.

언젠가는 지금 생각하면 황당하다는 생각이 드는 이런 이야기들도 글로 엮어서 남기고 싶다는 생각은 있지만 아직은 그냥 생각으로 머물러 있다.

요즘은 내가 우연한 기회에 접하게 된 시민운동에 대한 이야기나 지방자치에 관한 이야기들을 글로 엮어서 책이라도 한 권 만들겠다는 생각이다.

오늘 새벽에도 내가 운영하는 블로그에서 이런저런 자료들을 찾다가 1996년 모 지역일간지의 「경일춘추」에 실었던 「나는 몇 점짜리인가」라는 글을 보는 순간 입가에 미소가 떠오르며 스타트업 모임에서 여러 멤버들이 하던 이야기들이 오버랩(overlap)되면서 이 글을 쓰고 있다.

이제는 어떤 방법으로든 젊음이라는 자신의 소중한 자산을 되 돌릴 수 없는 현실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인터넷 카페 모임이었다.

그리고 젊음이라는 소중한 가치도 직접 느끼고 확인하는 모임이었다.

# 02

안홍준 의원의 정계은퇴를 요구하는 이유



## 안홍준 의원의 정계은퇴를 요구하는 이유

논리학에서 모순(矛盾)은 두 개의 명제가 동시에 참이 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이처럼 모순은 ‘모든 방패를 뚫는 창’과 ‘모든 창을 막는 방패’처럼 동시에 존재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경남도민일보 3월 3일치에 경남수렵협회 오수진 회장이 기고한 글을 보면 사람을 혼동하게 하는 이상한 논리적 모순을 가지고 안홍준 의원을 비호하는 글이라는 생각이다.

내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지만 오수진 회장은 "통합청사 선정 진실규명을 위한 창원시의원 대책위원회"가 안홍준 의원에게 사퇴를 요구한 내용을 아전인수식으로 왜곡하고 있다는 생각이다. 「"통합청사 선정 진실규명을 위한 창원시의원 대책위원회"가 청사관련 진실규명을 위해 국회의원 4명에게 질의서를 보냈지만 모두 묵살했기 때문에 창원시민에 대한 우롱이고 지방의회 무시라고 주장하며 지방 자치권을 왜곡했다는 것이다.」는 이야기는 어불성설이다.

오수진 회장이 수차에 걸쳐 기고한 내용처럼 안홍준 국회의원이 진해, 마산, 창원을 통합하는 지자체 통합 과정에서 "통합추진 할 때 명칭은 창원, 청사는 마산에 오는 것으로 이미 주요 정치적 당사자들끼리도 이야기가 된 사안이다."는 중요한 발언을 했다. 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하는 것이다. 오회장의 이야기 데로 모든 정황 증거로 보아 안의원의 발언은 신뢰할 수 있는 사실관계라는 것을 바탕으로 우리는 국가사무를 담당하는 국회의원이 지방 자치권을 침해하는 직권남용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

나는 오회장이 주장하는 3개시 통합과 통합시 명칭 청사문제 등은 지방자치의 문제가 아니라 고도의 정치 행위라고 주장하는 근거를 찾을 방법이 없다.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에 관한 문제는 당연히 국가사무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제4조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을 바꾸거나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법률로 정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통합의 중요 쟁점 중 하나인 청사의 위치를 정하는 문제는 국가사무가 아니라 지방자치사무라는 사실은 상식에 속하는 문제라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TV토론을 하고 여론조사도 했던 것이다.

안홍준 의원의 주장대로 이미 통합청사의 위치를 마산으로 정했다면 무슨 이유로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정치적 쇼를 했으며 무슨 이유로 수억의 예산을 낭비하며 통합청사 위치선정 용역을 하는지 되묻고 싶다. 통합청사의 위치를 선정하는 문제는 고도의 정치적 문제가 아니라 순수한 지방자치 사무기 때문에 “경상남도 창원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 어디를 살펴도 통합시 명칭은 법률로 규정했지만 통합시 청사의 위치는 언급도 하지 않은 것이다. 국회의원은 국가사무를 관장하는 국법을 제정하는 입법기관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위치까지 국회의원이 정치적으로 간여하고 규정할 어떤 법적 근거도 없다.

안회장은 통합을 추진할 때 ‘통합의 주체는 주민’ 이라고 주장한 바 있지만 3개시 의회는 통합을 의결했다는 이유를 들어 주민대표인 시의원을 무시했기 때문에 시민에 대한 우롱이라는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는 모순된 논리로 지방의회를 부정하고 있다. 내가 아는 상식으로는 지자체 통합은 반드시 주민투표를 거치거나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법률적 근거 때문에 정부에서는 시의회 의결을 거친 다음에 “경상남도 창

원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을 지난 2010년 3월 12일 제정 공포하여 지자체 통합의 합법적 근거를 마련했던 것이다. 당 시 이달곤 행자부장관은 시의회 의견청취 과정이라고 변명을 한 사실을 나는 기억한다.

내가 안타까운 사실은 오회장은 마지막 결론에서도 ‘이제 통합을 결정한 이상 마.창.진의 균형발전을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마산출신 야당시의원들의 "통합청사 선정 진실규명을 위한 창원시의원 대책위원회" 참여를 나무라는 지독한 지역이기주의인 자신의 속내를 숨기지 못하는 모순된 글을 써서 창원시민들을 헷갈리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이다.

나는 오히려 공천권을 무기로 국회의원의 직권을 남용해서 지방자치사무인 통합청사 선정문제까지 좌지우지 하려는 국회의원은 사퇴해야 한다. 는 생각이다. 창원시의회 한나라당 의원들은 각성하라. 그리고 모두 "통합청사 선정 진실규명을 위한 창원시의원 대책위원회"에 참여하라.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이 지방자치사무를 가지고 서로 다투는 일은 양립할 수 없는 모순이다. 국회의원의 직권남용이 안홍준 의원의 정계은퇴를 요구하는 가장 큰 이유다.

# 03

수토양민(守土養民)정신



## 시장님, 시장님 우리시장님.

고려와 조선시대 한 고을을 맡아 다스리는 지방관의 총칭인 수령(守令)은 군수와 현감을 합한 말이다. 수는 '수토양민'(守土養民), 영은 '명령을 받들어 시행한다.'는 뜻이라고 해석한다. 속칭 원님이라고도 한다. 조선시대에 편찬된 지방 수령의 실무지침서인 목민고(牧民考)의 거관대요(居官大要)에는 수령을 제수 받아 부임하기까지의 수령의 마음가짐과 자세, 향리들을 택하여 다스리는 법 등을 설명하고 있다. 지방관이 임지에 부임하기 전후에 취해야 할 행동을 설명하고, 수령칠사(守令七事)를 덧붙인 것이어서 목민적(牧民的) 성격이 강한 지침들로 되어 있다.

최근 경상남도 각 지방자치단체 원님들의 이야기가 매스컴을 타면서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18일 밀양에 사는 윤상진(39·밀양시 부북면)씨는 창원지검 밀양지청에 엄용수 밀양시장을 폭행죄로 고발했다. 는 보도다. 시민이 시장을 폭행죄로 고발하는 일도 드문 일이지만 "야 임마, 이 ××가 돌았나? 이 ××가, 야 임마, 정신 있나 없나 임마, 이 ××가요, 내가 때렸다 임마, 와?"하는 욕까지 했다는 시장의 욕설이 녹음된 밀양시장의 폭언이 공개되면서 일파만파로 파장을 일으키며 국민적 관심을 모으고 있다.

"밀양시는 신공항 유치를 위해 대다수 시민들의 절대적인 찬성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밀양농업보존연구회'의 공동대표인 윤 씨가 밀양역 앞에서 동남권 신공항 유치를 반대하는 전단을 돌리다 시장에게 폭언과 폭행을 당했다는 어처구니없는 이야기다. 민주 사회에서 시민들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자유는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기본 권리다. 국민의 기본권은 고사하고 한 고을의 수장인 시장이 시민에게 욕을 하고 폭행을 한다는 사실은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몰 상식한 일이다. 그러나 그런 시장을 비호한다고 4주째 턱관절 장애로 병원치료를 받는 사람을 "폭행·폭언 논란은 당시 유인물을 뺀 과정에서 스친 것일 뿐, 이를 두고 폭행이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다"고 주장하는 밀양시 관계자의 말이 국민들을 더 화나게 한다.

그런가 하면 권민호 거제시장은 시장실을 민원실 옆으로 옮기겠다고 밝힌 일이 화제가 되어 경상남도 지자체 원님이 또 한 번 전국적 주목을 받고 있다. 거제시는 지난 인사와 함께 거제시청 2층 시장실 맞은편에 있던 국장실을 없애고 폐쇄된 국장실은 민원인 대기실과 대민상담실, 소회의실로 활용을 하고 있다는 보도다. 권 시장은 "시장이 민원인을 격의 없이 만나야 한다." 며 시장집무실을 이동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는 소식은 자신의 의사에 반하는 의사표시를 한다고 시민을 폭행하는 엄용수 밀양시장과는 너무나 대조적이다.

그뿐이 아니다. 박완수 창원시장은 시장면담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면담을 거절하고 실, 국장들이 만나서 해결하라는 명령을 하면서 시민들의 면담요청을 아예 무시해 버린다. 그러자 창원시장실 앞은 연일 민원인들의 항의가 빗발치자 소음측정기까지 동원을 했다는 기사를 보았다. 창원시청 2층에 있는 시장실에는 민원인 항의 방문이 끊이지 않는다. 고 한다. 민원인 항의 방문이 있으면 청원경찰이 동원돼 시장실 입구에 서서 출입을 막는다. 이 때문에 때로는 고성과 몸싸움이 이어지기도 하고 그러면 창원시는 경우에 따라 기계를 동원한 소음 측정까지 진행하고 있어 과잉 대응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소음을 빌미로 민원인

에게 법적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는 뜻으로 비칠 수 있는 대목이다.

창원시는 매월 1회 분야별 다양한 전문가와 시민을 모시고 시장과 부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시정경연회의를 개최한다. 미래일류도시 창원건설을 위한 시정의 개선과제와 가감 없는 비판, 분야별 다양한 아이디어를 폭넓게 수렴, 시정에 반영한다는 시정경연회의이다. 그런데 그 시정경연회의도 시장이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나는 모양이다. 내가 속한 진해 시민단체는 사무국장과 내가 차례로 시정경연회의에 초청을 하겠다는 연락은 받았지만 아무런 이유나 설명도 없이 창원시장이 참석하는 시정경연회의에 참석을 거절당하고 말았다. 시장님, 시장님 우리 시장님하고 시장님 비위나 맞추려는 이야기나 들으려는 시정경연회의는 무슨 의미가 있는지 궁금하다.

이쯤 되면 권민호 거제시장이 시장실을 열린공간으로 만들겠다며 민원실 옆으로 옮기겠다고 밝힌 일이 전국적 화제가 되는 이유를 알만하다. 과거 우리 선조들은 한 고을의 수령이 지켜야 할 7가지 임무인 수령칠사(守令七事)를 만들었다. 수령의 임무와 평가방식을 규정하여 수령의 역할을 강화하고 수령의 업무수행에 대한 국가의 관리기능을 확대했던 수령칠사는 수령의 막강한 권력보다는 백성을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을 일곱가지 조목으로 명시한 것이다. 한 고을을 맡아 다스리는 수령(守令)은 '수토양민'(守土養民)의 정신을 우선해야 할 것이다.

---

## '한남일보' 제호를 되찾았습니다

'경남매일'의 인쇄에 감사드립니다.

'한남일보'가 '한남일보'로 제호를 되찾았습니다. '한남일보'의 이름을 지니고 있는 것은 '한남일보'가 '한남일보'로 제호를 되찾았습니다. '한남일보'가 '한남일보'로 제호를 되찾았습니다.

다. '한남일보'의 제호를 되찾았습니다. '한남일보'가 '한남일보'로 제호를 되찾았습니다. '한남일보'가 '한남일보'로 제호를 되찾았습니다.

한해 도덕적 기준을 지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한남일보'는 독자들과 동행하는 언론의 도덕적 기준을 지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커뮤니케이션  
거제 노년대

3면 사회

## 가자 모집

'한남일보'가 열정을 가진 기자를 뽑습니다

모집직종

주제기자, 일반기자, 편집기자

○영

제출서류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주민등록등본

원시접수기간

2011년 3월 15일까지

본사 총무부 (055-632-0138)

보내실곳: 경남 거제시 고현동 972-2

메일주소: hannamilbo@hannamilbo.com

055-632-4131

010-8542-4131

나라문구센터

055-632-4131

010-8542-4131

# 한남일보

2011년 3월 2일 수요일

hannamilbo.com

제 390 호 1판 대표전화 (055)632-0138

## 이준모 칼럼

## 수토양민(守土養民) 정신



이 준 모

진해시민포럼 집행위원장  
객원칼럼니스트

고려와 조선시대 한 고을을 맡아 다스리는 지방관의 총칭인 수령(守令)은 군수와 현감을 합한 말이다.

수는 '수토양민(守土養民)', 영은 '명령을 받들어 시행한다.'는 뜻이라고 해석한다. 축칭 원님이라고도 한다. 조선시대에 편찬된 지방 수령의 실무지침서인 목민고(牧民考)의 거관대요(居官大要)에는 수령을 제수 받아 부임하기까지의 수령의 마을가집과 자세, 향리들을 태하러 다스리는 법 등을 설명하고 있다. 지방관이 임지에 부임하기 전후에 취해야 할 행동을 설명하고, 수령칠사(守令七事)를 덧붙인 것이어서 목민적(牧民的) 성격이 강한 지침들로 되어 있다.

최근 경상남도 각 지방자치단체 원님들의 이야기가 매스컴을 타면서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18일 밀양에 사는 윤상진(39·밀

양시 북북면)씨는 창원지검 밀양지청에 업무수 밀양시장을 폭행죄로 고발했다.는 보도다. 시민이 시장을 폭행죄로 고발하는 일도 드문 일이지만 '아 임마, 이 ××가 똥냐? 이 ××가, 아 임마. 정신 있나 없나 임마, 이 ××가야, 내가 때렸다 임마, 와?'하는 욕까지 했다는 시장의 욕설이 녹음된 밀양시장의 폭언이 공개되면서 일파만파로 파장을 일으키며 국민적 관심을 모으고 있다.

"밀양시는 신공항 유치를 위해 대다수 시민들의 절대적인 찬성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밀양농업보존연구회'의 공동대표인 윤 씨가 밀양역 앞에서 농민권 신공항 유치를 반대하는 전단을 돌리다 시장에게 폭언과 폭행을 당했다는 어처구니없는 이야기다.

민중 사회에서 시민들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자유는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기본 권리다. 국민의 기본권은 고사하고 한 고을의 수장인 시장이 시민에게 욕을 하고 폭행을 한다는 사실은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몰상식한 일이다.

그러나 그런 고을 원님을 비호한다고 4주 째 탄관절 장애로 병원치료를 받는 사람을 "폭행·폭언 논란은 당시 유인물을 찢는 과정에서 생긴 것일 뿐, 이를 두고 폭행이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다"고 주장하는 밀양시 관계자의 말이 국민들을 더 화나게 한다.

그런가 하면 권민호 거제시장은 시장

실을 민원실 옆으로 옮기겠다고 밝힌 일이 화제가 되어 전국적 주목을 받고 있다.

거제시는 지난 인사와 함께 거제시청 2층 시장실 맞은편에 있던 국장실을 없애고 폐쇄된 국장실은 민원인 대기실과 대민상담실, 소회의실로 활용을 하고 있다는 보도다. 권 시장은 "시장이 민원인을 격의 없이 만나야 한다."며 "시장집무실을 이동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는 소식은 자신의 의사에 반하는 의사표시를 한다고 시민을 폭행하는 업무수 밀양시장과는 너무나 대조적이다.

그뿐이 아니다. 박원수 창원시장은 시장면담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면담을 거절하고 싶, 국장들이 만나서 해결하라는 명령을 하면서 시민들의 면담요청을 아예 무시해 버린다. 그러자 창원시장실 앞은 연일 민원인들의 항의가 빗발치자 소음측정기까지 동원을 했다는 기사를 보았다.

창원시청 2층에 있는 시장실에는 민원인 항의의 방문이 붙이지 않는다고 한다. 민원인 항의의 방문이 있으면 청원경찰이 동원돼 시장실 입구에 서서 출입을 막는다. 이 때문에 때로는 고성과 물싸움이 이어지기도 하고 그러면 창원시는 경우에 따라 기계를 동원한 소음 측정까지 진행하고 있어 과잉 대응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소음을 빌미로 민원인에게 법적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는 뜻으로 비

칠 수 있는 대목이다.

창원시는 매일 1회 분야별 다양한 전문가와 시민을 모시고 시장과 부시장이 참석하는 가운데 시장경영회의를 개최한다. 미래일류도시 창원건설을 위한 시장의 개선과제와 가장 없는 비판, 분야별 다양한 아이디어를 폭넓게 수렴, 시장에 반영한다는 시장경영회의다.

그런데 그 시장경영회의도 시장이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나는 모양이다. 내가 속한 진해 시민단체는 사무국장과 내가 차례로 시장경영회의에 초청을 하겠다는 연락은 받았지만 아무런 이유나 설명도 없이 창원시장이 참석하는 시장경영회의에 참석을 거절당하고 말았다. 시장님, 시장님 우리 시장님하고 시장님 비위나 맞추려는 이야기나 들으려는 시장경영회의는 무슨 의미가 있는지 궁금하다.

권민호 거제시장이 시장실을 열린공간으로 만들겠다고 민원실 옆으로 옮기겠다고 밝힌 일이 화제가 오르자 선조들이 수령이 지켜야 할 7가지 임무인 수령칠사(守令七事)를 만들었던 일이 생각난다.

수령의 임무와 평가방식을 규정하여 수령의 역할을 강화하고 수령의 업무수행에 대한 국가의 관리기능을 확대했던 수령칠사는 수령의 막강한 권력보다는 백성을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을 일곱가지 조목으로 명시한 것이다. 한 고을을 맡아 다스리는 수령(守令)은 '수토양민(守土養民)'의 정신을 우선해야 할 것이다.

## 거제 '열린 시장실' 실현

## 집무실 1층 민원실 이전

2011년 03월 07일 (월) 19:29:26

김대홍 기자 kdh@hannamilbo.com

거제시는 7일 "시민들에게 새로운 행정서비스 실현을 위해 청사 2층 시장 집무실을 1층의 종합민원실로 이전하게 됐다."고 밝혔다.

권민호 거제시장은 시 청사 2층의 시장 집무실을 1층 종합민원실로 옮겨 7일부터 집무를 시작했다. 이는 5명의 국·소장을 직원들의 사무현장인 부서 사무실로 이전시킨 사례와 마찬가지로 밀실과 폐쇄적인 이미지의 간부공무원 사무실을 개방형으로 바꾼 것과 같이 시장 집무실도 개방형 집무실로 전환한 것이다.

실제로 권 시장의 1층 집무실은 40㎡의 좁은 공간에 책상과 5~6명이 같이 앉을 수 있는 원탁형 접견 공간에 부속실 직원 2명이 함께 근무하는 완전히 개방된 열린 시장실이다.

2층의 기존 시장 집무실은 세미나실로 개조돼 직원들의 연구동아리 활동 및 시민들의 사랑방 역할을 하게된다. 또 시청 민원실을 찾아온 민원인이라면 누구라도 시장의 집무현장을 직접 볼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시장 집무실의 개방은 전국 최초로 시행함에 따라 전례가 없는 일로 부시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들이 여러 차례 만류했다"며 "그러나 시민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고 싶은 시장의 뜻을 꺾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편 통상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집무실은 대표성과 상징성 때문에 2층에 자리 잡고 있다.

# 04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말한다.

02.26  
2011

##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말한다.

『지방자칭의 허와 실(虛와 實)』 책을 발간하면서

/이춘모 (진해시민포럼집행위원장)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말한다."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말한다." 지난 2008년 11월 28일 진해시청 브리핑 룸에서 내가 단독 기자회견을 하면서 하던 말이다.

그저 평범하게 시장골목에서 장사나 하면서 살아오던 한 시민이 참을 수 없는 분노를 전하려고 진해시청 브리핑 룸까지 찾아간 사연을 이야기 하려고 한 권의 책을 펴낸다. 시민운동이나 사회개혁과 같은 일에 전혀 관심도 없이 65년 간 세상을 살아오던 나는 어느 날 진해중앙시장 입구에 진해시청에서 차양 막 공사를 해 준다는 소식을 반갑게 맞이한다.

그러나 3년이 넘게 진행되는 관급공사는 어떤 원칙과 상식도 없이 5억이 넘는 공공기관의 공사가 수의계약으로 진행하게 된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특수공법을 빙자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한 공사업자는 3년이라는 공사추진 기간에 자제 값 인상을 핑계로 1억6천만 원의 공사선수금만 챙기고 공사포기를 선언하지만 진해시장은 공사업자를 고발은커녕 병어리 냉가슴만 앓는다. 공사업자가 계약금 1억6천만 원만 챙기고 포기한 공사는 그 공사업자가 보낸 대리인과 다시 수의계약으로 진행하게 되면서 공공건물인 시장입구 차양 막 공사가 엉터리 날림공사로 진행되는 어떤 원칙도 없고 상식조차 없는 모습에 주민들은 분노한다.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 원칙과 상식이 무너진 사회적 병폐에 분노 한다. 원칙과 상식에는 보수와 진보가 없다. 높고 낮음, 옛것과 요즘 것 차이도 없다. 원칙과 상식이 지닌 힘이다. 이와 같은 원칙과 상식의 힘만 믿고 걱정 없이 시작한 사회적 병폐에 항거하는 나의 외로운 항해는 시작되었다. 주위의 만류와 무관심속에 오늘도 상식 없는 세상에 항의하는 나의 외로운 항해는 계속될 것이다. 누구나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살핀다면 주민들이 선출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에 의해서 주민들의 의사에 따라 지방자치를 한다는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허상을 정확하게 볼 수 있다.

나는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96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제정·공포하고, ‘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정보공개시스템 정도라도 국민들이 알고 활용하기를 바라는 생각에서 이 책을 편다.

대한민국 헌법 제26조가 보장하는 국민청원권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촉구하는 생각으로 이 책을 만들겠다는 결심을 했다.

불과 3년 전에는 나도 전혀 관심조차 없던 정보공개시스템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고 있는지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을 법률로 보장하는 제도다.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함으로써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국정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적극적 국민 참여 제도인 것이다. 나는 국민이 원하고 청하는 것을 관청에 청하는 것이 청원이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청원서를 만들었던 기억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국민청원권은 대한민국 헌법 제26조가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이며 국민의 막강한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수단이다.

나는 이 책을 읽는 국민 각자가 국가에서 운영하는 정보공개시스템의 올바른 이해와 친숙한 활용을 기대한다. 대의민주주의에서 자칫 소홀하기 쉬운 국민직접 참여수단인 국민청원제도에 국민 각자의 관심과 적극참여를 기대한다. 국민 누구나 정보공개시스템과 국민청원 제도를 이해하면 우리나라 지방자치 20년의 허상과 실상을 명확하게 볼 수 있다. 그리고 참여정부에서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내고 기초 자치단체인 광주광역시 서구 시의원에 출마해서 당선된 이병완 의원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5년 내내 지방행정의 혁신을 외치고, 분권과 자율의 가치를 그렇게 강조했건만, 왜 일반 국민들은 행정의 변화를 체감할 수 없었는지 이제야 조금 감이 잡혔다는 이야기를 한다. 그리고 '바보'가 아닌 이상 한번 자치단체장이 되면 3선(選)은 떴을 때 놓은 당상이라는 그의 결론이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허상과 실상이다. (2011년3월 3주에 출판기념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 05

창원시의회 한나라당 의원들은 각성하라.



지난 2월 24일자 경남도민일보 발언대에 천진수 전 도의원이 쓴 "국회의원 하수인으로 전락한 단체장과 지방의원"이라는 글에 공감하는 부분이 많다. 대부분 공천에 사활을 걸어야 하는 도,시의원은 제사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젓밥에만 눈독을 드린다는 이야기는 아마 누구나 동의하는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현실이다.

나는 진해, 마산 창원을 통합하자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 진해시의원 13명에게 내용증명 우편물을 발송해서 시의원 10명에게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은 반드시 주민투표로 결정해야 된다는 다짐을 받았던 일이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 시의원들은 내용증명 우편물을 통해서 철석같이 다짐했던 사실을 국회의원 말 한 마디에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어떤 설명이나 변명도 없이 번복을 한 것이다.

김학송 국회의원의 설명으로는 자신이 같은 당 시의원들에게 단지 지자체를 통합하면 이러이런 좋은 점이 있다는 설명을 했을 뿐이지 절대로 강요한 사실이 없다고 하지만 그 말을 누가 고지곳데로 믿을지는 의문이다. 더구나 당시 같은 한나라당출신의 시의회 부의장은 국회의원의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100% 재선이 보장되는 한나라당의 탈당까지 선언한 사실을 보더라도 김학송 국회의원의 설명보다는 천진수 전 도의원의 이야기가 더욱 실감나고 신뢰가 가는 이야기다.

영남에서 공천은 당선이라는 한나라당 도의원을 지낸 전직 의원의 이야기니 더욱 "국회의원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단체장과 지방의원"의 이야기에 공감하고 신뢰를 하는 것이다. 어디 그뿐이라 이번에는 안홍준 국회의원이 진해, 마산, 창원을 통합하는 지자체 통합 과정에서 "통합추진 할 때 명칭은 창원, 청사는 마산에 오는 것으로 이미 주요 정치적 당사자들끼리도 이야기가 된 사안이다."는 중요한 발언을 했다.

그러나 창원시의회 한나라당 시의원들은 모두가 꿀 먹은 벙어리인 모양이다. 안홍준 의원의 이야기는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이 제반 정황을 살펴보면 누구나 짐작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이야기가 분명하다. 그리고 안홍준 의원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는 중대한 지방자치권의 침해로 정당이나 정파적 차원을 떠나서 지방의원들이 적극 나서서 대응해야할 사안인 것이다.

지방의회는 주민이 선출한 주민의 정치적 대표자들인 지방의원으로 구성된다. 아무리 지방자치의 가장 큰 폐단인 정당공천제가 문제라고 하지만 지방의원을 선출하는 최종적 결정권자는 주민이다. 지난 6.2지방선거에서 지역 국회의원의 압력으로 자신의 소신을 번복했던 후보자들을 여지없이 낙선시킨 성숙한 진해지역 주민들의 현명한 판단은 신선한 충격이었다. 독립된 의결기관인 지방의원들에게 주어진 지역에 대한 의결권, 행정감시권, 자율권, 선거권, 청원처리권, 의결표명권, 보고 및 자료요구권은 누구도 간섭할 수 없는 주민이 선출해서 위임한 지방의원의 대표권이다.

그러나 지방자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인 안홍준 의원의 발언에 창원시의회에서 구성한 "통합청사 선정 진실규명을 위한 창원시의원 대책위원회"에 창원시의회 한나라당 의원들이 한 명도 참여하지 않았다. 지방자치권을 침해하는 중요한 사안에 마치 꿀 먹은 벙어리 같이 어떤 의사표시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공천권을 무기로 하는 국회의원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것이 분명하다. 창원시의회 한나라당 의원들은 각성하라. 그리고 108만 창원시민들이 똑똑하게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도 명심해야 할 것이다.

# 06

오늘도 나는 창원시의원들에게 메일을 발송했다.

02.14  
2011

## 오늘도 나는 창원시의원들에게 메일을 발송했다.

존경하는 창원시의회 한나라당의원님들께 드립니다.

오늘 눈이 많이 내립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특별히 눈 오는 날 이동을 하실 일이 있으면 미끄러운 길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는 일이지만 지난번 한나라당 도당위원장이신 안홍준 의원께서 지역 일간신문 편집국장과의 나눈  
신년 대담에서 아주 중요하고 의미있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해, 마산, 창원을 통합하는 지자체 통합 과정에서 "통합추진 할 때 명칭은 창원, 청사는 마산에 오는 것  
으로 이미 주요 정치적 당사자들끼리도 이야기가 된 사안이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실제로 박완수 창원시장은 통합 창원시 청사위치 선정을 위한 용역기간을 20개월이나 걸린다는 이야기  
를 하면서 현 창원시청 리모델링 안을 포함하여 용역 발주를 한다고 합니다.

더욱 의아스러운 사실은 마산 운동장과 함께 통합청사 제1순위에 포함된 진해 구, 육대부지는 군인들이  
다 떠나고 비어있지만 사유지로 확보하기 위한 금년도 예산편성조차 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여러가지 정황들을 보아 안홍준 의원의 발언은 지역에서는 제일 비중있는 정치인인 한나라당 경남  
도당위원장이라는 사실과 현재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련의 사례들을 종합 해볼 때 매우 신뢰할 수  
있는 발언이라는 판단을 합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이 문제는 창원시 의회 차원에서 그 진상을 분명하게 밝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특정 정당의 당리당략(黨利黨略)에 얽매이거나 공천권이라는 보이지 않는 권력이 두려워서  
지방의원의 본분을 다 하지 못한다면 지역 주민들의 강력한 저항을 면치 못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창원시의회 한나라당 의원님 여러분.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얼마 전 창원시의회에서 결성한 "통합청사 선정 진실규명을 위한 창원  
시

의원 대책위원회"에 유감스럽게도 한나라당 시의원은 한 분도 없다는 사실에 창원시민들은 실망과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지방의원이 지방자치제도 자체를 부인하는 정치권에 항의하고 바로잡지 못한다면 지방의원의 본분을 다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기본 직분인 지방자치제도를 지키는 일을 다 하지 못하면서 국민들의 세금으로 세비를 받는다면 자신에게 주어진 일이나 하는 봉급생활자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정치는 살아있는 생물입니다.

언제 어떻게 그 분노를 표출할지 모르는 것이 국민감정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통합청사 선정 진실규명을

위한 창원시의원 대책위원회"에 창원시의회 한나라당 의원님들이 전원 동참 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요청합니다.

2011년 2월 14일

진해시민포럼 집행위원장/ 이춘모 올림

# 07

'안홍준 발언' 핵심은 '정치적 당사자' 밝혀질 일

## '안홍준 발언' 핵심은 '정치적 당사자' 밝힐 일

경남도민일보 2월 11일자 3,15광장 발언대에 (사)경남수렵협회 오수진 회장의 「'창원시 청사' 안홍준 의원 발언 적절했다.」는 사안의 핵심을 짚아난 글이다.

어떤 사물이나 사실을 실제와 다르게 지각하거나 생각하는 현상을 착각(錯覺)이라고 한다. 어쩌면 오수진 회장이 착각을 해도 한 참 착각을 했다는 생각이다. 지금 진해 시민단체나 창원시의회 의원들이 안홍준 의원의 발언이 적절했느냐 아니냐 하는 문제를 따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오수진 회장은 자신의 글에서 지자체통합을 추진하는 과정을 설명하면서 "그러므로 진해는 17만 시민의 기득권을 포기했지만 마산은 43만 시민의 기득권을 포기한 것이다. 따라서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진해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의식해서 시청사 위치에 대한 이면합의가 있었다는 주장이 설득력 있다."고 주장을 한다.

우리는 안홍준 의원의 발언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설득력이 있고 책임 있는 정치인의 발언이기 때문에 심각하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 그리고 안홍준 의원의 발언은 시민운동가 출신 정치인으로 한 치의 부끄럼도 없는 양심고백 같은 진실이라는 사실도 의심의 여지가 없다는 생각이다.

오히려 "통합추진 할 때 명칭은 창원, 청사는 마산에 오는 것으로 이미 주요 정치적 당사자들끼리도 이야기가 된 사안이다."는 안홍준 의원의 발언으로 미루어 유추할 수 있는 정치적 당사자들이 사실관계를 부인하고 거짓말하는 것을 문제 삼는 것이다. 안홍준 의원의 양심고백 같은 발언이 아니었다면 그야말로 이 문제는 '정치적 당사자들'끼리 이면합의 한 밀실야합으로 끝나고 말았을지 모르는 중대한 사안이다.

지방 자치(地方自治)는 민주주의와 지방 분권을 기반으로 하는 행정 형태로, 일정한 지역을 기초로 하는 단체나 일정한 지역의 주민 자신이 선출한 기관을 통해서 그 지방의 행정을 처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지방 자치의 가장 중대한 사안인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에 관한 문제를 주민투표도 없이 지방의회의 의결로 추진한 문제부터 진해, 마산, 창원을 통합한 지자체 통합은 지방자치의 기본이 무시된 잘못된 통합이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은 물론 지방의원도 국민들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서 선출하는 선출직 정치인들이다. 대의민주주의는 각기 다른 권한과 의무를 부여한 대표들을 선출하기 마련이다. 국가의 최고 통치자인 대통령이라도 지자체가 자율통합하는 진해, 마산, 창원 통합에 관여하고 지자체 통합청사의 위치나 통합 시 이름을 임의로 결정 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이와 같은 이유로 진해, 마산, 창원 시민들이 선출한 국회의원들도 시민들로 부터 위임받은 국회의원들이 할 일과 권한이 있기 마련이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인 시장이 할 일이 다르고 지방의원들이 할 일과 권한이 따로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시장도 선출하고 시의원도 선출하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이나 통합시의 이름 또는 청사의 위치 같은 문제를 결정하는 것은 지방의회와 주민들의 고유권한인 것이다. '주요 정치적 당사자들끼리' 이야기하고 결정할 문제가 전혀 아니고 근거 없다는 판단이다.

이제 우리는 안홍준 의원은 자신이 한 말에 책임을 지고 '주요 정치적 당사자들'이 누구인지 분명히 밝히라고 요구한다. 그리고 '주요 정치적 당사자들'이 주민들로 부터 위임받은 사실이 없는 권한을 국회의원이라는 직권을 남용해서 권한 없는 권한을 행사했다면 당연히 직권남용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도 마땅하다.

또한 지자체 통합과정에서 "중요 정치적 당사자들"이 진해, 마산, 창원시민들을 속이고 밀실야합을 하면서 그 사실을 철저히 숨긴 채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TV토론을 하고, 여론조사를 하는 등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주민들을 속이려는 의사가 분명했다면 "중요한 정치적 당사자들"에게 정치적 책임뿐 아니라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죄목의 성립 여부도 심각하게 고민하고 따져볼 문제다.

우리는 안홍준 의원의 발언이 적절했고 진실이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정치적 당사자들'을 분명하게 밝혀 달라고 요구한다. 그리고 집권 여당인 한나라당 경남도당위원장답게 자신의 말에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한다.

-----  
-



## 3·15 광장

주소 : (우)630-811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2동 151-25 경남도민일보 논설여론부  
전화 : 055-250-0138 ~ 40 팩스 : 055-250-0180 ~ 81  
전자우편 : sori@idomain.com 누리집 : www.idomain.com(독자투고)

본란은 본사의 편집방침과 관계없이  
어떤 의견도 펼칠 수 있는 활짝 열린 마당입니다.

### 발언대

## ‘안홍준 발언’ 핵심은 ‘정치적 당사자’ 밝힐 일



이 춘 모

진해시민포럼 집행위원장

경남도민일보 2월 11일자 3·15광장 발언대에 (사)경남수렴협회 오수진 회장의 <‘창원시 청사’ 안홍준 의원 발언 적절했다>는 사안의 핵심을 벗어난 글이다. 어떤 사물이나 사실을 실제와 다르게 지각하거나 생각하는 현상을 착각(錯覺)이라고 한다. 어쩌면 오수진 회장이 착각을 해도 한참 착각을 했다는 생각이다. 지금 진해 시민단체나 창원시의회의 의원들이 안홍준 의원의 발언이 적절했느냐 아니냐 하는 문제를 따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오수진 회장은 자신의 글에서 지자체통합을 추진하는 과정을 설명하면서 “그러므로 진해는 17만 시민의 기득권을 포기했지만 마산은 43만 시민의 기득권을 포기한 것이다. 따라서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진해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의식해서 시청사 위치에 대한 이면합의가 있었다는 주장이 설득력 있다”고 주장을 한다.

우리는 안홍준 의원의 발언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설득력이 있고 책임 있는 정치인의 발언이기 때문에 심각하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 그리고 안홍준 의원의

발언은 시민운동가 출신 정치인으로 한 치의 부끄럼도 없는 양심고백 같은 진실이라는 점도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통합추진할 때 명칭은 창원, 청사는 마산에 오는 것으로 이미 주요 정치적 당사자들끼리도 이야기가 된 사안이다”는 안홍준 의원의 발언으로 마무리 유추할 수 있는 정치적 당사자들이 사실관계를 부인하고 거짓말하는 것을 문제 삼는 것이다. 안홍준 의원의 양심고백 같은 발언이 아니었다면 그야말로 이 문제는 ‘정치적 당사자들’끼리의 밀실아합으로 끝나고 말았을 지 모르는 중대한 사안이다.

지방자치의 가장 중대한 사안인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에 관한 문제를 주민투표도 없이 일방적으로 지방의회 의결로 추진한 문제부터 진해·마산·창원을 통합한 지자체 통합은 지방자치의 기본이 무시된 잘못된 통합이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은 물론 지방의원도 국민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서 선출하는 선출직 정치인들이다. 대의민주주의는 각기 다른 권한과 의무를 부여한 대표들을 선출하기 마련이다. 국가의 최고 통치자인 대통령이라도 지자체가 자율통합을 하는 진해·마산·창원의 통합에 관여하고 지자체 통합청사의 위치나 통합 시 이름을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이와 같은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이나 통합시의 이름

또는 청사의 위치 같은 문제를 결정하는 것은 지방의회와 주민들의 고유권한이다. ‘주요 정치적 당사자들끼리’ 이야기하고 결정할 문제가 전혀 아니고 근거 없다는 판단이다.

이제 우리는 안홍준 의원은 자신이 한 말에 책임을 지고 ‘주요 정치적 당사자들’이 누구인지 분명히 밝히라고 요구한다. 그리고 ‘주요 정치적 당사자들’이 주민들로부터 위임받은 사실이 없는 권한을 국회의원이거나 직권을 남용해서 권한 없는 권한을 행사했다면 당연히 직권남용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도 마땅하다.

또한 지자체 통합과정에서 ‘중요 정치적 당사자들’이 진해·마산·창원시민들을 속이고 밀실아합을 하면서 그 사실을 철저히 숨긴 채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TV토론을 하고, 여론조사를 하는 등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주민들을 속이려는 의사가 분명했다면 ‘주요한 정치적 당사자들’에게 정치적 책임뿐 아니라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죄목의 성립 여부도 심각하게 고민하고 따져볼 문제다.

우리는 안홍준 의원의 발언이 적절했고 진실이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정치적 당사자들’을 분명하게 밝혀 달라고 요구한다. 그리고 집권 여당인 한나라당 경남도당 위원장답게 자신의 말에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한다.

# 08

지방자치의 허와 실(虛와實)

## 지방자치의 허와 실(虛와 實)

참여정부에서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내고 기초 자치단체인 광주광역시 서구 시의원에 출마해서 당선된 이병완 의원은 지난 해 12월 초에 자신의 정치적 동지인 안희정 충남지사에게 "단체장이 '3선' 못하면 바보"라는 한 통의 공개편지를 쓴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후일담으로 쓴 편지에는 기초 자치단체 의원으로서 첫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며 남은 느낌이 혼자 간직하기에는 돌이켜 볼 일이 적지 않아서 신문지상을 통해서 공개편지를 쓴다는 내용이다.

이병완 의원은 참여정부 5년 동안 지방자치행정과 관련해 반성할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었다고 하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5년 내내 지방행정의 혁신을 외치고, 분권과 자율의 가치를 그렇게 강조했건만, 왜 일반 국민들은 행정의 변화를 체감할 수 없었는지 이제야 조금 감이 잡혔다는 이야기도 한다. 또한 그는 1주일 정도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얻은 첫 번째 결론은 '바보'가 아닌 이상 한번 자치단체장이 되면 3선(選)은 때 놓은 당상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지역의 수십 개 단체가 지자체의 보조와 출연 등 예산지원으로 그물망처럼 얽혀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장은 산하공무원들의 승진, 보직을 좌지우지하면서 산하 공무원들이 사실상 사시사철 단체장의 선거원이 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다. 뇌물수수나 선거법 위반 등 범법으로 물러나지 않는 한 일단 자치단체장에 당선되면 3선, 적어도 재선은 불을 보듯 뻔한 구조라는 사실을 개탄하고 있다.

며칠 전에는 이숙정(35.여.민주노동당) 성남시원의 '주민센터 행패' 사건이 국민들의 집중적 관심을 끌면서 지방자치의 실체적 진실이 도마위에 오른 느낌이다. 국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이 민주정치的基本이라는 이야기까지 구태여 할 필요는 없다. 그렇다고 성남시의회 이숙정 의원이 자신의 이름을 모른다고 주민센터에서 신경질적 행패를 부린 사건을 변호할 생각도 없다. 그러나 이숙정 의원이 시의원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과시하려는 우발적인 단순사건으로 치부하기에도 왠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지방의원의 정당공천제로 인한 폐단으로 다수당의횡포는 물론 집행부의 집요한 냉대로 왕따를 당하는 분노를 호소하던 어느 소수야당 시의원의 하소연을 들은 기억 때문이다. 지방자치의 핵심인 지방정부와 지방의회 역할 분담은 중앙정부와 정당의 지나친 간섭으로 인하여 애초부터 구조적 모순을 가지고 태어난 불량품이다. 흔히 지방자치를 ‘풀뿌리 민주주의’ 라고 말한다. 민주주의의 바탕이라는 뜻으로 새겨들고 있다. 그러나 어원을 따지면 민주주의 발전과정에서 나타난 지역, 시민, 주민들의 소외와 배제에 대항하는 개념이 강하다.

민주주의가 대의(代議)민주주의 형태로 발달하면서 민주주의 역시 중앙집권적, 수도 중심, 국가전체 중심으로 흘러갔고, 정작 자기 고장, 자기 지역, 자기 동네의 문제는 도외시되는 경향을 띄어 왔다. 풀뿌리 민주주의(Grass-roots democracy)라는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한 연유도 이런 소외, 배제의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새로운 모색에서 비롯되었다. 그러나 나는 진해, 마산, 창원이 통합되는 지자체 통합과정에서 정작 자გი지역 자기 동네의 문제가 자신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진행되는 지방자치의 허상(虛像)을 똑똑히 목격한 경험이 있다.

지역의 문제인 지자체자율통합은 주민투표로 결정을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나는 진해시의원 13명에게 내용증명 우편물로 주민투표실시를 약속 받았지만 지역 국회의원의 개입으로 주민투표가 무산된 사실을 기억한다. 더욱 분명한 사실은 며칠 전 안홍준 의원이 실토한 지자체의 "통합을 추진할 때 명칭은 창원, 청사는 마산에 오는 것으로 이미 주요 정치적 당사자들끼리도 이야기가 된 사안이다." 는 이야기는 사실상 지방의회를 무시하고 지방자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방증(傍證)이다. 또한 지방의원의 정당공천제로 인한 지방자치의 대표적인 구조적 모순을 스스로 이야기 하는 것이다.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할 참여민주주의의 새로운 접근을 상징하는 지방자치인 풀뿌리민주주의는 정권 획득이 목적이 아니다. 지역주민들 또는 자기 고장, 자기 동네의 소소하지만 자기 생활에 소중한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주민들 스스로 참여해 자율적, 자치적으로 해결책을 찾자는 것이다. 이런 참여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출발인 지방자치제도는 정치적 행위임은 맞지만 권력쟁취의 정치가 아니라 생활변화의 정치라는 뜻이라면 주민들의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참여가 우선해야 한다.

그러나 지방자치의 기본인 지방의원과 자치단체장을 중앙집권적 정당공천제로 운영하는 구조적 모순은 공천권을 무기로 지방의원들을 농락하는 국회의원들의 막강한 권력의 그늘에 가려서 주민은 없고 정치만 있는 우리나라 지방자치 20년의 역사다. "단체장이 '3선' 못하면 바보"라는 말이 의미하는 "지방자치의 허와 실(虛와 實)"을 국민 모두가 다시 한 번 따져볼 일이다.

## 이준모 칼럼

## 지방자치의 허와 실(虛와 實)

참여정부에서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내고 기초 자치단체인 광주광역시 서구 시의회에 출마해서 당선된 이병완 의원은 지난 해 12월 초에 자신의 정치적 동지인 안희정 충남지사에 "단체장이 3선 못하면 바보"라는 한 통의 공개편지를 쓴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후 일답으로 쓴 편지에는 기초 자치단체 의원으로서 첫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며 남은 느낌에 혼자 간직하기에는 돌이켜 볼 일이 적지 않아서 신문지상을 통해서 공개편지를 쓴다는 내용이다.

이병완 의원은 참여정부 5년 동안 지방자치행정과 관련해 반성할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었다고 하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5년 내내 지방행정의 혁신을 외치고, 분권과 자율의 가치를 그렇게 강조했건만, 왜 일반 국민들은 행정의 변화를 체감할 수 없었는지 이제야 조금 감이 잡혔다는 이야기도 한다.

또한 그는 1주일 정도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얻은 첫 번째 결론은 '바보'가 아닌 이상 한번 자치단체장이 되면 3선(選)은 때 놓은 당상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지역의 수십 개 단체가 지자체의 보조와 출연 등 예산지원으로 그물망처럼 얽혀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장은 산하공무원들의 승진, 보직을 좌지우지하면서 산

하 공무원들이 사실상 사시사철 단체장의 선거원이 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다. 뇌물수수나 선거법 위반 등 범법으로 물러나지 않는 한 일단 자치단체장에 당선되면 3선, 적어도 재선은 불을 보듯 뻔한 구조라는 사실을 개탄하고 있다.

며칠 전에는 이숙정(35·여·민주노동당) 성남시의원의 '주민센터 행패' 사건이 국민들의 집중적 관심을 끌면서 지방자치의 실제적 진실이 도마위에 오른 느낌이다. 국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이 민주정치의 기본이라는 이야기까지 구태여 할 필요는 없다. 그렇다고 성남시의회 이숙정 의원이 자신의 이름을 모른다고 주민센터에서 신경질적 행패를 부린 사건을 변호할 생각도 없다.

그러나 이숙정 의원이 시의원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과시하려는 우발적인 단순사건으로 치부하기에도 왠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지방자치의 정당공천제로 인한 폐단으로 다수당의향은 물론 집행부의 집요한 반대로 원따를 당하는 분노를 호소하던 어느 소수야당 시의원의 하소연을 들은 기억 때문이다. 지방자치의 핵심인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역할 분담은 중앙정부와 정당의 지나친 간섭으로 인하여 애초부터 구조적 모순을 가지고 태어난 불량품이다.

흔히 지방자치를 '풀뿌리 민주주의'라

고 말한다. 민주주의의 바탕이라는 뜻으로 새겨두고 있다. 그러나 어원을 따지면 민주주의 발전과정에서 나타난 지역, 시민, 주민들의 소외와 배제에 대항하는 개념이 강하다.

민주주의가 대의(代議)민주주의 형태로 발달하면서 민주주의 역시 중앙집권적, 수도 중심, 국가전체 중심으로 흘러갔고, 정작 자기 고장, 자기 지역, 자기 동네의 문제는 도외시되는 경향을 띄어 왔다.

풀뿌리 민주주의(Grass-roots democracy)라는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한 연유도 이런 소외, 배제의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새로운 모색에서 비롯되었다.

그러나 나는 진해, 마산, 창원이 통합되는 지자체 통합과정에서 정작 자가지역 자기 동네의 문제가 자신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진행되는 지방자치의 허상(虛像)을 똑똑히 목격한 경험에 있다.

지역의 문제인 지자체자율통합은 주민투표로 결정을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나는 진해시의원 13명에게 내용증명 우편물로 주민투표실시를 약속 받았지만 지역 국회의원의 개입으로 주민투표가 무산된 사실을 기억한다. 더욱 분명한 사실은 며칠 전 안희정 의원이 실패한 지자체의 '통합을 추진할 때 명칭은 창원, 청사는 마산에 오는 것으로 이미 주요 정치적 당사자들끼리도 이야기가 된 사안이다.'는 이야기는 사실상 지방의회를 무시하

고 지방자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방증(傍證)이다.

또한 지방의회의 정당공천제로 인한 지방자치의 대표적인 구조적 모순을 스스로 이야기 하는 것이다.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할 참여민주주의의 새로운 접근을 상징하는 지방자치인 풀뿌리민주주의는 정권 획득이 목적이 아니다. 지역주민들 또는 자기 고장, 자기 동네의 소소하지만 자기 생활에 소중한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주민들 스스로 참여해 자율적, 자치적으로 해결책을 찾자는 것이다.

이런 참여민주주의의 기본적 출발인 지방자치제도는 정치적 행위임은 맞지만 권력쟁취의 정치가 아니라 생활변화의 정치라는 뜻이라면 주민들의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참여가 우선해야 한다.

그러나 지방자치의 기본인 지방의원과 자치단체장을 중앙집권적 정당공천제로 운영하는 구조적 모순은 공천권을 무기로 지방의원들을 농락하는 국회의원들의 막강한 권력의 그늘에 가려서 주민은 없고 정치만 있는 우리나라 지방자치 20년의 역사다.

"단체장이 3선 못하면 바보"라는 말이 의미하는 "지방자치의 허와 실(虛와 實)"을 국민 모두가 다시 한 번 따져볼 일이다.

이준모 · 진해시민포럼 집행위원장

# 09

존경하는 창원시의원님께 드립니다.



존경하는 창원시의원님께 드립니다.

국어사전에 조례[條例]는 지방 자치 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방 의회의 의결을 거쳐 그 지방의 사무에 관하여 제정하는 법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령(法令)이란 법률과 명령을 아울러 이르는 말로 법률(法律)은 국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서명하고 공포함으로써 성립하는 국법(國法)이며, 헌법의 다음 단계에 놓이며, 행정부의 명령이나 입법부와 사법부의 규칙 따위와 구별되어 **명령·규칙이 법률에 위반되면 법원에서 그 규칙이나 명령의 적용은 거부되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면 법원은 그 법률의 적용을 거부한다. 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창원시의회에서 지난 회기에 제정(개정)공포한 공공요금인상 조례는 지난 2010년 10월 1일 국회에서 제정 공포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3조(불이익배제의 원칙)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으로 인하여 종전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특정 지역의 행정상·재정상 이익이 상실되거나 그 지역 주민에게 새로운 부담이 추가되어서는 아니 된다.” 는 특별법에 명백히 반하는 조례라는 판단을 하면서 창원시의회의 재의(再議)를 요청 합니다

창원시에서는 상하수도 요금이나 쓰레기 종량제봉투는 「원인자부담 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는 논리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3조(불이익배제의 원칙)에 위반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창원시 스스로 창원□마산□진해시가 통합 창원시로 출범하게 되었으나 기존 지역별로 수도요금의 요율, 누진단계, 적용 업종 등이 크게 달라 이의 단일화가 대두되었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는 상하수도요금이나 종량제 쓰레기봉투 가격조정의 원인이 지자체 통합에 기인한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더욱 이해할 수 없는 논리는 상하수도 요금이나 종량제 쓰레기봉투는 지자체 구성원에게 일률적□정액방식으로 강제 부과되는 지방세와는 달리 수도요금은 각자가 소비하는 양에 비례해 생산의 소요비용의 부담을 지는 「원인자부담 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는 창원시의 주장입니다.

상하수도 요금이나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 강제 부과되는 지방세와는 다르다는 주장도 시민들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하수도요금이나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마치 강제하지 않는 것 같은 행정편의주의적인 법리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창원시민들이 창원시에서 생산하는 수도 물을 사용하지 않고 삼성이나 웅진코웨이에서 생산하는 수도 물도 사용할 수 있다면 가능한 논리고 쓰레기 종량제봉투도 창원시에서 생산 판매하는 봉투가 아니라 롯데마트나 이마트에서 생산하고 판매하는 쓰레기봉투를 사용할 수 있다면 가능한 논리(論理)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도 법이기 때문에 시민에게 강제하는 수단이며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사실을 창원시가 스스로 부정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상하수도요금이나 쓰레기 종량제봉투는 수익자부담원칙으로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 공기업의 경우 급수수익으로 원가를 보상하지 않으면 재정 건전성 확보가 어려워진다는 이유도 타당성이 없습니다.

상하수도 요금이나 쓰레기종량제 봉투가 독립채산제로 운영한다면 그 적자폭을 창원시 예산의 일반회계에서 전혀 보전하지 않는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는다는 사실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창원시에서 구구절절이 이유를 대는 변명 중에 물가상승 율이나 통합창원시의 현실화율(84.7%)과 유사규모의 지자체(100만 이상, 8개 지자체 요금 현실화율 평균 91.3%)를 비교하는 논리도 사실은 전국이 동일한 요금체계인 전기요금이나 TV시청료 같은 것이 물가 인상요인으로 인상을 한다면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번 창원시의 공공요금인상요인은 지자체 통합으로 인하여 통합 전 3개시에서 서로 상이하게 운영하던 요금체계를 단일 화 하는 행정편의주의 적 발상으로 요금체계를 통일시키는 과정의 일환으로 진해 지역의 공공요금이 40여%가 넘게 인상이 된다는 사실은 "지자체 통합"이 주된 원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2010년 10월 1일 제정 공포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3조(불이익배제의 원칙)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으로 인하여 종전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특정 지역의 행정상·재정상 이익이 상실되거나 그 지역 주민에게 새로운 부담이 추가되어서는 아니 된다.” 는 특별법에 명백히 반하는 조례라는 판단을 합니다.

이와 같이 지자체 통합과정에서 서로 상이한 규정이나 제도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재정적 부담이나 문제점 해소를 위해서 국가제정에서 수천억 원의 특별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것이지 통합 상징물 건립이나 통합 100일 잔치 같은 지자체장의 생색내기사업에 쓰라는 특별인센티브는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그도 아니라면 5년 유예나 단계적 공공요금인상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창원시에서는 타당성 없는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공공요금을 대폭 인상하는 것은 시민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국가의 녹을 먹는 공무원들은 쓰레기 종량제봉투 가격의 인상요인을 줄일 수 있는 불법투기 단속이나 쓰레기 매립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고민하지도 않았습니다. 또한 40%가까운 수도 물 누수율을 먼저 줄이려는 고민이나 발상의 전환을 한 흔적을 찾을 수도 없습니다.

과거 진해시에서 운영하던 수도요금 무선검침 System에 얼마나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으며 얼마나 많은 업무효율을 높이고 있는지 하는 문제도 시의원들이 따져 보아야 합니다.



그래도 공공요금을 인상해야 할 요인이 있다면 사전에 주민설명회나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들의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 절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창원시의회의 의원님.

창원시에서는 1995. 1. 1. 경기도 남양주시 등 33개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에 따른 행정특례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시 제2조(불이익배제의 원칙)에 행정상□ 재정상 새로운 추가 부담을 주지 못하도록 규정하였음에도 6~7개 지자체(용인□김천□삼척시 등)에서 상□하수도요금 등의 단일화를 시행한 사례가 있다는 이야기를 어떻게 국가기관에서 공식 문서로 남길 수 있는지 본인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는 마치 다른 사람들은 도둑질을 해도 문제가 안 되는데 왜 내가 도둑질하는 것을 탓하느냐는 이야기로 들립니다. 용인, 김천, 삼척시민들이 부당한 국가권력에 항의하지 않았다고 해서 창원시민들도 부당한 국가권력의 남용에 어떤 항의나 법적 대응을 하지 못한다는 논리에 우리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창원시의회의 의원님.

오히려 창원시에서 우선해서 통합을 서두르고 고민해야할 교육문제나 학군 조정문제는 외면하고 시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공공요금 인상문제만 서두르는 창원시의 행정에 지역주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본인 등이 부탁하고 싶은 것은 창원시의회의회에서 동의한다면 시민들이 창원시의회의회에 조례개정을 청원하여 창원시의회의회에서 청원을 수용하고 진지하게 검토한 후 공공요금인상 조례를 재개정 하는 절차를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해시민단체에서도 구태여 시민들과 창원시장이 법률적으로 따지고 다투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창원시의회의에서도 자신들이 심의 의결한 조례를 다시 재개정한다는 사실이 곤혹스러울 수 있겠지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나 시민단체가 시민소송 단을 모집하고 조례무효소송을 시민집단소송으로 진행할 경우를 상상하는 것 자체가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전국에서는 휴대전화번호를 010으로 강제통합 하는 문제에 항의하는 01x 통합반대 국민소송 단을 모집하여 위헌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인도 01x 통합반대 위헌소송에 참여하여 지난주에 서울을 다녀오는 버스에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전화번호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전국에서 모여 위헌소송을 진행하는데 우리는 진해시라는 자손들의 고향마저 지키지 못하고 잃어버리는 과정에서 아무 일도 하지 못한 자신들이 너무 부끄럽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긴 글을 써서 미안스럽습니다..

끝까지 읽어 주신 의원님에게 감사드리며 의원님의 개인적 의견이나 회신을 기다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많은 고민을 하고 동료의원들과 진지한 토론이 진행되기를 기대합니다.

2011년 1월 22일

진해 시민포럼 집행위원장

이춘모

희망진해사람들 공동대표

조광호, 이종면 드림

---

# 수도요금 변경 경과(사유)

## 추진경과

### ○ 용역 이유

- 주민편익증진과 자치단체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부의 지방행정 체제 개편 계획에 의해 2010. 7. 1 구)창원·마산·진해시가 통합 창원시로 출범하게 되었으나 기존 지역별로 수도요금의 요율, 누진 단계, 적용 업종 등이 크게 달라 이의 단일화가 대두되었음
- 2010. 8월~9월 전문기관(한국수도경영연구소)에 용역을 의뢰 하였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단일화(안)을 마련하여 물가대책심의회 및 조례 개정 등의 절차를 거쳐 2011.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음.

## 지방행정개편에 따른 특별법(제23조) 저촉 여부

- 지자체 구성원에게 일률적·정액방식으로 강제 부과되는 지방세와는 달리 수도요금은 각자가 소비하는 양에 비례해 생산의 소요비용의 부담을 지는 「원인자부담 원칙」이 준수되어야 하며,
- 1995. 1. 1. 경기도 남양주시 등 33개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에 따른 행정특례 등에 관한 법률」 시행시 제2조(불이익배제의 원칙)에 행정상·제정상 새로운 추가 부담을 주지 못하도록 규정 하였음에도 6~7개 지자체(용인·김천·삼척시 등)에서 상·하수도요금 등의 단일화를 시행한 사례가 있음

# 10

지방자치단체장 업무추진비 공개를 환영한다.

지방자치단체장 업무추진비 공개를 환영한다.

보도에 의하면 경남시장군수협의회(회장 박완수 창원시장)가 지난달 24일 오후 하동녹차연구소에서 제48차 정기회의를 열고 도내 시장·군수들의 '자치단체장 업무추진비 표준공개 안'에 따라 인터넷에 업무추진비를 자율 공개하기로 했다는 소식이다. 표준공개 안은 집행일자, 집행유형(시책 또는 홍보·업무 추진 유관기관 협조 등), 집행 구분(격려금품·식사·화환 등), 집행 대상, 집행 액을 구분하도록 되어 있다.

자치단체장 업무추진비 표준공개 안은 지난해 10월 말 열린 전국 시장·군수 총회에서 자율 공개 방안을 논의하고 나서 전국 시장·군수의 의견 수렴과 행정안전부 협의를 거쳐 최종 마련했지만 아직은 인터넷에 공개하는 자치단체장은 그리 많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나는 얼마 전 정보공개 시스템을 이용해서 창원시장의 업무추진비 공개를 청구한 사실이 있다. 당연히 것으로 생각했던 정보공개는 한 번의 기간 연장을 하고 보름이 다 되어서야 답변을 받을 수 있었다.

나는 무슨 이유로 창원시장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공개하는데 보름이나 걸리는지 이해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창원시청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시장의 판공비 집행 내역을 상시 공개할 계획이 없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은 더욱 이해하기 어려웠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필요한 경비를 적법하게 집행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리고 그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도 당연하고 상식에 속하는 문제다. 그러나 창원시장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규칙”에 의한 전국 지자체 업무추진비 의무공개 시행지침이 시달 되면 지침에 따라 공개토록 할 계획임. 이라는 답변을 하는 것으로 보아 의무규정이 아니면 공개하지 못하겠다는 의미라는 짐작이다.

업무추진비라는 예산항목은 마땅히 지방자치단체장의 격에 맞게 때로는 부하직원들을 격려할 필요도 있고 이런저런 행사에 참석하게 되면 격려금이나 식사비정도는 부담해야할 경우에 체면상하지 말고 단체장의 제량으로 쓰라고 뚜렷하게 명시하지 않고 책정한 잡비정도의 경비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선출한 대표자가 업무를 집행하면서 품위유지를 위한 적정수준의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 문제에 이의제기를 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런데 무슨 이유로 자치단체마다 업무추진비 공개문제를 달갑지 않게 생각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나는 진해, 마산, 창원이 통합되기 전에 진해시장의 업무추진비를 공개하라는 정보공개청구를 해서 자료를 받아보고 상식 없는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어이없어 했던 경험이 있다. 진해시장은 하루에 다섯 번 오찬을 하고 일곱 번 만찬을 했다는 업무추진비 결산내역을 나는 이해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다. 나는 상식 없는 답변서를 들고 진해시장은 어떻게 하루에 다섯 번 오찬을 하고 여섯 번 만찬을 하느냐고 따지고 묻자 카드결제를 해서 그렇다는 기막힌 변명을 하는 것이다. 카드결제를 하면 더욱 날자가 분명하지 않느냐고 다그치자 이제는 국장이나 과장이 대리참석을 하는 경우도 있다는 정말 궁색한 변명에는 할 말이 없었던 기억이다.

지방자치단체장은 명예직이 아니라 국가공무원에 준하는 급료를 받고 임기가 보장된 선출직 공무원이다.

공무원의 직급에 준하는 급료를 국가제정에서 지급하고 생계를 보장한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는 오직 자치단체장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별도로 예산에 편성해서 단체장의 의사에 따라 집행하도록 법률로 보장된 정당하고 정당한 경비다.

이와 같이 정당하고 당당한 자치단체장들의 업무추진비인 정상경비를 집행하고 공개하지 못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이제라도 경남 도내 시장·군수들이 '자치단체장 업무추진비 표준공개 안'에 따라 인터넷에 업무추진비를 자율 공개하기로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의결했다는 소식을 도민 모두는 적극 환영할 것이다.

# 11

연구대상인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 연구대상인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온라인 인터넷 Marketing 기법에는 오버추어 광고(overture advertising)라는 광고기법이 있다. 오버추어광고란 인터넷 검색 창에 고객이 원하는 검색 키워드를 치면 광고를 의뢰한 해당 업체로 연결되어 해당사이트 특정 제품을 한번 접속(클릭)할 때마다 광고비를 지불하는 방식의 광고기법을 말한다. 그러면 단지 검색만하고 클릭 수만 올라갈 뿐인데 무슨 이유로 광고주는 광고비를 지불하며 그런 방식의 광고는 과연 어떤 광고효과가 있다는 것인지 생각할 필요가 있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과 같은 이치로 사람이 모이면 시장이 형성되기 마련이며 또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시장으로 모여드는 것과 같이 선순환(善循環) 논리가 적용되는 온라인시장에서 방문자 수와 클릭 수는 무척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시장에는 자연스럽게 제품도 많이 진열되고 질 좋은 제품들이 모이기 마련이지만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 썰렁한 시장에는 제품의 양이나 질이 떨어지기 마련이라 점점 악순환만 거듭된다.

이런 문제는 비단 온라인 쇼핑몰 뿐 아니라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도 사람들이 모이는 홈페이지에는 수준 높은 글이나 양질의 정보가 모여 선순환 구조를 이룬다. 그러나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 홈페이지에는 누구도 글을 쓰거나 정보를 올리려는 생각조차 하지 않는 악순환의 고리가 반복되고 형성되는 것은 상식이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를 인정 해 주기를 바라는 인간의 본성 때문에 자신이 올린 글을 여러사람이 읽어주고 댓글까지 달아주면 기분은 좋아지기 마련이라 더욱 열심히 글을 쓰고 좋은 정보들을 제공하려고 노력하기 마련이다.

과거 진해시청 홈페이지는 비방 글이 난무하고 자기 글을 과시하려는 사람들의 글이나 신문 기사를 퍼 나르는 글 등으로 효율성이 떨어지고 문제점이 많이 발생 한다. 는 이유로 <열린 시장 실>을 아예 비공개로 운영하던 경우가 있었다. 그러나 시민들의 즐기찬 요구로 공개 운영했으나 전혀 아무 문제도 없었다.

지자체마다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목적이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지자체가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시민들과 소통하며 중요한 시정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시민들의 의사를 수렴하는 기능이 중요한 목적일 것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나는 창원시청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시민들이 글을 읽을 때마다 클릭 수가 올라가는 것은 오히려 창원시청 홈페이지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것이지 특정 글에 클릭 수가 올라간다고 해서 여론몰이를 한다거나 시민들에게 어떤 피해를 주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그러나 지금 창원시청 홈페이지는 한 IP당 하루 한 클릭씩 증가하는 프로세스 (process)를 운영하여 상식이나 이치에 맞지 않을뿐더러 매우 불합리한 방법으로 홈페이지를 운영한다는 생각이다.



인터넷 아이피(Internet Protocol address)란 인터넷 선로를 타고 들어오는 주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한 IP에서 공유기를 사용할 경우는 한 사무실에 10명이 근무할 경우나 100명이 근무하는 회사도 있는데 그러면 하루에 100명의 인원이 글을 읽고 열람해도 클릭 수는 한 번 밖에 증가하지 않는 모순이 있다.

부산의 모 구청 홈페이지는 시민들의 참여도와 게시 글 수를 체크하여 마일리지를 제공하고 그 마일리지로 공공기관 문화행사의 입장료 같은 것을 지불하는 혜택을 주기까지 하는 경우도 있다. 시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글을 읽는 클릭 수를 제한할 어떤 합당한 이유도 나는 찾을 수 없다.

다음은 지방자치단체 대부분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의 에디터 기능을 텍스트 편집기능과 사진 업로드 기능을 포함하는 최신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시민들이 시청홈페이지를 서로 수평적 열린 공간으로 활용 할 수 있도록 댓글이나 답 글 기능을 보강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홈페이지 운영 담당자들은 홈페이지운영의 기술적 문제나 보안문제를 이유로 들며 게시판 에디터 기능과 댓글기능을 극구 반대하는 이유도 나는 이해할 수 없다.

어느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 운영담당자는 댓글이나 답 글 기능을 반대하는 이유 중 하나로 시민들 상호가 비방하는 글이나 저급한 단어를 사용하며 시비가 될 수 있다는 이유를 들기도 한다. 그러나 아픔이 없이 성숙한 시민의식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와 같은 문제는 시민들 스스로 다툼과 아픔을 거치며 시민들의 자정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

시청 홈페이지는 실명제로 운영이 되고 있으며 정해진 운영규정에 따라 조금만 세심한 배려를 한다면 아주 자연스럽게 시민들의 중요한 여론이 모이는 아고라와 같은 진정한 시민광장이 될 수 있으며 그렇게 만드는 것이 지자체들이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목적이 되어야 할 것이다.

창원시에서는 시장이 직접 참여하고 3천여 명의 공무원들이 조회를 대신해서 생중계로 지켜보는 시청경연 회의도 한다. 이는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하여 시정에 반영하려는 매우 소중하고 중요한 제도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이 제도도 한 달 전부터 발언자를 선정하고 발언할 내용까지 준비를 해야 한다는 사실은 좀 더 진솔하고 솔직한 시민들의 여론이기 보다는 일정부분 정제되거나 가공된 여론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나는 창원시청에서 운영하는 시청경연회의에서 시청홈페이지 개선문제를 거론한 일이 있지만 아직 어떤 변화도 느끼지 못하고 있다. 대단한 예산이 필요하거나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도 아니다. 지방자치단체를 운영하고 집행하는 단체장의 의지와 결심만 필요한 간단하지만 매우 중요한 지방자치행정의 핵심적 문제인 것이다.

좀 더 진솔하고 솔직한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시민들의 여론이 자연스럽게 모이는 공간을 마련하는 방법으로 나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과감하게 개선할 것을 요구한다. 지자체마다 자신들의 의사를 주민들에게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수직적 구조인 단방향 소통수단은 너무나 많은 구조적 모순을 가지고 있다. 주민들의 입장에서 시청홈페이지와 인터넷방송국을 비롯해서 가정마다 배달되는 시청소식지인 시보나 각종행정조직을 통한 지자체 홍보수단은 다양하다. 그리고 주민의 입장에서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일방적인 정보를 반복적으로 학습받는 입장이다.

얼마 전에는 권민호 거제시장이 시장 실을 없애고 1층 민원실의 개방된 공간으로 시장 실을 옮겼다는 기사가 전국적인 주목을 받은 일도 있다. 이는 좀 더 주민들과 가까이 다가가서 소통하고 주민들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하려는 의지라는 생각이다. 이제는 진정으로 주민들과 소통하는 지방자치행정의 실현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들이 과감하게 자체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를 양방향 소통이 가능한 수평적 구조로 운

영구조를 바꿀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시민들의 진정한 여론이 자연스럽게 모이는 생태계를 형성하는 공간으로 홈페이지의 에디터 기능과 댓글 기능을 보강하는 과감하고 도전적인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 개혁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세계적 IT기업인 애플이 스마트폰인 아이 폰을 출시하면서 전 세계의 의사소통구조를 혁명적으로 바꾼 가장 큰 성공의 비결은 너무도 단순하다. 스마트폰을 활용하는 앱의 유통구조를 수평적구조로 생태계를 형성한 간단한 이치가 가장 큰 성공의 비결이라는 사실은 누구도 부정하지 않는다. 이제는 스마트 폰 같이 똑똑해진 주민들에게 일방적이고 주입식 같은 지자체홍보 수단으로 홈페이지를 운영하려는 사고는 과감하게 떨쳐버려야 할 중요한 이유다.

진정으로 주민을 위한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해서는 주민들의 솔직하고 진솔한 의사들이 자연스럽게 모이고 소통하면서 주민들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다. 이제 국민들의 의사소통수단도 스마트한 SNS(Social Network Service)시대로 대세가 기우는 온라인세상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실체적 지방자치를 실현할 수 있는 주민들의 소통공간이 무엇보다도 절실한 시대적 변화를 읽지 못하고 시민들의 의사나 여론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을 의도적으로 유명무실하게 하려는 사실은 진정한 지방자치의 의미에 역행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이제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지방의회에서도 지방자치단체가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진정한 목적이나 의미를 살리릴 수 있도록 지방의회 차원에서 연구하여 지자체 홈페이지를 과감하게 개혁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



## 경남연극제 19일 통영 개막

3면 사회 >>

경남 연극인들의 축제인 '제29회 경남 연극제'가 19~29일 통영 시에서 열린다. 한국연극협회 경남지회는 제29회 경남 연극제를 19일부터 열흘간 통영시민문화

회관에서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통영지부와 통영시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연극제에는 도내 10개 극단이 참가해 경연을 벌이게 된다.

공연은 20일 경창 극단인체와 '눈비레기'를 시작으로 28일까지 매일 오후 7시 30분 통영시민문화회관 대극장과 소극장 무대에서 선보인다.



망사상 비후의 '인기'

8면 산업 >>

## 이준모 칼럼

## 연구대상인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이 준 모

진해시민모임 집행위원장  
객원칼럼니스트

온라인 인터넷 Marketing 기법에는 오버쳐어 광고(overture advertising)라는 광고기법이 있다. 오버쳐어광고란 인터넷 검색 창에 고객이 원하는 검색 키워드를 치면 광고를 의뢰한 해당 업체로 연결되어 해당사이트 특정 제품을 한눈에 계속(클릭)할 때마다 광고비를 지불하는 방식의 광고기법을 말한다.

그러면 단지 검색만하고 클릭 수만 올라갈 뿐인데 무슨 이유로 광고주는 광고비를 지불하며 그런 방식의 광고는 과연 어떤 광고효과가 있다는 것인지 생각할 필요가 있다.

물론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과 같은 이치로 사람이 모이면 시장이 형성되기 마련이며 또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시장으로 모여드는 것과 같이 선순환(善循環) 논리가 적용되는 온라인시장에서 방문자 수와 클릭 수는 무척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시장에는 자연스럽게 제품도 많이 진열되고 질 좋은 제품들이 많이 모이기 마련이지만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 쓸쓸한 시장에는 제품의 양이나 질이 떨어지기 마련이라 점점 악순환만 거듭된다.

이런 문제는 비단 온라인 쇼핑물 뿐 아니라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도 사람들이 모이는 홈페이지에는 수준 높은 글이나 양질의 정보가 모여서 선순환 구조를 이룬다.

그러나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 홈페이지에는 누구도 글을 쓰거나 정보를 올리려는 생각조차 하지 않는 악순환의 고리가 반복되고 형성되는 것은 상식이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를 인정 해 주기를 바라는 인간의 본성 때문에 자신이 올린 글을 여러사람이 읽어주고 댓글까지 달아주면 기분은 좋아지기 마련이라 더욱 열심히 글을 쓰고 좋은 정보들을 제공하려고 노력하기 마련이다.

과거 진해시청 홈페이지는 비방 글이 난무하고 자기 글을 파시하려는 사람들

의 글이나 신문기사를 퍼 나르는 글 등으로 효율성이 떨어지고 문제점이 많이 발생 한다는 이유로 <열린시장실>을 아예 비공개로 운영하던 경우가 있었다. 그러나 시민들의 즐긴한 요구로 공개 운영했으나 전혀 아무 문제도 없었다.

지자체마다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목적이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지자체가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시민들과 소통하며 중요한 시정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시민들의 의사를 수렴하는 기능이 중요한 목적일 것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나는 창원시청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시민들이 글을 읽을 때마다 클릭 수가 올라가는 것은 오히려 창원시청 홈페이지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것이기 특정 글에 클릭 수가 올라간다고 해서 여론몰이를 한다거나 시민들에게 어떤 피해를 주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그러나 지금 창원시청 홈페이지는 한 IP당 하루 한 클릭씩 증가하는 프로세스(process)를 운영하여 상식이나 이치에 맞지 않을뿐더러 매우 불합리한 방법으로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생각이다.

인터넷 아이피(Internet Protocol address)란 인터넷 선로를 타고 들어오는 주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한 IP에서 공유기를 사용할 경우는 한 사무실에 10명이 근무할 경우나 100명이 근무하는 회사도 있는데 그러면 하루에 100명의 인원이 글을 읽고 열람해도 클릭 수는 한번 밖에 증가하지 않는 모순이 있다.

부산의 모 구청 홈페이지는 시민들의 참여도와 게시 글 수를 체크하여 마일리지제를 제공하고 그 마일리지로 공공기관 문화행사의 입장료 같은 것을 지불하는 혜택을 주기까지 하는 경우도 있다. 시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글을 읽는 클릭 수를 제한할 어떤 합당한 이유도 나는 찾을 수 없다.

다음은 지방자치단체 대부분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의 에디터 기능을 텍스트 편집기능과 사진 업로드 기능을 포함하는 최신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시민들이 시청홈페이지를 서로 수평적 열린 공간으로 활용 할 수 있도록 댓글이나 답 글 기능을 보강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홈페이지 운영 담당자들은 홈페이지운영의 기술적 문제나 보안문제를 이유로 들며 게시판 에디터 기능과 댓글기능을 극구 반대하는 이유도 나는 이해할 수 없다.

어느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 운영담당자는 댓글이나 답 글 기능을 반대하는 이유 중 하나로 시민들 상호가 비방하는 글이나 저급한 단어를 사용하며 시비가 될 수 있다는 이유를 들기도 한다. 그러나 아픔이 없이 성숙한 시민의식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와 같은 문제는 시민들 스스로 다독과 아픔을 거처며 시민들의 자정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

시청 홈페이지는 실명제로 운영이 되고 있으며 정해진 운영규정에 따라 조금만 세심한 배려를 한다면 아주 자연스럽게 시민들의 중요한 여론이 모이는 아고라와 같은 진정한 시민광장이 될 수 있으며 그렇게 만드는 것이 지자체들이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목적이 되어야 할 것이다.

창원시에서는 시장이 직접 참여하고 3천여 명의 공무원들이 조화를 대신해서 생중계로 지켜보는 시청경연회의도 한다. 이는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하여 시정에 반영하려는 매우 소중하고 중요한 제도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이 제도로 한 달 전부터 발언자를 선정하고 발언할 내용까지 준비를 해야 한다는 사실은 좀 더 진솔하고 솔직한 시민들의 여론이 보다 일정한 부분 정제되거나 가공된 여론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나는 창원시청에서 운영하는 시청경연회의에서 시청홈페이지 개선문제를 거론한 일이 있지만 아직 어떤 변화도 느끼지 못하고 있다. 대단한 예산이 필요하거나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도 아니다. 지방자치단체를 운영하고 집행하는 단체장의 의지와 결심만 필요한 간단한지만 매우 중요한 지방자치행정의 핵심적 문제인 것이다.

좀 더 진솔하고 솔직한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시민들의 여론이 자연스럽게 모이는 공간을 마련하는 방법으로 나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각 지방자치단체를 요구한다. 지자체마다 자신들의 의사를 주민들에게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수직적 구조인 단방향 소통수단은 너무나 많은 구조적 모순을 가지고 있다.

주민들의 입장에서 시청홈페이지와 인터넷방송국을 비롯해서 가정마다 배달되는 시청소식지인 시보나 각종행정조치를 통한 지자체 홍보수단은 다양하다. 그리고 주민의 입장에서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일방적인 정보를 반복적으로 학습받는 입장이다.

얼마 전에는 권민호 거제시장이 시장실을 없애고 1층 민원실의 개방된 공간으로 시장실을 옮겼다는 기사가 전국적인 주목을 받은 일도 있다. 이는 좀 더 주민들과 가까이 다가가서 소통하고 주민들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하려는 의지라는 생각이다.

이제는 진정으로 주민들과 소통하는 지방자치행정의 실현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들이 과감하게 자체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를 양방향 소통이 가능한 수평적 구조로 운영구조를 바꿀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시민들의 진정한 여론이 자연스럽게 모이는 생태계를 형성하는 공간으로 홈페이지의 에디터 기능과 댓글 기능을 보강하는 과감하고 도전적인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 개혁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세계적 IT기업인 애플이 스마트폰인 아이폰을 출시하면서 전 세계의 의사소통구조를 혁명적으로 바꾼 가장 큰 성공의 비결은 너무도 단순하다. 스마트폰을 활용하는 앱의 유통구조를 수평적구조로 생태계를 형성한 간단한 이치가 가장 큰 성공의 비결이라는 사실은 누구도 부정하지 않는다.

이제는 스마트 폰 같이 폭넓게 주민들에게 일반적이고 주안점 같은 지자체 홍보 수단으로 홈페이지를 운영하려는 사고는 과감하게 펼쳐버려야 할 중요한 이유다.

진정으로 주민을 위한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해서는 주민들의 솔직한 의견과 진솔한 의사들이 자연스럽게 모이고 소통하면서 주민들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다. 이제 국민들의 의사소통수단도 스마트한 SNS(Social Network Service)시대로 대체가 이루어진 온라인 세상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실제적 지방자치를 실현할 수 있는 주민들의 소통공간이 무엇보다도 절실한 시대적 변화를 읽지 못하고 시민들의 의사나 여론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을 의도적으로 유명무실하게 하려는 사실은 진정한 지방자치의 의미에 역행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이제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지방의회에서도 지방자치단체가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진정한 목적이나 의미를 살릴 수 있도록 지방의회 차원에서 연구하여 지자체 홈페이지를 과감하게 개혁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 12

진해군항제 준비상황 현장중계사진입니다.



04.01  
2011

## 진해군항제 준비상황 현장중계사진입니다.

제49회 진해 군항제를 준비하는 중원로타리에 나가 보았습니다. 벚꽃이 이제 막 개화하기 시작하면서 중원로타리 주변은 모두가 분주한 모습들입니다.

손님을 맞이하려는 군항제 준비위원들의 손길도 바쁘고 군항제 기간에 한 밀천 챙겨보자고 장사를 준비하는 상인들의 빛나는 눈동자들이 중원로타리를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방송사들도 중계하기 좋은 자리를 선점하려고 미리 나와서 중계차위에서 전야제 중계준비를 한다고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통합창원신문사 김홍식사장님과 점심을 함께 하고 돌아 본 중원로타리는 생기가 넘치고 있었습니다. 평소에도 진해 서부상권이 이 정도만 붐비고 생기가 넘쳤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돌아 왔습니다. 중원로타리 부근을 스케치한 사진을 올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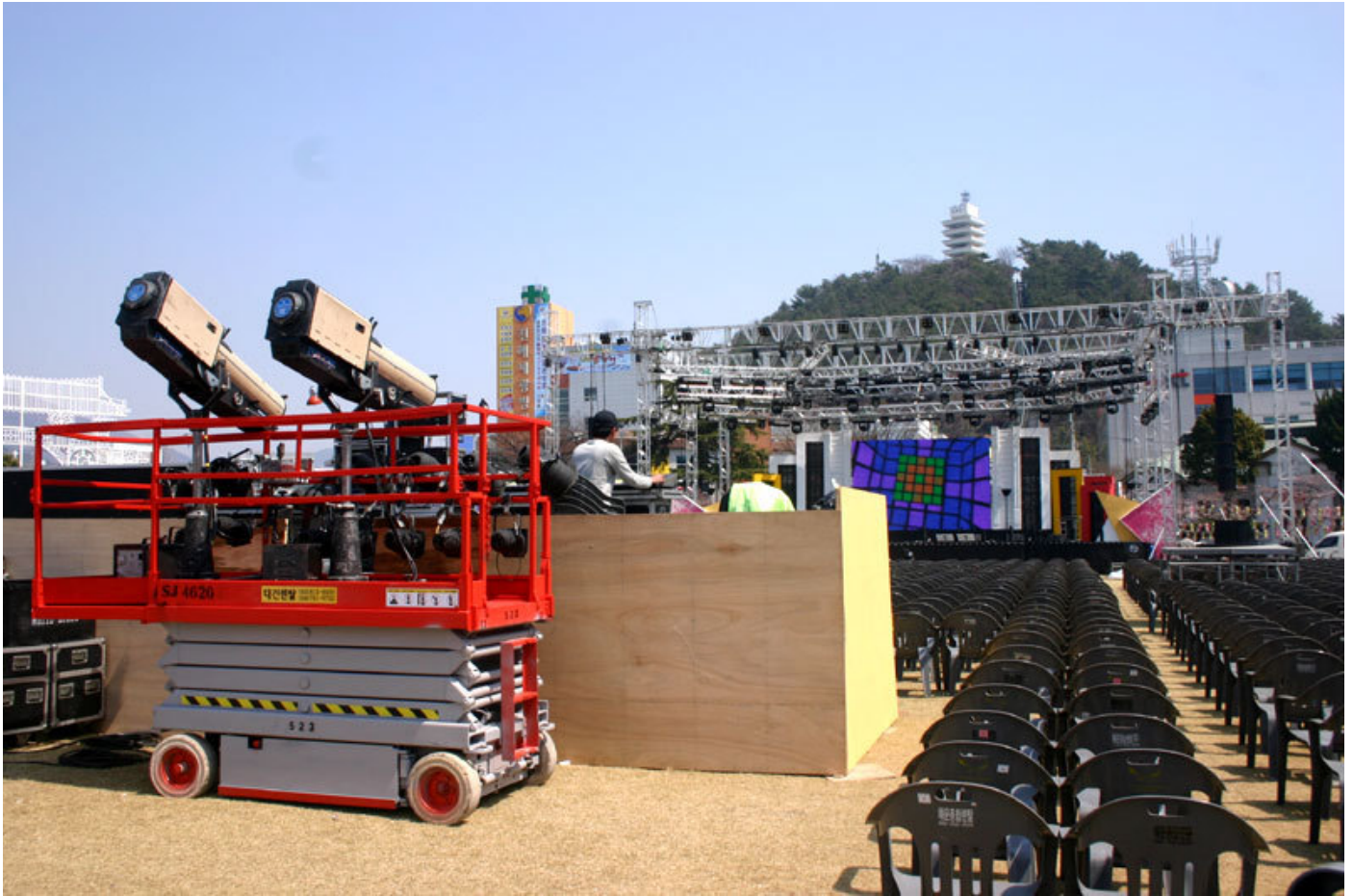






























4월 2일 오전 8시 현재 진해 여좌천에 개화하는 벚꽃을 찍은 사진입니다.

오후에 중원로타리 부근에는 이 사진보다 많은 벚꽃들이 꽃망울을 터트리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과거의 경험으로 보아 금년도 벚꽃이 만개하는 시기는 4월 5일 ~ 6일이 절정을 이룰 것으로 예상합니다.

중원로타리 부근에는 장사를 하는 사람들과 구경을 하는 사람들로 붐비고 있으며 제황산 공원을 운행하는 모노레일카는

순서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제법 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어제 저녁에 개최한 전야제를 시작으로 진해 군향제는 이제 전국에서 관광차들이 모여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진해역전 2011년 4월 6일 오후 2시 모습



제황산공원 2011년 4월 6일 오후3시





# 13

자치단체장이3선(選)못하면 바보다.

자치단체장이 3선(選) 못하면 바보다.

‘바보’가 아닌 이상 한번 자치단체장이 되면 3선(選)은 떼 놓은 당상이라는 말이 있다. 지방권력이 자치단체장에게 지나치게 쏠림현상을 일으키는 지방권력의 구조적 문제가 이런 유행어를 만들었다.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천년 이상의 중앙집권적 정치□행정문화에 익숙해져 있었다. 어느 나라 역사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사례이다. 말단 행정기관이 중앙의 지시와 임명에 의해 장악해왔던 지방권력과 힘을 지방자치제도가 운영되면서 지자체장이 고스란히 물려받았다.

자치단체장은 자신의 고유권한인 인사권을 무기로 재정운용과 지방정치 엘리트의 중심축인 공직사회를 장악한다. 자치단체장에게 공무원이 한 번 찍히면 공직인생의 미래와 희망이 거의 없게 되는 공직풍토가 조성되어 있다. 단체장에게 찍히면 좋은 보직 얻기는 고사하고 좋은 보직을 얻지 못하면 무능평가로 승진도 힘든 일은 당연하다. 그런 세월을 재선 8년이나 3선 12년을 보내면 공직생활은 끝나기 마련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 횡행하는 승진·보직 이동시 금전수수설이 단순히 풍문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잠작 할 수 있는 대목이다. 공무원들은 한 단계만 승진해도 연봉이 달라지고, 연금이 달라지니 목을 매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지자체의 공무원들은 사실상 사시사철 단체장의 선거원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공직의 가치와 양심 때문에 유배 아닌 유배생활을 감수하는 공무원들도 많지만 문제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공무원평가시스템을 운영하는 지자체는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 없다는 것이다.

다음은 지역의 수십 개 단체가 지자체의 보조와 출연 등 예산지원으로 그물망처럼 얽혀 있고, 그 수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새마을운동지회를 필두로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는 물론 심지어 마을문고까지 지역별 동별로 포진하여 합법적으로 예산을 지원 받는다. 그 뿐이 아니다. 선거중립을 법적으로 선언한 통반장 조직도 공조직에 포함이 되면서 지자체장의 눈치를 보거나 지자체장의 선전원이 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지자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자체 재정절약이라는 명분으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는 지자체사무의 민간위탁업무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공기업이나 산하단체는 물론 지자체 예산을 지원받는 민간단체들도 부지기수로 많다. 그러나 지자체 예산을 지원받는 원래 취지와는 상관없이 선출직 시장의 선거운동 과정에서 논공행상(論功行賞)의 부상으로 사용하는 낙하산 인사용으로 나누어 주는 자리로 변질되는 것이 문제다. 거기다 조직에 가담하는 회원들의 숫자를 계산한다면 ‘바보’가 아닌 이상 한번 자치단체장이 되면 3선(選)은 떼 놓은 당상이라는 말이 실감나기 마련이다.

그보다 더한 자치단체장에 대한 확실한 프리미엄은 합법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쓰며 자신을 홍보하는 수단이 다양하다는 사실이다. 얼마 전 창원시에서 불거진 공평하지 못하고 편향적인 여론조사결과 발표를 기사화한 창원시보를 보면 세금으로 합법적이고 공개적인 방법으로 교묘하게 자치단체장 선전을 하면서 사전 선거운동을 한다는 생각이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자체홍보를 핑계로 자치단체장을 홍보하고 선전하는 수단은 자체에서 운영하는 인터넷방송국은 물론 지자체 홈페이지도 지자체장의 실적을 찬양하고 선

전하는 지능적이고 교묘한 사전선거운동 수단이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인터넷방송국, 시청소식지 같은 관변매체들은 무제한에 가까운 예산을 집행하지만 모두가 한결같이 주민들에게 주입식 반복학습 같은 일방통행의 자치단체장 홍보매체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이 같은 문제의 핵심인 지자체장으로 집중되는 지방권력을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지방의회가 제구실을 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하지만 정당공천제로 인한 구조적 모순 때문에 지방의원들 역시 국회의원의 시녀로 전락해 버린 것이 지방자치발전의 가장 큰 장애 요인이다. 우리나라 지방자치 20년의 역사가 만든 '바보'가 아닌 이상 한번 자치단체장이 되면 3선(選)은 때 놓은 당상이라는 말은 빈말이 아니다.

## ‘한남일보’ 제호를 되찾았습니다

‘경남매일’의 인내에 감사드립니다.

‘매일경남’이 ‘한남일보’로 제호를 되찾았습니다. 그동안 ‘매일경남’이란 제호를 사용하면서 본의 아니게 ‘경남매일’의 상계를 불편하게 했습

니다. ‘경남매일’의 제호와 헷갈린다. ‘매일경남’은 ‘경남매일’의 아류라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제호를 정하지 못하고 또다시 변경하는 것이 독자의 혼란을 일으켜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제호로 인한 영향보다 최소

한의 도덕적 기준을 지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한남일보는 독자와 종업원과의 도덕적 유대로 충실히 지켜나가겠습니다. 잘못된 부분을 과감히 고쳐냈습니다. 바른 언론의 사명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백우 김수로  
거제 김수인

10면 분화

## 기자 모집

‘한남일보’가 열정을 가진 기자를 뽑습니다

요격직종

주제기자·연락기자·편집기자

제출서류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주민등록등본

원서접수기간

2011년 3월 15일까지

본사 총무부 (055-632-4131)

보내실곳: 경남 거제시 고현동 972-2

메일 접수: hannamilbo@hannamilbo.com

055-632-4131

010-8542-4131

055-632-4131

010-8542-4131

055-632-4131

010-8542-4131

055-632-4131

010-8542-4131

055-632-4131

010-8542-4131

055-632-4131

010-8542-4131

055-632-4131

010-8542-4131

055-632-4131

010-8542-4131

055-632-4131

010-8542-4131

055-632-4131

010-8542-4131

055-632-4131

010-8542-4131

055-632-4131

010-8542-4131

055-632-4131

010-8542-4131

055-632-4131

010-8542-4131

055-632-4131

010-8542-4131

055-632-4131

010-8542-4131

055-632-4131

010-8542-4131

055-632-4131

010-8542-4131

055-632-4131

010-8542-4131

055-632-4131

010-8542-4131

055-632-4131

010-8542-4131

055-632-4131

010-8542-4131

055-632-4131

010-8542-4131

055-632-4131

010-8542-4131

055-632-4131

010-8542-4131

055-632-4131

010-8542-4131

055-632-4131

010-8542-4131

055-632-4131

010-8542-4131

# 한남일보

2011년 3월 9일 수요일  
hannamilbo.com

제 395 호 1판 대표전화 (055)632-0138

한남미당

한남일보

## 이준모 칼럼

## 자치단체장이 3선(選) 못하면 바보다



이 준 모

전하서민포럼 집행위원장  
객원칼럼니스트

‘바보’가 아닌 이상 한번 자치단체장이 되면 3선(選)은 때 놓은 당상이라는 말이 있다. 지방권력이 자치단체장에게 지나치게 쏠림현상을 일으키는 지방권력의 구조적 문제가 이런 유행어를 만들었다.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천년 이상의 중앙집권적 정치·행정문화에 익숙해져 있었다. 어느 나라 역사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사례이다. 말단 행정기관이 중앙의 지시와 임명에 의해 장악해왔던 지방권력과 힘을 지방자치제도가 운영되면서 자치단체장이 고소란히 물려받았다.

자치단체장은 자신의 고유권한인 인사권을 무기로 재정운용과 지방정치 엘리트의 중심축인 공직사회를 장악한다.

자치단체장에게 공무원이 한 번 찍히면 공직인생의 미래와 희망이 거의 없게 되는 공직풍토가 조성되어 있다. 단체장에게 찍히면 좋은 보직 얻기는 고사하고 좋은 보직을 얻지 못하면 무능평가로 승진도 힘든 일은 당연하다. 그런 세월을 재선 8년이나 3선 12년을 보내면 공직생활은 끝나기 마련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 행하는 승진·보직 이동시 급전수속실이 단순히 풍문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잡작 할 수 있는 대목이다. 공무원들은 한 단계만 승진해도 연봉이 달라지고, 연금이 달라지니 목을 매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자치체의 공무원들은 사실상 사시사철 단체장의 선거원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공직의 가치와 양심 때문에 유배 아닌 유배생활을 감수하고 공무원들 도 많지만 문제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공무원평가시스템을 운영하는 지자체는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 없다는 것이다.

다음은 지역의 수십 개 단체가 지자체의 보조와 출연 등 예산지원으로 그들방처럼 얹혀 있고, 그 수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새마을운동지회를 필두로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는 물론 심지어 마을문고까지 지역별 동별로 포진하여 합법적으로 예

산을 지원 받는다. 그 뿐이 아니다. 선거 중립을 법적으로 선언한 통반장 조직도 공조직에 포함이 되면서 지자체장의 눈치를 보거나 지자체장의 선전원이 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지자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자체 재정절약이라는 명분으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는 지자체사무의 민간위탁 업무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공기업이나 산하단체는 물론 지자체 예산을 지원받는 민간단체들도 부지기수로 많다.

그러나 지자체 예산을 지원받는 원래 취지와는 상관없이 선출직 시장의 선거 운동 과정에서 논공행상(論功行賞)의 부상으로 사용하는 낙하산 인사용으로 나누어 주는 자리로 변질되는 것이 문제다. 거기다 조직에 가담하는 회원들의 숫자를 계산한다면 ‘바보’가 아닌 이상 한번 자치단체장이 되면 3선(選)은 때 놓은 당상이라는 말이 실감나기 마련이다.

그보다 더한 자치단체장에 대한 확실한 프리미엄은 합법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쓰며 자신을 홍보하는 수단이 다양하다는 사실이다.

얼마 전 창원시에서 불거진 공평하지 못하고 편향적인 여론조사와 결과 발표를 기사화한 장원시보를 보면 세금으로 합법적이고 공개적인 방법으로 교묘하게

자치단체장 선전을 하면서 사전 선거운동을 한다는 생각이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자체홍보를 핑계로 자치단체장을 홍보하고 선전하는 수단은 자체에서 운영하는 인터넷방송국을 물론 지자체 홈페이지도 지자체장의 실적을 찬양하고 선전하는 지능적이고 교묘한 사전선거운동 수단이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인터넷방송국, 시청소식지 같은 관변매체들은 무제한에 가까운 예산을 집행하지만 모두가 한결같이 주민들에게 주입식 반복학습 같은 일방통행의 자치단체장 홍보매체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이 같은 문제의 핵심인 지자체장으로 집중되는 지방권력을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지방의회가 제구실을 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하지만 정당공천제로 인한 구조적 모순 때문에 지방의원들 역시 국회의원의 시녀로 전락해 버린 것이 지방자치발전의 가장 큰 장애 요인이다.

우리나라 지방자치 20년의 역사가 만든 ‘바보’가 아닌 이상 한번 자치단체장이 되면 3선(選)은 때 놓은 당상이라는 말은 빈말이 아니다.

# 14

동문서답(東問西答)하는 창원시장

## 동문서답(東問西答)하는 창원시장

원래 동문서답(東問西答)이란 동쪽을 묻는데 서쪽을 대답한다는 뜻으로 어떠한 물음에 대해 당치도 않은 엉뚱한 대답을 하는 사람을 두고 이르는 말이다. 대체적으로 동문서답을 하는 경우는 사람이 우둔하거나 어리석어서 상대가 하는 말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당치도 않게 엉뚱한 대답을 하여 바보취급을 받는 경우를 지칭하는 이야기다.

그러나 정치인들이 하는 동문서답이란 대부분 그 의미가 다른 정치적 의미를 포함하거나 질문에 답변이 궁색할 경우 난처한 현실도피나 순간을 모면하기 위한 수단으로 하는 지능형 동문서답이 대부분이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3조(불이익배제의 원칙)에 반하는 공공요금인상을 규정한 창원시 조례는 당연히 원천무효(源泉無效)라는 주장을 하며 창원시의 물가상승 율이나 지역 간 형평성 문제를 이야기 하는 것은 합당한 논리에 궁색한 변명이라는 생각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는 질문에 창원시장의 가당찮은 동문서답이 어이가 없어서 하는 말이다.

질문은 조례제정 과정의 절차상 문제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조례의 상위법인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3조(불이익배제의 원칙)와 창원시 조례가 충돌하는 문제에 대한 지적이고 조례는 법률을 근거로 제정하도록 한 법률의 체계적 문제를 따지는 답변을 요구한 사실은 누구나 알 수 있는 간단한 질문이다.

그러나 창원시장은 공공요금 관련 3개 조례안은 물가 실무위원회, 소비자정책심의회 등 사전 협의(심의)와 입법예고, 조례규칙심의회, 시 의회 의결, 사전보고 등 정당한 절차를 거쳐 공포(시행)하게 된 사실을 친절하게 알려준다고 하면서 질문자에게 이해를 바란다는 답변을 하고 있다. 이는 동문서답의 수준을 넘어서 아예 시민을 바보천치로 생각하고 무시하는 처사인 것이다. 그도 아니라면 창원시장 스스로는 어떤 책임도 없다는 사실을 주장하면서 단지 물가 실무위원회를 비롯한 조례제정 절차에 관여한 위원들과 시의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모양이다.

그뿐이 아니다. 창원시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조례제정(개정)과정에 입법예고를 했으며 입법예고기간에 이의신청을 했으면 받아드려질 수도 있었던 문제를 이제 와서 이의제기를 한다는 것은 받아드릴 수 없다는 발표를 한 사실에 대하여 이는 다시 말하면 조례에 문제점이 있어도 입법예고기간 중에 누구도 이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는 판단인지 답변 해달라는 질문에도 창원시장은 동문서답으로 일관하는 것이 분명하다.

"입법예고제도는 입법과정에서 시민참여를 통하여 입법의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입법내용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하고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입법예고 내용 중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출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제출된 의견의 반영여부 및 그 사유를 기재한 요약서를 작성하여 안건에 첨부하여 심사하고 있다." 는 답변을 한다는 사실도 가당찮은 창원시장의 동문서답(東問西答)이 분명

하다. 나는 조례의 법률체계적 하자과 재개정 문제를 따지는 질문에 조례제정 절차를 답변하는 창원시장의 동문서답을 과연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 드려야할지 자신이 창원시민이라는 사실에 인격적 모멸감과 함께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3조(불이익배제의 원칙)는 지자체 통합을 하는 주민들에게 “부담은 최소한으로 혜택은 최대한으로 한다.” 는 원칙을 특별법으로 명시한 입법취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자체 통합과정에서 지자체간 상이한 조례나 운영체계가 통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부담이나 문제점 해소를 위해서 수천억원의 특별 인센티브를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다, 통합과정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특별 인센티브는 통합시의 상징물 건립이나 통합 100일잔치 같은 지자체장의 생색내기 사업에 쓰라고 지원하는 국가예산은 분명 아닐 것이다.

정부에서도 지자체 공공요금 동결을 주문할 정도로 서민경제가 어렵고 힘든 상황에 지자체 통합조례를 제정하면서 서민들의 가계에 가장 민감하고 영향이 큰 상,하수도 요금과 쓰레기봉투 가격인 공공요금의 하향평준화원칙을 깨고 40여%가 넘는 폭탄같은 요금인상 조례를 제정하고 동문서답이나하는 창원시장을 창원시민들은 과연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궁금하다.

민주주의에 대한 가장 간결한 정의로 링컨의 "국민의(people),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가 통용되고 있다. 이는 민주주의의 핵심요소로 국민주권과 국민자치, 위민·복지주의를 담고 있다. 시민을 무시하고 시민과 동문서답(東問西答)이나 하는 창원시장은 이미 시장의 자격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나 다름 없다. 창원시장은 국민들의 혈세로 3천8백여 명이 넘는 공무원들을 거느리고 시민들과 동문서답(東問西答)이나 하고 있다면 진해, 마산, 창원이 지자체통합을 하며 꿈꾸던 지역간 화합을 통한 균형발전의 꿈은 그냥 꿈일 뿐이라는 생각이다.

-----  
-----



## 이준모 칼럼

## 동문서답(東問西答)하는 창원시장



이 준 모

진해시민모임 집행위원장  
객원칼럼니스트

원래 동문서답(東問西答)이란 동쪽을 묻는 데 서쪽을 대답한다는 뜻으로 어떠한 물음에 대해 당치도 않은 엉뚱한 대답을 하는 사람을 두고 이르는 말이다. 대체적으로 동문서답을 하는 경우는 사람이 우둔하거나 어리석어서 상대가 하는 말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당치도 않게 엉뚱한 대답을 하여 바보취급을 받는 경우를 지칭하는 이야기이다.

그러나 정치인들이 하는 동문서답이란 대부분 그 의미가 다른 정치적 의미를 포함하거나 질문에 답변이 공색할 경우 난처한 현실도피나 순간을 모면하기 위한 수단으로 하는 지능형 동문서답이 대부분이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3조(불이익배제의 원칙)에 반하는 공공요금인상을 규정한 창원시 조례는 당연히 원천무효(源泉無效)라는 주장을 하며 창원시의 불가상승 읍이나 지역 간 형평성 문제를 이야기

하는 것은 합당한 논리에 공색한 변명이라는 생각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는 질문에 창원시장의 가당찮은 동문서답이 어이가 없어서 하는 말이다. 질문은 조례제정 과정의 절차상 문제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조례의 상위법인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3조(불이익배제의 원칙)와 창원시 조례가 충돌하는 문제에 대한 지적이고 조례는 법률을 근거로 제정하도록 한 법률의 체계적 문제를 따지는 답변을 요구한 사실은 누구나 알 수 있는 간단한 질문이다.

그러나 창원시장은 공공요금 관련 3개 조례안은 물가 실무위원회, 소비자정책심의회 등 사전 협의(심의)와 입법예고, 조례규칙심의회, 시 의회 의결, 사전보고 등 정당한 절차를 거쳐 공포(시행)하게 된 사실을 친절하게 알려준다고 하면서 질문자에게 이해를 바란다는 답변을 하고 있다. 이는 동문서답의 수준을 넘어서 아예 시민을 바보천치로 생각하고 무시하는 처사인 것이다. 그도 아니라면 창원시장 스스로는 어떤 책임도 없다는 사실을 주장하면서 단지 물가 실무위원회를 비롯한 조례제정 절차에 관여한 위원들과 시의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모양이다.

그뿐이 아니다. 창원시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조례제정(개정)과정에 입법예고를 했으며 입법예고기간에 이의신청을 했으면 받아드릴 수도 있었던 문제를 이제 와서 이의제기를 한다는 것은 받아 드릴 수 없다는

발표를 한 사실에 대하여 이는 다시 말하면 조례에 문제점이 있어도 입법예고기간 중에 누구도 이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판단인지 답변 해달라는 질문에도 창원시장은 동문서답으로 일관하는 것이 분명하다.

“입법예고제도는 입법과정에서 시민참여를 통하여 입법의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입법내용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하고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입법예고 내용 중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출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제출된 의견의 반영여부 및 그 사유를 기재한 요약서를 작성하여 안전에 첨부하여 심사하고 있다”는 답변을 한다는 사실도 가당찮은 창원시장의 동문서답(東問西答)이 분명하다.

나는 조례의 법률체계적 하자과 재개정 문제를 따지는 질문에 조례제정 절차를 답변하는 창원시장의 동문서답을 과연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 드려야 할지 자신이 창원시민이라는 사실에 인격적 모멸감과 함께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3조(불이익배제의 원칙)는 지자체 통합을 하는 주민들에게 “부담은 최소한으로 혜택은 최대한으로 한다”는 원칙을 특별법으로 명시한 입법취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자체 통합과정에서 지자체간 상이한 조례나 운영체제가 통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부담이나 문제점 해소를 위해서 수천억원의 특별 인센티브를 정부가 지원한다는 것이다. 통합과정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특별 인센티브는 통합시의 상징물 건립이나 통합 100일잔치 같은 지자체장의 생색내기 사업에 쓰이고 지원하는 국가예산은 분명 아닐 것이다.

정부에서도 지자체 공공요금 동결을 주문할 정도로 서민경제가 어렵고 힘든 상황에 지자체 통합조례를 제정하면서 서민들의 가계에 가장 민감하고 영향이 큰 상·하수도 요금과 쓰레기봉투 가격인 공공요금의 하향평준화원칙을 깨고 40%가 넘는 폭탄같은 요금인상 조례를 제정하고 동문서답이나하는 창원시장을 창원시민들은 과연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궁금하다.

민주주의에 대한 가장 간결한 정의로 링컨의 “국민의(people)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가 통용되고 있다. 이는 민주주의의 핵심요소로 국민주권과 국민자치, 위민·복지주의를 담고 있다. 시민을 무시하고 시민과 동문서답(東問西答)이나 하는 창원시장은 이미 시장의 자격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나 다름 없다. 창원시장은 국민들의 혈세로 3천8백여 명이 넘는 공무원들을 거느리고 시민들과 동문서답(東問西答)이나 하고 있다면 진해, 마산, 창원이 지자체통합을 하며 꿈꾸던 지역간 화합을 통한 균형발전의 꿈은 그냥 꿈일 뿐이라는 생각이다.

# 15

고집(固執)과 주관(主觀)



## 고집(固執)과 주관(主觀)

세계 최대 갑부 빌 게이츠의 아버지는 자서전에서 아들을 키우는 과정이 ‘악몽’ 이었다고 표현했다. 학교 공부와는 담 쌓고 컴퓨터와 관련 책에만 빠져 있었으며, 결국 하버드 법대를 중퇴하고 컴퓨터 회사를 차렸을 정도니 빌 게이츠는 부모마음에 쏙 드는 모범생은 아니었을 듯싶다. 분명히 빌 게이츠도 고집불통이거나 자기 주관이 뚜렷하고 신념이 넘치는 사람일 것이라는 짐작이다.

전국시대 조(趙)나라 때 조괄(趙括)은 명장이었던 아버지의 병서를 맹목적으로 읽은 인물이다. 진(秦)나라가 쳐들어오자 염파(廉頗) 대신 장수가 돼 전장에 나간 그는 임기응변을 모르고 병서의 가르침대로만 전쟁을 치르다 참패한다. 이것은 『사기(史記)』의 염파인상여열전(廉頗藺相如列傳)에 나오는 교주고슬(膠柱鼓瑟)의 고사다. 아교로 기러기발(雁足)을 붙여 놓고 거문고를 타는 것처럼 고지식한 사람을 가리킬 때 쓰는 고집(固執)이라는 말의 어원이 되었다.

앞뒤가 짝 막힌 이런 고집불통을 우리말로로는 벽창호라고 하기도 한다. 원래 벽창우(碧昌牛)에서 나온 말로, 평안북도 벽동(碧潼)과 창성(昌城)지방의 소가 크고 억세다는 뜻에서 유래했다. 고집 센 사람을 동물에 비유하는 것도 동. 서양에 차이가 없다. 벽창호는 물론, 황소고집이란 직설적 표현처럼 우리는 소를 고집의 상징으로 보지만 영어권에선 노새(mule)를 고집의 화신으로 꼽는다. 천성적으로 고집이 센 사람도 있지만 누구나 나이가 들어가면서 고집이 는다고 한다. 정신적, 육체적 능력이 떨어지면서 매사를 자신의 과거 경험이나 기억을 기준으로 판단하려 들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늦게 배운 도둑이 날 새는 줄 모른다. 고 하더니 나도 나이깨나 먹어서 시민운동을 한답시고 너무 고집스럽게 원리원칙만 따지고 여간해서 타협의 여지를 보이지 않는 자신의 모습이 자칫 어떤 주관이나 신념도 없는 황소고집 같은 사람으로 비치는 모습이 걱정스러워서 하는 변명이다. 원래 고집이란 단어가 꼭 부정적 의미로 쓰이는 것만은 아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최씨 고집’이란 불의에 타협하지 않고 잔재주를 피우지 않으면서 오랫동안 한 우물을 파온 사람을 일컬을 때 쓰는 긍정적 표현이다. 독일에서 박사만큼 사회적 대접을 받는 마이스터(장인)들도 자기 일에 대한 철저한 고집으로 오늘날의 명성을 얻었다.

보통 고집은 부정적 이미지로, 주관은 긍정적 이미지로 비춰져왔다. 그러나 고집과 주관은 얼핏 종이 한 장 차이 같기도 하지만 분명 그 결과의 차이는 매우크기 마련이다. 주관은 몇 가지 전제요소가 요구된다. 지식과 학문적 기반, 사색과 고찰, 상대성과 절대성을 보는 눈, 삶의 경험 등이 필요하고 고집은 역시 이런 내용들이 부족하거나, 갖고 있지 않을 때 고집으로 보인다. 주관이 시간성을 가지게 되면 소신으로 발전하고, 확고한 소신은 자연히 고집으로 발전하기 마련이다. 고집 센 사람은 보통 의지가 강하고 자기주장이 뚜렷한 특징을 지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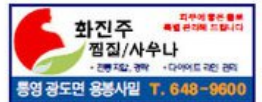
아름다운 제주에 치유의 길, 평화와 행복의 길, 상생의 길을 내는 여자, 제주올레의 서명숙 이사장은 여성 언론인으로서 치열하고 숨 가쁘게 살다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떠난 산티아고 길에서 고향인 제주에 길을 내겠다는 운명과의 같은 영감을 얻는다. 그는 사랑하는 어머니에게 가장 모진 욕을 듣고, 주변 사람들에게

미쳤다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자신의 고집같은 주관으로 신념을 굽히지 않았다. 이제는 제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여행 문화까지 바꾼 제주올레길을 연 너무도 아름다운 여자가 되었다.

국민들의 꿈을 먹고사는 정치권은 사사건건 여와 야가 충돌하며 소통하고 타협하지 못한다. 이명박 대통령의 어떤 신념이나 주관때문인지 고집불통이 문제인지 안타까운 생각이다. 야권단일후보로 도정을 책임진 김두관지사의 고집도 보통은 넘는다는 느낌이다. 시장면담을 요청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시장실 앞에 소음측정기까지 동원하는 박완수 창원시장의 고집도 만만치 않기는 마찬가지다. 새해에는 나도 주관과 신념을 가지고 세상을 살되 좀 더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며 고집은 너무 부리지 말자는 다짐을 해 본다.



# 매일경남



2009년 8월 10일 창간 ☎ (055) 636-0138 / FAX (055) 636-9894 www.maeilgn.com 제35호 2011년 1월 7일 금요일 단가 4344원 (등록 12월 4일)

## 이준모 칼럼

## 고집(固執)과 주관(主觀)



이 준 모

진해시민모임 집행위원장  
객원칼럼니스트

세계 최대 갑부 빌 게이츠의 아버지는 자서전에서 아들을 키우는 과정이 '악몽'이었다고 표현했다. 학교 공부와는 담 쌓고 컴퓨터와 관련 책에만 빠져 있었으며, 결국 하버드 법대를 중퇴하고 컴퓨터 회사를 차렸을 정도니 빌 게이츠는 부모마음에 꼭 드는 모범생은 아니었을 듯싶다. 분명히 빌 게이츠도 고집불통이거나 자기 주관이 뚜렷하고 신념이 넘치는 사람일 것이라는 짐작이다.

전국시대 조(趙)나라 때 조괄(趙括)은 명장이었던 아버지의 병서를 맹목적으로 읽은 인물이다. 진(秦)나라가 쳐들어오자 염파(廉頗) 대신 장수가 돼 전장에 나간 그는 일기응변을

모르고 병서의 가르침대로만 전쟁을 치르다 참패한다.

이것은 '사기(史記)'의 염파인상여열전(廉頗蔺相如列傳)에 나오는 교주고승(驕柱鼓瑟)의 고사다. 아교로 가려기발(雁足)을 붙여 놓고 거문고를 타는 것처럼 고지식한 사람을 가리킬 때 쓰는 '고집(固執)'이라는 말의 어원이 되었다.

앞뒤가 꼭 막힌 이런 고집불통을 우리말로 '벽창호'라고 하기도 한다. 원래 벽창우(壁倉牛)에서 나온 말로, 평안북도 벽동(碧潼)과 창성(昌城)지방의 소가 크고 여세라는 뜻에서 유래했다. 고집 센 사람을 동물에 비유하는 것도 동·서양에 차이가 없다. 벽창호는 물론, 황소고집이란 직설적 표현처럼 우리는 소를 고집의 상징으로 보지만 영어권에선 노새(mule)를 고집의 화신으로 꼽는다.

천성적으로 고집이 센 사람도 있지만 누구나 나이가 들어가면서 고집이 든다고 한다. 정신적, 육체적 능력이 떨어지면서 매사를 자신의 과거 경험이나 기억을 기준으로 판단하려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늦게 배운 도둑이 낱 새는 줄 모른다.' 고 하더니 나도 나이깨나 먹어서 시민운동을 한답시고 너무 고집스럽게 원리원칙만 따지고

여간해서 타협의 여지를 보이지 않는 자신의 모습이 자칫 어떤 주관이나 신념도 없는 황소고집 같은 사람으로 비치는 모습이 걱정스러워 하느 변명이다.

원래 고집이란 단어가 꼭 부정적 의미로 쓰이는 것만은 아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최씨 고집'이란 불의에 타협하지 않고 잔재주를 피우지 않으면서 오랫동안 한 우물을 파온 사람을 일컬을 때 쓰는 긍정적 표현이다.

독일에서 박사만료 사회적 대접을 받는 마이스터(장인)들도 자기 일에 대한 철저한 고집으로 오늘날의 명성을 얻었다.

보통 고집은 부정적 이미지로, 주관은 긍정적 이미지로 비춰져왔다. 그러나 고집과 주관은 얼핏 종이 한 장 차이 같기도 하지만 분명 그 결과의 차이는 매우크기 마련이다.

주관은 몇 가지 전제요소가 요구된다. 지식과 학문적 기반, 사색과 고찰, 상대성과 절대성을 보는 눈, 삶의 경험 등이 필요하고 고집은 역시 이런 내용들이 부족하거나, 갖고 있지 않을 때 고집으로 보인다. 주관이 시간성을 가지게 되면 소신으로 발전하고, 확고한 소신은 자연히 고집으로 발전하기 마련이다. 고집 센 사람은 보통 의지가 강하고 자기주장이 뚜렷한 특징을 지닌다.

아름다운 제주에 치유의 길, 평화와 행복의 길, 상생의 길을 내는 여자, 제주올레의 서명속 이사장은 여성 언론인으로서 치열하고 숨가쁘게 살다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떠난 산티아고 길에서 고향인 제주에 길을 내겠다는 운명파도 같은 영감을 얻는다. 그는 사랑하는 어머니에게 가장 모진 욕을 듣고, 주변 사람들에게 미쳤다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자신의 고집같은 주관으로 신념을 굽히지 않았다. 이제는 제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여행 문화까지 바꾼 제주올레길을 연 너무도 아름다운 여자가 되었다.

국민들의 꿈을 먹고사는 정치권은 사사건건 여와 야가 충돌하며 소통하고 타협하지 못한다. 이명박 대통령의 어떤 신념이나 주관때문인지 고집불통이 문제인지 안타까운 생각이다.

야권단일후보로 도정을 책임진 김두관지사의 고집도 보통은 넘는다는 느낌이다. 시장면담을 요청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시장실 앞에 소음측정기까지 동원하는 박완수 창원시장의 고집도 만만치 않기는 마찬가지다. 새해에는 나도 주관과 신념을 가지고 세상을 살되 좀 더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며 고집은 너무 부리지 말자는 다짐을 해 본다.

# 16

위법(違法)한 조례는 무효다

## 위법(違法)한 조례는 무효다

법(法)은 사회를 유지하고 통제하는 하나의 수단이다. 법은 질서를 유지하고 정의를 실현함을 목적으로 하고 국가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사회 규범을 말한다. 국가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사회 규범인 법은 국가 및 공공 기관이 제정한 법률, 명령, 규칙, 조례를 포함한다.

사회의 작동원리를 명문화한 것이 법이라 할 때 '법의 지배'는 공정사회의 초석이자 최후의 보루다. 법이 가장 권위 있는 사회규범이어야 하고, 법 자체가 공정해야 함과 동시에 법의 적용과 해석 또한 공정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법(法)마저 무시하는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은 안타깝고 갑갑한 느낌이다.

진해, 마산, 창원이 통합된 지자체 통합과정에서부터 시작된 적법하지 못한 법 운영으로 꼬이기 시작한 창원시의 지방자치행정은 이제 법마저 무시하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이라는 중차대한 문제를 지방자치의 기본인 주민투표도 거치지 않고 의결권 없는 시의회 의원들의 의결만으로 지자체통합을 한다는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법이나 질서란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감당하기 어려운 도미도 현상을 일으키며 무너지기 마련이라 법은 냉정하고 엄격하며 융통성마저 제한적으로 정밀하게 운영해야 한다. 그러나 다양한 인간의 욕구충족을 위해서 가끔은 정치가 법위에 군림하기도 하지만 법은 만민에게 평등해야 한다는 사실은 불변의 가치인 것이다.

그러나 이번 창원시에서 지자체 통합과정에 개정된 조례 일부는 법의 체계(體系)마저 무시하는 황당한 사건이라는 생각이다. 한 국가의 틀을 유지하는 헌법(憲法)은 국가 통치 체제의 기초에 관한 각종 근본 법규의 총체다. 또한 특별법(特別法)은 일반법에 달리 미치는 효력이 특정 대상과 지역에 한정된다. 그것을 추진하는 사업에 특별법 우선원칙에 따라 수많은 일반법이 한정적으로 제한되거나 정지되기도 하는 것이 특별법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적법하지 못한 진해, 마산, 창원의 지자체통합 과정의 법률적 근거를 위해서 지난 2010년 3월 12일 『경상남도 창원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지난 10월 1일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다시 제정하여 추진하는 형식으로 시행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사인간의 계약에도 자신의 목적달성이나 계약의 성사를 위해서는 계약당사자에게 각종 이권을 제시하거나 상대의 기대치를 높이기 위한 수단이 동원되기 마련이다. 같은 이유로 지방자치단체를 통합하려는 주민들의 기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3조(불이익배제의 원칙)에는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으로 인하여 종전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특정 지역의 행정상·재정상 이익이 상실되거나 그 지역 주민에게 새로운 부담이 추가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사실을 특별법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는 지자체통합으로 인해 시민가계에 미칠 영향을 “부담은 최소한으로 혜택은 최대한으로 한다.”는 원칙을 규정한 것이다.

원래 지방자치의 규정인 조례(條例)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그 지방의 사무에 관하여 제정하는 법을 말한다. 그런데 창원시장은 조례의 상위법이며 특별법인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3조(불이익배제의 원칙)를 무시하고 구, 진해시민들이 부담하던 공공요금인 하

수도요금 41.1%, 상수도요금 1.4%, 쓰레기봉투 가격 27%를 인상하는 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해서 개정했다.

상위법에 반하는 조례안을 제출하는 창원시장은 법마저 무시한다는 생각이다. 의회 전문위원은 공공요금 인상으로 시민가계에 미칠 영향이나 “부담은 최소한으로, 혜택은 최대한으로 한다.”라는 특별법의 불이익 배제원칙을 제시하며 심도 있는 질의답변과 논의를 거쳐 심사해야 할 것을 권유하는 심사보고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조례는 정서적 판단보다는 냉철한 판단이 더 중요할 것 같다. 는 진해지역 출신이며 환경문화위원회 간사인 조준택의원의 발언은 과연 시정을 견제하고 감시 감독하고 주민의사를 대변하라고 선출한 시의원의 발언이 맞는지 의문을 지울 수 없다.

상하수도요금이나 폐기물처리수수료 같은 공공요금은 시민가계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특별히 요금체계를 조례로 제정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다. 이런 중요한 문제를 한번에 40여%씩 인상을 하면서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 자치제도과를 방문하여 명확한 답변을 얻고자 하였으나 이에 대한 답변을 내려 주지 않아서 지자체의 판단으로 인상안을 조례로 제정했다.”는 창원시장이 발표한 보도 자료는 참으로 한심하다.

법을 집행하는 전문가 집단이 나 같은 법률적 전문지식이 없는 사람이 판단해도 간단한 법리적 해석을 이해하지 못하고 위법 부당한 조례를 상급부서에 질의하고 제정한다는 사실은 정말 아이러니(irony)한 일이다. 지자체 조례의 상위법인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반하는 특정지역의 공공요금인상을 규정한 창원시조례는 당연히 원천무효(源泉無效)라 할 것이다.



인기 아파트, 피서

검색

자세히



뉴스 / 오피니언 / 스포츠·연예 / 문화·생활 / 기획·특집 / 인물 / 인사·동

로그인 회원가입 전체기사 | 지역 | 사회 | 정치·행정 | 수산·조선 | 경제 | 교육 | 국제 | 62지방선거

홈 > 뉴스 > 오피니언 > 미춘모 칼럼

뒤로가기 >

메일보내기 오류신고 프린트 +가 -가

## 위법(違法)한 조례는 무효다

객원칼럼니스트

2010년 12월 30일 (목) 18:45:00

매일경남 webmaster@maeilgn.com

법(法)은 사회를 유지하고 통제하는 하나의 수단이다. 법은 질서를 유지하고 정의를 실현함을 목적으로 하고 국가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사회규범을 말한다. 국가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사회 규범인 법은 국가 및 공공 기관이 제정한 법률·명령·규칙·조례를 포함한다.



사회의 작동원리를 명문화한 것이 법이라 할 때 ‘법의 지배’는 공정사회의 초석이자 최후의 보루다. 법이 가장 권위 있는 사회규범이어야 하고, 법 자체가 공정해야 함과 동시에 법의 적용과 해석 또한 공정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법(法)마저 무시하는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은 안타깝고 갑갑한 느낌이다.

진해·마산·창원이 통합된 지자체 통합과정에서부터 시작된 적법하지 못한 법 운영으로 꼬이기 시작한 창원시의 지방자치행정은 이제 법마저 무시하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이라는 중차대한 문제를 지방자치의 기본인 주민투표도 거치지 않고 의결권 없는 시의회 의원들의 의결만으로 지자체통합을 한다는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법이나 질서란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감당하기 어려운 도미노 현상을 일으키며 무너지기 마련이다. 다양한 인간의 욕구충족을 위해서 가끔은 정치가 법위에 군림하기도 하지만 법은 만민에게 평등해야 한다는 사실은 불변의 가치인 것이다.

그러나 이번 창원시에서 지자체 통합과정에 개정된 조례 일부는 법의 체계(體系)마저 무시하는 황당한 사건이라는 생각이다. 한 국가의 틀을 유지하는 헌법(憲法)은 국가 통치 체제의 기초에 관한 각종 근본 법규의 총체다. 또한 특별법(特別法)은 일반법에 달리 미치는 효력이 특정 대상과 지역에 한정된다. 그것을 추진하는 사업에 특별법 우선원칙에 따라 수많은 일반법이 한정적으로 제한되거나 정지되기도 하는 것이 특별법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적법하지 못한 진해, 마산, 창원의 지자체통합 과정의 법률적 근거를 위해서 지난 3월12일 『경상남도 창원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지난 10월1일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다시 제정하여 추진하는 형식으로 시행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사인간의 계약에도 자신의 목적달성이나 계약의 성사를 위해서는 계약당사자에게 각종 이권을 제시하거나 상대의 기대치를 높이기 위한 수단이 동원되기 마련이다. 같은 이유로 지방자치단체를 통합하려는 주민들의 기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3조(불이익배제의 원칙)에는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으로 인하여 종전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특정 지역의 행정상·재정상 이익이 상실되거나 그 지역 주민에게 새로운 부담이 추가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사실을 특별법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는 지자체통합으로 인해 시민가계에 미칠 영향을 “부담은 최소한으로 혜택은 최대한으로 한다.”는 원칙을 규정한 것이다.

원래 지방자치의 규정인 조례(條例)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그 지방의 사무에 관하여 제정하는 법을 말한다.

그런데 창원시장은 조례의 상위법이며 특별법인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3조(불이익배제의 원칙)를 무시하고 구, 진해시민들이 부담하던 공공요금인 하수도요금 41.1%, 상수도요금 1.4%, 쓰레기봉투 가격 27%를 인상하는 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해서 개정했다.

상위법에 반하는 조례안을 제출하는 창원시장은 법마저 무시한다는 생각이다. 의회 전문위원은 공공



요금 인상으로 시민가계에 미치는 영향이나 “무담은 최소한으로, 혜택은 최대한으로 한다.”라는 특별법의 불이익 배제원칙을 제시하며 심도 있는 질의답변과 논의를 거쳐 심사해야 할 것을 권유하는 심사보고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조례는 정서적 판단보다는 냉철한 판단이 더 중요할 것 같다.”는 진해지역 출신이며 환경문화위원회 간사인 조준택의원의 발언은 과연 시정을 견제하고 감시 감독하고 주민의사를 대변하라고 선출한 시의원의 발언이 맞는지 의문을 지울 수 없다.

상하수도요금이나 폐기물처리수수료 같은 공공요금은 시민가계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특별히 요금체계를 조례로 제정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다. 이런 중요한 문제를 한번에 40여%씩 인상을 하면서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 자치제도과를 방문하여 명확한 답변을 얻고자 하였으나 이에 대한 답변을 내려주지 않아서 지자체의 판단으로 인상안을 조례로 제정했다.”는 창원시장이 발표한 보도 자료는 참으로 한심하다.

법을 집행하는 전문가 집단이 나 같은 법률적 전문지식이 없는 사람이 판단해도 간단한 법리적 해석을 이해하지 못하고 위법 부당한 조례를 상급부서에 질의하고 제정한다는 사실은 정말 아이러니(irony)한 일이다. 지자체 조례의 상위법인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반하는 특정지역의 공공요금인상을 규정한 창원시조례는 당연히 원천무효(源泉無效)라 할 것이다.

# 17

비판(批判)과 비난(非難)의 차이

국어사전에서 비판(批判)은 사물의 옳고 그름을 가리어 판단하거나 밝히는 일. 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반면 비난(非難)은 남의 잘못이나 결점을 책잡아서 나쁘게 말하거나 터무니없이 사실과 전혀 맞지 않게 헐뜯는 말이라고 설명한다.

일반적으로 사람마다 세상을 사는 방법이 다르고 세상을 보는 시각이나 판단기준도 다르기 마련이라 우리는 복잡한 사회적 기능을 유지하고 사회가 발전하기 위해서 사물의 옳고 그름을 가리어 판단하거나 밝히는 비판기능을 올바른 민주사회의 절대적 가치로 삼는다.

이와 같은 이유로 우리는 사회적 공인에게는 좀 더 정밀한 기준과 잣대로 과감한 비판을 하기 마련이고 공인의 사회적 가치나 기준은 개인의 사적영역의 일정부분을 침해하기도 한다.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가 공인이 아니라면 연평도의 ‘보온병 포탄’ 발언이나 어느 점심식사자리에서 “요즘 룸에 가면 오히려 ‘자연산’을 찾는다고 하더라.”는 말 한 마디가 성희롱으로 비화되어 일파만파로 큰 파장을 일으키며 언론과 야당의 집중적 비판(批判)을 받지 않아도 될 것이다.

나는 지난번 칼럼에서 “전자메일도 읽지 않는 창원시의회 의원들”이라는 글을 쓴 일이 있다. 말에는 말귀가 있다고 한다. 글에는 글이 표현하고자 하는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글에 표현된 의미의 앞뒤를 연결하는 문맥(文脈)이 있다. 말은 말귀를 알아들어야 한다고 하고 글은 글의 문맥을 읽을 줄 알아야 글을 읽는다고 할 것이다. 나는 분명히 2010년의 화두는 “소셜”이라는 전제를 달고 창원시민들의 선량(選良)인 창원시의회 의원들이 빠른 시대적 변화에 적응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쓴 글이다.

창원시의회 의원들이 사회적 책임이 있는 공인이라면 신문이라는 공적인 공간에 쓰는 칼럼도 분명한 사회적 책임이 따르기 마련이다. 나는 창원시의회 의원들에게 세 번 전체메일을 발송한 통계를 인용했고 통계의 오차범위와 G-mail 이나 익스플로러에서 읽을 경우에는 “읽음” 표시를 하지 않을 가능성까지 계산한다는 내용을 썼다. 그러나 글의 문맥을 이해할 생각은 하지 못하고 자신의 신분도 밝히지 않고 전화로 다짜고짜 항의부터 하는 모 시의원의 절제되지 못한 항의와 언행은 황당할 따름이다. 자신의 이름이 빠진 사실을 거론하고 명예훼손 운운하면서 사과를 요구하고 다그치는 항의는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

물론 내가 문학을 전공했거나 글 쓰는 일이 직업도 아닌 입장이라 칼럼을 쓰다가 조금이라도 애매한 단어들은 국어사전을 찾기도 한다. 그러나 “시의원들”이라는 “들”자를 문제 삼고 따지는 어느 의원과 한 “들”자 논쟁은 차라리 애교스런 사연이다. “들”자는 조사와 의존명사에서 그 문장의 주어가 복수임을 나타내는 보조사이거나 두 개 이상의 사물을 나열할 때 쓰는 말이라는 해명으로 항의 논쟁을 종결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할 일이 없어서 이런 글이나 쓰고 메시지를 보네느냐고 따지고 항의하는 어느 시의원은 내가 내는 세금이 단 한 푼이라도 자신의 세비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마 잠시 잊어버린 모양이다.

그리고 지자체 통합과정에서 그렇게 불이익배제 원칙을 강조했지만 창원시의회 의원들이 이번 회기에 의결한 조례개정으로 나는 상수도 요금은 1㎥당 590원을 내야하고 쓰레기봉투 10ℓ을 240원에 사서 써야 한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한다.

시의원들의 일거수일투족(一舉手一投足)이 창원시민인 나에게 미치는 대단한 영향력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창원시민들의 의사를 대변하는 시의원은 공인이다. 공인은 다양한 시민들의 어떤 의견이나 비판도 겸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폭 넓은 가슴이 필요하다. 그리고 공인은 최소한 비판(批判)과 비난(非難)정도는 구분할 능력도 필요할 것이다.

창원시의회 홈페이지에 의원들의 이메일주소와 전화번호를 공지한 사실은 시민들과 소통하기 위한 공인된 제도다. 그러나 내가 지금까지 창원시의회 의원들에게 무려 220통의 메일을 발송했지만 이상인 의원 딱 한 분의 짧은 답장만 받았다면 소통은 거의 불통 수준이다. 항상 분노는 행동을 끌어내는데 가장 확실한 에너지다. 그러나 분노가 정의와 공정성을 통해 검증받지 않는다면 공적(公的) 동의(同意)를 받을 수 없다.



# 매일경남



2009년 8월 10일 창간 ☎(055)638-0138 / FAX (055)638-9894

www.maeilgn.com

제348호 2010년 12월 27일 월요일 단가 433원 (음력 11월 15일)

## 이준모 칼럼

## 비판(批判)과 비난(非難)의 차이



이 준 모

진해시민모임 집행위원장  
객원칼럼니스트

국어사전에서 비판(批判)은 사물의 옳고 그름을 가리어 판단하거나 밝히는 일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반면 비난(非難)은 남의 잘못이나 결점을 책잡아서 나쁘게 말하거나 터무니없이 사실과 전혀 맞지 않게 헐뜯는 말이라고 설명한다.

일반적으로 사람마다 세상을 사는 방법이 다르고 세상을 보는 시각이나 판단기준도 다르기 마련이라 우리는 복잡한 사회적 기능을 유지하고 사회가 발전하기 위해서 사물의 옳고 그름을 가리어 판단하거나 밝히는 비판기능을 올바른 민주사회의 절대적 가치로 삼는다.

이와 같은 이유로 우리는 사회적 공인에게는 좀 더 정밀한 기준과 잣대로 과감

한 비판을 하기 마련이고 공인의 사회적 가치나 기준은 개인의 사적영역의 일정부분을 침해하기도 한다.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가 공인이 아니라면 연평도의 '보은병 포탄' 발언이나 어느 점심식사자리에서 "요즘 물에 가면 오히려 '자연산'을 찾는다"고 하더라."는 말 한 마디가 성희롱으로 비화되어 일파만파로 큰 파장을 일으키며 언론과 야당의 집중적 비판(批判)을 받지 않아도 될 것이다.

나는 지난번 칼럼에서 "전자메일도 읽지 않는 창원시의회 의원들"이라는 글을 쓴 일이 있다. 말에는 말귀가 있다고 한다.

글에는 글이 표현하고자 하는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글에 표현된 의미의 앞뒤를 연결하는 문맥(文脈)이 있다. 말은 말귀를 알아들어야 한다고 하고 글은 글의 문맥을 읽을 줄 알아야 글을 읽는다고 할 것이다.

나는 분명히 2010년의 화두는 "소셜"이라는 전제를 달고 창원시민들의 선량(善良)인 창원시의회 의원들이 빠른 시대적 변화에 적응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쓴 글이다.

창원시의회 의원들이 사회적 책임이 있는 공인이라면 신문이라는 공적인 공간에 쓰는 칼럼도 분명히 사회적 책임이 따

기 마련이다.

나는 창원시의회 의원들에게 세 번 전자메일을 발송한 봉계를 인용했고 봉계의 오차범위와 G-mail이나 익스플로러에서 읽을 경우에는 "읽음" 표시를 하지 않을 가능성까지 계산 한다는 내용을 썼다.

그러나 글의 문맥을 이해할 생각은 하지 못하고 자신의 신분도 밝히지 않고 전화로 다짜고짜 항의부터 하는 모 시의원의 질제되지 못한 항의와 언행은 황당할 따름이다. 자신의 이름이 빠진 사실을 거론하고 명예훼손 운운하면서 사과를 요구하고 다그치는 항의는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

물론 내가 문학을 전공했거나 글 쓰는 일이 직업도 아닌 입장이라 칼럼을 쓰다가 조금이라도 애매한 단어들은 국어사전을 찾기도 한다. 그러나 "시의원들"이라는 "들"자를 문제 삼고 따지는 어느 의원과 한 "들"자 논쟁은 차라리 예고스런 사연이다. "들"자는 조사와 의존명사에서 그 문장의 주어가 복수임을 나타내는 보조사이거나 두 개 이상의 사물을 나열할 때 쓰는 말이라는 해명으로 항의의 논쟁을 종결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할 일이 없어서 이런 글이나 쓰고 메시지를 보내느냐고 따지고 항의하는 어느 시의원은 내가 내는 세금이 단 한 푼

이라도 자신의 세비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마 잠시 잊어버린 모양이다.

그리고 지자체 통합과정에서 그렇게 불이익배제 원칙을 강조했지만 창원시의회 의원들이 이번 회기에 의결한 조례개정으로 나는 상수도 요금은 1㎥당 590원을 내야하고 쓰레기봉투 10ℓ을 240원에 사서 써야 한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한다.

시의원들의 일거수일투족(一舉手一投足)이 창원시민인 나에게 미치는 대단한 영향력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창원시민들의 의사를 대변하는 시의원은 공인이다. 공인은 다양한 시민들의 어떤 의견이나 비판도 겸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폭 넓은 가슴이 필요하다. 그리고 공인은 최소한 비판(批判)과 비난(非難)정도는 구분할 능력도 필요할 것이다.

창원시의회 홈페이지에 의원들의 이메일주소와 전화번호를 공지한 사실은 시민들과 소통하기 위한 공인된 제도다.

그러나 내가 지금까지 창원시의회 의원들에게 무려 220통의 메일을 발송했지만 이상인 의원 딱 한 분의 짧은 답장만 받았다면 소통은 거의 불통 수준이다.

항상 분노는 행동을 끌어내는데 가장 확실한 에너지다. 그러나 분노가 정의와 공정성을 통해 검증받지 않는다면 공적(公的) 동의(同意)를 받을 수 없다.

# 18

전자메일도 읽지 않는 창원시의회의원들

2010년의 화두는 아마도 ‘소셜’이라는 단어일 것이다. 트위터나 페이스북, 그리고 블로그 등 소셜 미디어가 우리 사회의 주요한 의사소통 플랫폼으로 빠르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급속하게 진화하는 소셜 미디어가 무엇이며 이 미디어가 우리사회에 가져다주는 가치와 함의(含意) 등을 사려 깊게 해석하고 받아 드리려는 정치인들은 드문 실정이다.

과거 대부분의 정치정보가 정부나 정치인에 의해 생산되었고, 그 중 필요한 만큼만 일방적으로 시민들에게 전달되었다. 그러나 이제는 네트워크의 확산으로 인해 정치정보의 독점생산과 선별적 유통은 더 이상 불가능하다. 오히려 시민들이 더 많은 정보를 생산하고 유통하고 있다. 정치정보 유통의 변화로 정치권력은 수평적 권력관계와 함께 정치인과 시민 사이의 커뮤니케이션 방식도 하향식, 단방향에서 상향식, 쌍방향으로 달라지고 있다.

국민들이 선출한 대표자들을 통해 법률제정 및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정치제도인 대의정치(代議政治)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의사를 대변하기 위해 국민들과 정치인들은 부단하게 소통하는 문제일 것이다. 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 하반기 국정 키워드로 '공정한 사회'와 '소통'을 강조하고 있지만 국민들이 함께 공감하지 못하는 소통은 진정한 소통이 아니다. 공감이야말로 인간 본성의 1차적 특성이며 이러한 '공감'이 인류의 문명을 진화시켜왔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최근 몇몇 진보성향의 정치인들이 트위터(twitter)나 페이스북(Facebok)을 통해 국민들과 직접 대화하고 소통하며 공감하려는 노력과 시도를 하고 있으나 실험적 단계의 수준이다. 하루에 평균 15,8 트윗을 하는 노회찬 의원은 96,602명을 팔로우하고 있다. 하루에 13,7 트윗을 하는 정동영 의원을 비롯하여 원희룡 의원 11,9 트윗, 권영길 의원은 5,5 트윗, 남경필 의원이 하루 평균 2,1 트윗을 하는 반면 유시민 의원은 하루 15만 592명에게 평균 1,0 트윗을 보내면서 171명만 팔로우하며 이야기를 듣고 있다. 김두관 경남지사는 하루 0,4 트윗을 1만2천여 명에게 보내며 만여 명을 맞팔 하고 있으나 박완수 창원시장은 트위터 계정이 조회도 되지 않는 소통부재의 흥미로운 모습이다.

창원시 의회 홈페이지에는 의원들 각자 프로필과 전자메일 주소 및 전화번호가 게시되어있다. 나는 아마도 시민들의 의사를 수렴하고 소통하려는 의도라는 생각으로 지난 8월 31일과 11월 8일, 12월 1일 등 3회에 걸쳐서 창원시의회의 의원 전원에게 전자메일을 발송한 일이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창원시의의원 전체 55명 중에 시민이 발송한 전자메일을 모두 읽는 의원은 20%인 11명(김성일, 김경희, 유원석, 이상인, 이성섭, 이혜련, 장병운, 전수명, 조갑련, 조준택, 홍성실) 뿐이었다.

가끔은 G-mail이나 익스플로러에서 읽을 경우 “읽음” 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를 계산하더라도 14,5%인 8명(김문웅, 김성준, 김윤희, 김종식, 박삼동, 이형조, 정광식, 정쌍학)은 전혀 전자메일을 읽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더욱 흥미로운 사실은 시민이 발송한 전자메일을 받은 시의원 누구도 시민이 보낸 의견에 대한 반응이나 소통의사가 없었다는 사실이다. 최소한 메일을 잘 읽었다 던지 아니면 의견을 참고하겠다는 정도의 답장을 보내기는 아주 쉬운 일이지만 누구도 답장이 없다.



숫자를 계산하는 방법은 암산을 하거나 수판을 이용하던 시절도 있었다. 그러나 전자계산기가 나오면서 더 빠르고 정확한 전자계산기를 모두 이용하면서 이제는 수판은 구경조차 하기가 어렵다. 최근에는 컴퓨터에서 아예 모두 자동으로 계산을 해 주거나 엑셀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일일이 계산할 필요도 없는 시대가 되었다. 시대의 변화는 전자계산기마저 좀 촌스럽고 비능률적인 모습으로 보이는 시대다. 이와 같이 인간은 시대가 바뀌고 세상이 변화하면서 발전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변화에 적응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전자메일도 읽지 않는 창원시의회 의원들은 급속하게 진화하며 소셜 미디어(SNS)로 소통하는 시대적 변화나 의식을 거부하려는 모습 같아 안타까운 생각이다.



# 매일경남



2009년 8월 10일 창간

☎ (055) 638-0138 / FAX (055) 636-9894

www.maeilgn.com

제343호 2010년 12월 20일 월요일 단가 4343원 (음력 11월 15일)

## 이준모 칼럼

## 전자메일도 읽지 않는 창원시의회 의원들



이 준 모

진해시민포럼 집행위원장  
객원칼럼니스트

2010년의 화두는 아마도 '소셜'이라는 단 어일 것이다. 트위터나 페이스북, 그리고 블 로그 등 소셜 미디어가 우리 사회의 주요한 의 사소통 플랫폼으로 빠르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급속하게 진화하는 소셜 미디어 가 무엇이며 이 미디어가 우리사회에 가져다 주는 가치와 함의(含意) 등을 살펴 깊게 해석 하고 받아 드려려는 정치인들은 사실상 드문 실정이다.

과거 대부분의 정치정보가 정부나 정치인 에 의해 생산되었고, 그 중 필요한 만큼만 일 방적으로 시민들에게 전달되었다.

그러나 이제는 네트워크의 확산으로 인해

정치정보의 독점생산과 선별적 유통은 더 이 상 불가능하다. 오히려 시민들이 더 많은 정 보를 생산하고 유통하고 있다.

정치정보 유통의 변화로 정치권력은 수평 적 권력관계와 함께 정치인과 시민 사이의 커뮤니케이션 방식도 하향식, 단방향에서 상 향식, 쌍방향으로 달라지고 있다.

국민들이 선출한 대표자들을 통해 법률제 정 및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정치제도인 대의 정치(代議政治)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의사를 대변하기 위해 국민들과 정 치인들은 부단하게 소통하는 문제일 것이다.

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 하반기 국정 키워드로 '공정한 사회'와 '소통'을 강조하 고 있지만 국민들이 함께 공감하지 못하는 소통은 진정한 소통이 아니다. 공감(共感)이란 인간 본성의 1차적 특성이며 이러한 '공감'이 인류의 문명을 진화시켜왔다는 것은 분명 한 사실이다.

최근 몇몇 진보성향의 정치인들이 트위터 (twitter)나 페이스북(Facebok)을 통해 국민들 과 직접 대화하고 소통하며 공감하려는 노력 과 시도를 하고 있으나 실험적 단계의 수준 이다.

하루에 평균 15.8 트윗을 하는 노회찬 의 원은 96,602명을 팔로우하고 있다. 하루에

13.7 트윗을 하는 정동영 의원을 비롯하여 원희룡 의원 11.9 트윗, 권영길 의원은 5.5 트 윗, 남경필 의원이 하루 평균 2.1 트윗을 하 는 반면 유시민 의원은 하루 15만 592명에게 평균 1.0 트윗을 보내면서 171명만 팔로우하 며 이야기를 듣고 있다.

김두관 경남지사는 하루 0.4 트윗을 1만 2000여 명에게 보내며 만여 명을 맞팔 하고 있으나 박원수 창원시장은 트위터 계정이 조회도 되지 않는 소통부재의 흥미로운 모 습이다.

창원시 의회 홈페이지에는 의원들 각자 프 로필과 전자메일 주소 및 전화번호가 게시되 어있다. 나는 아마도 시민들의 의사를 수렴 하고 소통하려는 의도라는 생각으로 지난 8 월 31일과 11월 8일, 12월 1일 등 3회에 걸쳐 서 창원시의회 의원 전원에게 전자메일을 발 송한 일이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창원시의회 전체55명 중 에 시민이 발송한 전자메일을 모두 읽는 의원은 20%인 11명(김성일, 김경희, 유원석, 이상인, 이성섭, 이혜련, 장병은, 전수명, 조 갑련, 조준택, 홍성실) 뿐이었다.

가끔은 G-mail이나 익스플로러에서 읽을 경우 "읽음" 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를 계산 하더라도 14.5%인 8명(김문웅, 김성준, 김

윤화, 김종식, 박산동, 이형조, 정광식, 정쌍 해)은 전혀 전자메일을 읽지 않는 것으로 보 인다. 더욱 흥미로운 사실은 시민이 발송한 전자메일을 받은 시의원 누구도 시민이 보낸 의견에 대한 반응이나 소통의사가 없었다는 사실이다. 최소한 메일을 잘 읽었다 던지 아 니면 의견을 참고하겠다는 정도의 답장을 보 네기는 아주 쉬운 일이지만 누구도 답장이 없다.

숫자를 계산하는 방법은 암산을 하거나 수 판을 이용하던 시절도 있었다. 그러나 전자 계산기가 나오면서 더 빠르고 정확한 전자계 산기를 모두 이용하면서 이제는 수판은 구경 조차 하기가 어렵다. 최근에는 컴퓨터에서 아예 모두 자동으로 계산을 해 주거나 엑셀 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일일이 계산할 필요도 없는 시대가 되었다. 시대의 변화는 전자계산기마저 좀 촌스럽고 비능률적인 모 습으로 보이는 시대다.

이와 같이 인간은 시대가 바뀌고 세상이 변화하면서 발전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변화 에 적응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전자메일도 읽지 않는 창원시의회 의원들은 급속하게 진화하며 소셜 미디어 (SNS)로 소통하는 시대적 변화나 의식을 거 부하려는 모습 같아 안타까운 생각이다.

\* 오타정정합니다. [박산동의원은 박삼동의원의 오기일을 정정합니다.]

# 19

정답 없는 창원시장의 정치적 계산

한 동안 유전무죄(有錢無罪), 무전유죄(無錢有罪)'라는 말이 유행하던 시절이 있었다. 지난 88 올림픽이 끝난 직후에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에서 인질극을 벌리던 범인들이 TV로 생중계 되는 가운데 한 말이다. 범인은 사회의 불평등에 대한 절규를 하면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 유행어가 되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수많은 사람들의 얼굴모습이 모두가 다른 모습같이 똑같은 일이라도 보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보거나 똑 같은 사실(fact)도 서로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판단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 다름을 인정하면서 서로 다른 정도의 차이를 감각적으로 계산하고 수용하는 상식이라는 능력도 있다. 하나에 하나를 더하면 둘이라는 것은 수학적인 정답이다. 그러나 하나에 하나를 더하면 둘도 되고 셋도 될 수 있다는 것은 복잡한 사회적 관계망을 유지하며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 사는 이치인 것이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스스로 정한 어떤 법이나 규정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일이거나 답이 없는 난제들은 보통 정치적으로 해결하라는 주문을 하기도 한다. 정치적 계산이란 하나에 하나를 더하면 둘도 되고 셋도 될 수 있는 아주 편리한 계산 방법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무리 정치적 계산이라고 할지라도 답이 아무것도 없는 제로(zero)거나 무한대는 답이 아니다. 아무리 정치적 계산이라도 분명히 일정 수준은 서로가 동의할 수 있는 답은 있어야 정치적 해결이라는 말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지자체 통합과정에서 지역 국회의원이나 창원시장이 하는 정치적 계산은 전혀 답도 없는 이상한 계산을 하는 것 같아서 지역주민들은 궁금증만 더해 간다. 진해지역 김학송 국회의원은 지난 6,2지방선거를 앞두고 구, 해군교육사령부(구, 육대)부지를 군 관사 460세대를 지어주고 시유지로 양여 받는다는 MOU체결을 주선했다. 박완수 창원시장은 지자체 통합 일성으로 구, 시운학부 터 매각을 서둘러 발표하면서 지역 시민단체와 기자회견을 주고받았다. 창원시장은 구, 시운학부 터의 매각을 반대하며 공영개발을 요구하는 지역 시민단체가 기자회견을 하던 날 즉시 시민단체를 반박하고 비하하는 기자회견을 한 일이 있다.

지역 시민단체를 반박한 창원시장의 기자회견문은 통합 전 해군과 체결한 MOU의 성실한 이행과 업무의 연속성을 주장하며 구, 시운학부 터 매각의 타당성을 주장 했다. 그러나 14일 창원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창원시 내년도 예산인 2조 2,465억 원에는 해군관사 신축 예산은 한 푼도 책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통합 일성으로 창원시장이 구, 시운학부 터 매각을 서둘러 발표한 강한 의지로 군 관사 건립의지도 있어야 구, 교육사 부지를 시유지로 확보하고 통합청사 유치나 진해 서부지역 개발이 가능한 일이라는 계산정도 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아주 쉬운 계산이다.

박완수 창원시장이 국가기관의 예산은 세입과 세출은 엄연히 구분한다는 사실을 모를 이유도 없다. 구, 시운학부 터를 매각하는 것은 세입 예산이고 군 관사 건립을 위한 세출 예산은 당연히 다른 항목으로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거나 조건부 특별회계를 편성해야 하는 것이다.

전혀 답이 없는 구, 시운학부 터 매각과 군 관사 건립을 연계하여 주장하는 창원시장의 정치적 계산을 나는 이해할 수 없다. 어떤 자금조달 계획도 없이 군 관사 건립을 약속하고 MOU 체결을 주선했던 김학송 국회의원의 정치적 계산도 답이 없기는 마찬가지라는 생각이다.

아무리 정치적 계산으로 하는 말이라도 지역 주민들의 주장이나 국회의원 정도라면 답도 없는 정치적 계산으로 시민들을 속이려고 하거나 시민들이 신뢰할 수 없는 이야기들은 함부로 하지 말아야 한다. 이제는 스마트폰같이 스마트한 시민들은 정치적 쇼나 정답 없는 정치적 계산 정도는 구분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지면 보도 내용 -〉 아래 그림을 더블클릭하면 원본을 읽을 수 있습니다. 〉



# 매일경남



2009년 8월 10일 정간

☎ 0551638-0138 / FAX 0551636-9894

www.maeilgn.com

제342호 2010년 12월 17일 금요일 단가 4343원 (음력 11월 12일)

## 이준모 칼럼

## 정답 없는 창원시장의 정치적 계산



이 준 모

진해시민포럼 집행위원장  
격원칼럼니스트

한 동안 '유전무죄(有錢無罪), 무전유죄(無錢有罪)'라는 말이 유행하던 시절이 있었다. 지난 88 올림픽이 끝난 직후에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에서 인질극을 벌리던 범인들이 TV로 생중계 되는 가운데 한 말이다. 범인은 사회의 불평등에 대한 질주를 하면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 유행어가 되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사람들의 얼굴모습이 각기 다른 것 같이 똑같은 일이라도 보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보거나 똑 같은 사실(fact)도 서로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판단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 다름을 인

정하면서 서로 다른 정도의 차이를 감각적으로 계산하고 수용하는 상식이라는 능력이 있다.

하나에 하나를 더하면 둘이라는 것은 수학적인 정답이다. 그러나 하나에 하나를 더하면 둘도 되고 셋도 될 수 있다는 것은 복잡한 사회적 관계망을 유지하며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 사는 이치인 것이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스스로 정한 어떤 법이나 규정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일이거나 답이 없는 난제들은 보통 정치적으로 해결하라는 주문을 하기도 한다. 정치적 계산이란 하나에 하나를 더하면 둘도 되고 셋도 될 수 있는 아주 편리한 계산 방법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무리 정치적 계산이라고 할지라도 답이 아무것도 없는 제로(Zero)거나 무한대는 답이 아니다. 아무리 정치적 계산이라도 분명히 일정 수준은 서로가 동의할 수 있는 답은 있어야 정치적 해결이라는 말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지자체 통합과정에서 지역 국회의원이나 창원시장이 하는 정치적 계산은 전혀 답도 없는 이상한 계산을 하는 것 같아

서 지역주민들은 궁금증만 더해 간다.

진해지역 김학송 국회의원은 지난 6·2지방선거를 앞두고 구, 해군교육사령부(구, 육대)부지를 군 관사 460세대를 지어주고 시유지로 양여 받는다는 MOU체결을 주선했다.

박원수 창원시장은 지자체 통합 일성으로 구, 시운학부 터 매각을 서둘러 발표하면서 지역 시민단체와 기자회견을 주고받았다. 창원시장은 구, 시운학부 터 매각을 반대하며 공영개발을 요구하는 지역 시민단체가 기자회견을 하던 날 즉시 시민단체를 반박하고 비하하는 기자회견을 한 일이 있다.

지역 시민단체를 반박한 창원시장의 기자회견문은 통합 전 해군과 체결한 MOU의 성실한 이행과 업무의 연속성을 주장하며 구, 시운학부 터 매각의 타당성을 주장 했다.

그러나 지난 14일 창원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창원시 내년도 예산인 2조 2465억 원에는 해군관사 신축 예산은 한 톨도 책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통합 일성으로 창원시장이 구, 시운학부 터 매각을 서둘러 발표한 강한 의지로 군 관사 건립의지도 있어야 구, 교육사 부지를 시유지로 확보하고 통합청사 유치나 진해 서부지역 개발이 가능한 일이라

는 계산정도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아주 쉬운 계산이다.

박원수 창원시장의 국가기관의 예산은 세입과 세출은 엄연히 구분된다는 사실을 모를 이유도 없다. 구, 시운학부 터를 매각하는 것은 세입 예산이고 군 관사 건립을 위한 세출 예산은 당연히 다른 항목으로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거나 조건부 특별회계를 편성해야 하는 것이다.

전혀 답이 없는 구, 시운학부 터 매각과 군 관사 건립을 연계하여 주장하는 창원시장의 정치적 계산을 나는 이해할 수 없다. 어떤 자금조달 계획도 없이 군 관사 건립을 약속하고 MOU 체결을 주선했던 김학송 국회의원의 정치적 계산도 답이 없기는 마찬가지라는 생각이다.

아무리 정치적 계산으로 하는 말이라도 지역 주민들의 주장이나 국회의원 정도라면 답도 없는 정치적 계산으로 시민들을 속이려고 하거나 시민들이 신뢰할 수 없는 이야기들은 함부로 하지 말아야 한다.

이제는 스마트폰같이 스마트한 시민들은 정치적 쇼나 정답 없는 정치적 계산 정도는 구분할 수 있기 때문이다.

# 20

깊은산속옹달샘하루명상체험기



지난 주말에는 고도원의 아침편지가 운영하는 깊은 산속 옹달샘을 다녀왔다. 그동안 고도원의 아침편지를 통해서 충청북도 충주에 있는 노은면의 어느 산속에서 명상센터를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하루명상이나 비체명상 또는 꿈꾸는 부부학교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사실도 알고 있다. 그런데 하루명상 체험코스에 초청하는 행사에 초대장을 받았다.

마침 나는 지난해부터 우연한 기회에 시민운동을 한답시고 이런저런 문제에 시비를 걸면서 자신을 스스로 통제할 수 없을 만큼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자신의 기준과 잣대로 간섭하는 이상한 버릇이 생겼다. 나도 모르게 어느 사이에 자신이 마치 무슨 투사라도 된 양 용감하게 수시로 창원시청 브리핑 룸을 찾아가 기자회견도 하고 신문에 기고문도 쓰기가 일수다. 마치 싸움닭이라도 된 것 같이 참견할 일이건 아니건 두루 참견을 하면서 주위에 시비를 걸다보니 차츰 주변사람들이 하나 둘씩 나를 떠나고 있다는 느낌이다. 자신을 한번쯤 돌아보고 쉬어갈 필요를 느끼던 터라 하루명상 프로그램이 나에게서는 무척 반가운 기회다.

새벽 4시에 일어나 5시에 출발해서 충주휴게소에 들러 아침을 먹고 주위를 살피니 휴게소 뒤편에는 아직 녹다 남은 잔설들이 보이는 것으로 보아 진해에서는 느끼지 못하던 추운 겨울이 이미 온 모양이다. 산길을 굽이돌아 올라가는 길에는 아직도 추워서 미처 녹지 못한 눈들이 나를 반긴다. 충주 문성 자연휴양림을 지나자 눈이 발목을 잡고 있는 옹달샘 대형버스가 옹달샘입구 안내판을 걸머지고 나를 기다리는 모양이다.

주차장을 지나 미끄러운 눈길에 겁을 먹고 엉거주춤한 어정걸음을 걸으며 작은 나무다리를 건너서 오르는 오솔길은 깊은 산속 옹달샘을 찾아 오르는 느낌을 나에게 넉넉히 안겨준다. 작은 언덕을 오르자 “꿈은 이루어진다.” 는 안내문과 함께 깊은 산속 옹달샘을 개척하고 만든 손길들의 이름들을 빨간 벽돌에 새긴 벽간판이 이채롭다. 예상보다 일찍 도착해서 아직은 이른 아침이라 나는 인기척이 뜸한 주변을 돌면서 주변 경관들을 카메라에 담았다.

접수와 오리엔테이션을 마치고 깊은 산속 옹달샘이 처음 자리를 잡으며 세웠다는 첫 문에서 고도원님이 안내하는 걷기명상을 시작했다. 모두가 한 줄로 이어 서서 아주 느리고 느린 걸음으로 산길을 오른다. 얼마를 지나자 크게 징이 한번 울리면 모두가 잠시 걸음을 멈추며 산에는 고요가 찾아 든다. 정적(靜寂)이 온 몸을 감싸며 멀고 가까운 바람소리 새소리가 들린다. 세상을 살면서 힘들고 어려웠던 모든 짐들을 산길에 버리고 모두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만 가지고 가라는 걷기명상의 깊은 뜻을 모두 받아드리기에 아직은 내가 너무 작은 그릇인지 모르겠다.

점심식사를 하다가도 종이 한번 울리면 모두가 그대로 멈추는 짧은 순간의 고요와 정적이 흐른다. 그 짧은 순간에 마치 자신의 기나긴 삶의 여정이 빠르게 뇌리를 스치는 느낌이다. 오수명상이나 향기명상 그리고

춤 명상을 경험하면서 인간의 영육(靈肉)이 각기 다른 영역에서 나를 지배하고 있을지 모른다는 평소 이해하기 힘든 느낌도 든다. 고도원의 아침편지라는 전자메일 하나를 매개로 서로 소통하면서 이렇게 큰 힘을 모을 수 있었던 것은 마음과 마음이 통하고 가슴과 가슴이 소통한 결과일 것이다.

사람들이 누구나 가슴에 응어리진 모든 미움과 원망을 비우고 용서와 사랑으로 뜨거운 가슴을 채운다는 일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미움과 용서들을 깊은 산속 옹달샘 여기저기에 버리고 간 흔적들이 보인다. 욕심과 미움을 버리고 용서하는 마음이 벽돌 한 장을 쌓고 나무 한그루를 심었을 것이다.

영육이 혼란스럽던 하루의 피로감을 느끼며 수원에 있는 아들집에 도착하자마자 잠에 취해 버렸다. 하루 밤을 자고 진해로 돌아오는 귀향길은 유난히 정신이 맑아진 느낌을 느끼며 승용차의 주행속도를 알리는 계기가 이상하게 시속 100km 속도를 넘지 않으면서 편안한 마음의 여유를 느끼고 있었다. 이유 없이 남의 일에 참견하고 정의와 자유, 선과 진실,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원칙과 상식을 오로지 자신의 잣대와 기준에 맞추어 남을 비판하는 일로 일관하던 스스로를 다시 돌아본다.

과연 내가 오직 자신의 잣대와 기준으로 비판하는 사람의 위치에 있었다면 나는 얼마나 잘할 수 있을까?



깊은 산속 옹달샘을 들어가는 입구에서 만난 잔설들의 모습이다.



옹달샘 입구에는 충주 문성자연휴양림이 먼저 길손을 맞는다.





웅달샘 버스가 눈길에 발이 묶인채 웅달샘 입구를 안내한다.



온달샘을 오르는 오솔길이다.



























갯기명상이 시작되는 첫문입구의 모습이다.











아직도 깊은 산속 웅달샘의 역사는 진행 중이다.

























**매일경남**

**인기** 아파트, 피서

검색

자세히

뉴스 / 오피니언 / 스포츠·연예 / 문화·생활 / 기획·특집 / 인물 / 인사·동향

로그인 | 회원가입 | 전체기사 | 지역 | 사회 | 정치·행정 | 수산·조선 | 경제 | 교육 | 국제 | 62지방선거

홈 > 뉴스 > 오피니언 > 미춘모 칼럼

뒤로가기 >

메일보내기 | 오류신고 | 프린트 | +가 | -가

## 하루 명상 체험기

진해시민포럼 집행위원장, 객원칼럼니스트

2010년 12월 14일 (화) 17:52:15

매일경남 ✉ webmaster@maeilgn.com

지난 주말에는 고도원의 '아침편지'가 운영하는 '깊은 산속 몽달샘'을 다녀왔다.

그동안 고도원의 아침편지를 통해서도 몽달샘을 자주 접해 왔는데, 이번 주말에 직접 몽달샘을 방문하여 명상 체험기를 올린다.



그동안 고도원의 아침편지를 통해서 중정목도 충수에 있는 노은년의 어느 산속에서 명상센터를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하루명상이나 비체명상 또는 꿈꾸는 부부학교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사실도 알고 있는 가운데 하루명상 체험코스에 초청하는 행사에 초대장을 받았다.

마침 나는 지난해부터 우연한 기회에 시민운동을 한답시고 스스로를 통제할 수 없을 만큼 주변의 일들에 대해 자신의 기준과 잣대로 간섭하는 이상한 버릇이 생겨 이쯤에서 자신을 한번쯤 돌아보고 쉬어갈 필요를 느끼던 터라 이 같은 프로그램이 나에게도 무척 반가운 기회였다.

새벽 4시에 일어나 5시에 출발해서 충주휴게소에 들려 아침을 먹고 주위를 살피니 휴게소 뒤편에는 아직 녹다 남은 잔설들이 보이는 것으로 보아 진해에서는 느끼지 못하던 추운 겨울이 이미 온 모양이다. 산길을 굽이돌아 올라가는 길에는 아직도 추워서 미처 녹지 못한 눈들이 나를 반긴다. 충주 문성자연휴양림을 지나자 눈이 발목을 잡고 있는 몽달샘 대형버스가 몽달샘입구 안내판을 걸머지고 나를 기다리는 모양이다.

주차장을 지나 미끄러운 눈길에 겁을 먹고 엉거주춤한 어정걸음을 걸으며 작은 나무다리를 건너서 오르는 오솔길은 깊은 산속 몽달샘을 찾아 오르는 느낌을 나에게 넉넉히 안겨준다.

작은 언덕을 오르자 “꿈은 이루어진다.”는 안내문과 함께 깊은 산속 몽달샘을 개척하고 만든 손길들의 이름들을 빨간 벽돌에 새긴 벽간판이 이채롭다. 예상보다 일찍 도착해서 아직은 이른 아침이라 나는 인기척이 뜸한 주변을 돌면서 주변경관들을 카메라에 담았다.

점수와 오리엔테이션을 마치고 깊은 산속 몽달샘이 처음 자리를 잡으며 세웠다는 첫 문에서 고도원님이 안내하는 걷기명상을 시작했다. 모두가 한 줄로 이어 서서 아주 느리고 느린 걸음으로 산길을 오른다. 얼마를 지나자 크게 짐이 한번 울리면 모두가 잠시 걸음을 멈추며 산에는 고요가 찾아 든다.

정적(靜寂)이 온 몸을 감싸며 멀고 가까운 바람소리 새소리가 들린다. 세상을 살면서 힘들고 어려웠던 모든 짐들을 산길에 버리고 모두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만 가지고 가라는 걷기명상의 깊은 뜻을 모두 받아드리기에 아직은 내가 너무 작은 그릇인지 모르겠다.

점심식사를 하다가도 종이 한번 울리면 모두가 그대로 멈추는 짧은 순간의 고요와 정적이 흐른다. 그 짧은 순간에 마치 자신의 기나긴 삶의 여정이 빠르게 뇌리를 스치는 느낌이다. 오수명상이나 향기명상 그리고 춤 명상을 경험하면서 인간의 영육(靈肉)이 각기 다른 영역에서 나를 지배하고 있을지 모른다는 평소 이해하기 힘든 느낌도 든다. 고도원의 아침편지라는 전자메일 하나를 매개로 서로 소통하면서 이렇게 큰 힘을 모을 수 있었던 것은 마음과 마음이 통하고 가슴과 가슴이 소통한 결과일 것이다.

사람들이 누구나 가슴에 응어리진 모든 미움과 원망을 비우고 용서와 사랑으로 뜨거운 가슴을 채운다는 일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미움과 용서들을 깊은 산속 몽달샘 여기저기에 버리고 간 흔적들이 보인다. 욕심과 미움을 버리고 용서하는 마음이 벽돌 한 장을 쌓고 나무 한그루를 심었을 것이다.

여음이 올라가려던 차에 이 피크가 온 느낌에 소외에 이르는 아득지에 도착하자마자 자에 의해 내려다 보

승용차 안에서 편안히 누워있는 기분과 달리 운전석에 앉은 이 순간엔 승용차에서 마치 금에 기어 오르는 듯 두 발을 잡고 진해로 돌아오는 귀향길은 유난히 정신이 맑아진 느낌을 느끼며 승용차의 주행속도를 알리는 계기가 이상하게 시속 100km 속도를 넘지 않으면서 편안한 마음의 여유를 느끼고 있었다. 이유 없이 남의 일에 참견하고 정의와 자유, 선과 진실,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원칙과 상식을 오로지 자신의 잣대와 기준에 맞추어 남을 비판하는 일로 일관하던 스스로를 다시 돌아본다.

과연 내가 오직 자신의 잣대와 기준으로 비판하는 사람의 위치에 있었다면 나는 얼마나 잘할 수 있을까?



# 매일경님



2009년 8월 10일 창간

☎ 055-638-0138 / FAX 055-638-9894

www.maeilgn.com

제24호 2010년 12월 15일 수요일 단기 434호 (금요일 11월 10일)

## 이준모 칼럼

## 하루 명상 체험기



이 준 모

진해시민모임 집행위원장  
객원칼럼니스트

지난 주말에는 고도원의 '아침편지'가 운영하는 '깊은 산속 웅달샘'을 다녀왔다. 그동안 고도원의 아침편지를 통해서 충청북도 충주에 있는 노은면의 어느 산속에서 명상센터가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하루명상이나 비제명상 또는 꿈꾸는 부부학교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사실도 알고 있는데 하루명상 체험코스에 초청하는 행사에 초대장을 받았다.

마침 나는 지난해부터 우연한 기회에 시민운동을 한답시고 스스로를 봉제할 수 없을 만큼 주변의 일들에 대해 자신의 기준과 잣대로 간섭하는 이상한 버릇이 생

겨 이쯤에서 자신을 한번쯤 돌아보고 쉬어갈 필요를 느끼던 터라 이 같은 프로그램이 나에게 주는 무척 반가운 기회였다.

새벽 4시에 일어나 5시에 출발해서 충주휴게소에 들려 아침을 먹고 주위를 살펴 휴게소 뒤편에는 아직 녹다 남은 잔설들이 보이는 것으로 보아 진해에서는 느끼지 못하던 추운 겨울이 이미 온 모양이다. 산길을 굽이돌아 올라가는 길에는 아직도 추워서 미처 녹지 못한 눈들이 나를 반긴다. 충주 문성 자연휴양림을 지나자 눈이 발목을 잡고 있는 웅달샘 대형버스가 웅달샘입구 안내판을 걸머지고 나를 기다리는 모양이다.

주차장을 지나 미끄러운 눈길에 걸을 먹고 영겨주춤한 여정길을 걸으며 작은 나무다리를 건너서 오르는 오솔길은 깊은 산속 웅달샘을 찾아 오르는 느낌을 나에게 넉넉히 안겨준다.

작은 언덕을 오르자 "꿈은 이루어진다."는 안내문과 함께 깊은 산속 웅달샘을 개척하고 만든 손길들의 이쁨들을 뽐낸 벽돌에 새긴 벽간판이 이채롭다. 예상보다 일찍 도착해서 아직은 이른 아침이라 나는 인기척이 들린 주변을 돌면서 주변경관들을 카메라에 담았다.

집수와 오리엔테이션을 마치고 깊은 산속 웅달샘이 처음 자리를 잡으며 세웠다는 첫 문에서 고도원님이 안내하는 걷기명상을 시작했다. 모두가 한 줄로 이어 서서 아주 느리고 느린 걸음으로 산길을 오른다. 얼마를 지나자 크게 정이 한번 울리면 모두가 잠시 걸음을 멈추며 산에는 고요가 찾아 든다.

정적(靜寂)이 온 몸을 감싸며 멀고 가까운 바람소리 새소리가 들린다. 세상을 살면서 힘들고 어려웠던 모든 짐들을 산길에 버리고 모두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만 가지고 가려는 걷기명상의 깊은 뜻을 모두 받아드리기에 아직은 내가 너무 작은 그릇인지 모르겠다.

점심식사를 하다가도 종이 한번 울리면 모두가 그대로 멈추는 짧은 순간의 고요와 정적이 흐른다. 그 짧은 순간에 마치 자신의 지나간 삶의 여정이 빠르게 뇌리를 스치는 느낌이다. 오수명상이나 향기명상 그리고 춤 명상을 경험하면서 인간의 영육(靈肉)이 각각 다른 영역에서 나를 지배하고 있을지 모른다는 평소 이해하기 힘든 느낌도 든다. 고도원의 아침편지라는 전자메일 하나를 매개로 서로 소통하면서 이렇게 큰 힘을 모을 수 있었던 것은 마음

과 마음이 통하고 가슴과 가슴이 소통한 결과일 것이다.

사람들이 누구나 가슴에 응어리진 모든 미움과 원망을 버우고 용서와 사랑으로 뜨거운 가슴을 채운다는 일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미움과 용서들을 깊은 산속 웅달샘 여기저기에 버리고 간 흔적들이 보인다. 육신과 마음을 버리고 용서하는 마음이 벽돌 한 장을 쌓고 나무 한그루를 심었을 것이다.

영육이 혼란스럽던 하루의 피로감을 느끼며 수원에 있는 아들집에 도착하자마자 잠에 취해 버렸다. 하루 밤을 자고 진해로 돌아오는 귀향길은 유난히 정신이 맑아진 느낌을 느끼며 승용차의 주행속도를 알리는 계기가 이상하게 시속 100km 속도를 넘지 않으면서 편안한 마음의 여유를 느끼고 있었다. 이유 없이 남의 일에 참견하고 정의와 자유, 선과 진실,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원칙과 상식을 오로지 자신의 잣대와 기준에 맞추어 남을 비판하는 일로 일관하던 스스로를 다시 돌아본다.

과연 내가 오직 자신의 잣대와 기준으로 비판하는 사람의 위치에 있었다면 나는 얼마나 잘할 수 있을까?



# 21

지나침은 모자람만 못하다.

논어의 선진편(先進篇)에 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는 말이 나온다. 정도를 지나침은 미치지 못함과 같다는 뜻으로, 중용(中庸)이 중요함을 이르는 말이다.

중용(中庸)이란 지나치거나 모자라지도 아니하고 한쪽으로 치우치지도 아니한다는 뜻이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인간적 욕심과 도덕적 본성이 함께 내재되어 있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도 인간적 욕심이 없을 수 없으며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라도 도덕적 본성이 없을 수 없는데, 두 마음을 다스리는 이치가 중용이라 했다. 오히려 지나침은 모자람만 못하다고 했는데 요즘 우리사회는 모두가 너무 차고 넘치는 모양이다.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4대강을 모두 파 해치겠다고 하고 야당은 절대 안 된다고 아우성이다. 국회에서도 여당은 예산안을 법대로 처리하겠다고 하고 야당은 날치기 통과라며 난투극을 벌인다. 서울시장은 서울시 의원들이 '전면무상 급식 조례안'을 야당 시의원들의 물리적 압력행사에 의해 강제 처리되었다며 밤잠도 이루지 못하고 분하다면서 시의회 출석을 거부했다. 경상남도의회도 무상급식과 어르신 틀니지원 사업 예산 삭감 여부를 놓고 예결특위가 밤샘 공방을 이어갔다. 통합 창원시장은 의욕이 차고 넘치는지 시민들 의사도 무시하며 밀어붙이기식 막무가내 행보가 거침없어 보인다.

모두가 너무 잘하려는 과욕 때문이다. 무엇이건 너무 잘 해보려는 욕심이거나 자신의 임기 내에 특별한 일을 해내야 한다는 강박관념(強迫觀念)에 시달리는지도 모른다. 내가 아니라도 세상은 돌아가고 발전한다는 사실은 잊어버리고 모두가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착각을 하는 모양이다. 시대가 바뀌고 세상이 바뀌지만 우리나라의 정치풍토는 변화를 거부한다. 똑 같은 사실도 여와 야가 전혀 다르고 상반된 주장만 한다. 전 세계를 하나로 묶어 버린 인터넷 세상이 이제는 똑똑한 스마트폰 출현으로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소통 공간의 생태계도 바꾸고 말았다.

SNS라는 새로운 소통공간이 생기면서 이제는 세상이 복잡해서 극단적으로 이쪽 아니면 저쪽이라고 쉽게 단정할 수 없다. 스마트한 세상을 흑백논리로 보는 건 굉장히 위험한 사고방식이다. 실시간으로 전 세계가 소통하는 융합시대의 시대정신은 수평적인 사고방식이다. 흑백논리는 머리 나쁜 사람들의 사고방식이다. 수평적인 사고방식은 균형 감각이 절대적 필요조건이다. 균형감각에 대한 참 좋은 표현 중의 하나로 일본 여류작가 "시오노 나나미"의 표현이 주는 메시지를 우리 모두가 의미 있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균형 감각이란 양극단의 정확한 중간지점에 가만히 서 있는 것이 아니다. 진정한 균형감각은 양극단을 오고 가면서 끊임없이 최적 점을 탐색해 나가는 과정이다. 균형감각은 정적인 개념이 아니라 동적인 개념이다. 두개의 선택 중에서 정답은 그 도중에 있게 마련인데 그건 상황에 따라서 역동적으로 바뀐다. 그러므로 그것을 찾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균형을 추구해 나가는 수밖에 없다. 이제는 지나치거나 모자라지도 않는 중용(中庸)의 문제를 넘어 최적 점을 향해 균형감각을 찾아 부단히 노력하고 열심히 뛰어야 하는 스마트한 세상이다.

제품을 파는 사람이 이윤을 너무 많이 남기면 사는 사람은 그만큼 손해를 보기 마련이다. 내가 너무 똑똑하면 상대가 바보가 되기 마련이고 내가 너무 잘하면 상대가 할 일이 없어진다. 이제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도 너무 잘하겠다는 욕심을 조금만 버리자. 그리고 지방의원들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들도 너무 잘하겠다는 욕심을 반만 버리자. 다음 세대들이 할 일이 없을 만큼 모두 다 해버리고 너무 잘하면 다음세대가 할 일이 없어진다. 그러면 그도 참 난감한 일이다.

밤새 고통스럽게 고민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평소에 가끔 찾아뵈던 노스님께서 "일은 되도록 돼있는만큼 되는 거다. 혼자 애쓰지 마라." 고 하더라는 이야기를 자신의 블로그에 올렸다. 세상사라는게 발버둥치고 안 될 일이 되는 것도 아니고, 될 일이 안되지도 않는다는 말씀으로 알아 들었다고 한다. 이제 우리도 너무 발버둥치며 자기주장만하지 말고 자신이 다하려고 애쓰지도 말자. 그리고 우리 모두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의 절반만 잘하자. 지나침은 모자람만 못하기 때문이다.



인기 아파트, 피서

검색

자세히



뉴스 / 오피니언 / 스포츠·연예 / 문화·생활 / 기획·특집 / 인물 / 인사·동정

로그인

회원가입

인사 | 부음 |

홈 > 뉴스 > 오피니언 > 이춘모 칼럼

뒤로가기 >

메일보내기 오류신고 프린트 +가 -가

## 지나침은 모자람만 못하다

이춘모 / 진해시민포럼 집행위원장 객원칼럼니스트

2010년 12월 12일 (일) 17:22:11

매일경남 webmaster@maeilgn.com

논어의 선진편(先進篇)에 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는 말이 나온다. 정도를 지나침은 미치지 못함과 같다는 뜻으로, 중용(中庸)이 중요함을 이르는 말이다.

중용(中庸)이란 지나치거나 모자라지도 아니하고 한쪽으로 치우치지도 아니한다는 뜻이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인간적 욕심과 도덕적 본성이 함께 내재되어 있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도 인간적 욕심이 없을 수 없으며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라도 도덕적 본성이 없을 수 없는데, 두 마음을 다스리는 이치가 중용이라 했다. 오히려 지나침은 모자람만 못하다고 했는데 요즘 우리사회는 모두가 너무 차고 넘치는 모양이다.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4대강을 모두 파 해치겠다고 하고 야당은 절대 안 된다고 아우성이다. 국회에

서도 여당은 예산안을 법대로 처리하겠다고 하고 야당은 날치기 통과라며 난투극을 벌린다. 서울시장도 서울시의원들이 '전면무상 급식 조례안'을 야당 시의원들의 물리적 압력행사에 의해 강제 처리되었다며 밤잠도 이루지 못하고 분하다면서 시의회 출석을 거부했다.

경상남도의회도 무상급식과 어르신 돌니지원 사업 예산삭감 여부를 놓고 예결특위가 밤샘 공방을 이어갔다. 통합 창원시장은 의욕이 차고 넘치는지 시민들 의사도 무시하며 밀어붙이기식 막무가내 행보가 거침없어 보인다.

모두가 너무 잘하려는 과욕 때문이다. 무엇이건 너무 잘 해보려는 욕심이거나 자신의 임기 내에 특별한 일을 해내야 한다는 강박관념(強迫觀念)에 시달리는지도 모른다. 내가 아니라도 세상은 돌아가고 발전한다는 사실은 잊어버리고 모두가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착각을 하는 모양이다.

시대가 바뀌고 세상이 바뀌지만 우리나라의 정치풍토는 변화를 거부한다. 똑 같은 사실도 여와 야가 전혀 다르고 상반된 주장만 한다. 전 세계를 하나로 묶어 버린 인터넷 세상이 이제는 똑똑한 스마트폰 출현으로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소통공간의 생태계도 바꾸고 말았다.

SNS라는 새로운 소통공간이 생기면서 이제는 세상이 복잡해서 극단적으로 이쪽 아니면 저쪽이라고 쉽게 단정할 수 없다. 스마트한 세상을 흑백논리로 보는 건 굉장히 위험한 사고방식이다. 실시간으로 전 세계가 소통하는 융합시대의 시대정신은 수평적인 사고방식이다.

흑백논리는 머리 나쁜 사람들의 사고방식이다. 수평적인 사고방식은 균형 감각이 절대적 필요조건이다. 균형감각에 대한 참 좋은 표현 중의 하나로 일본 여류작가 "시오노 나나미"의 표현이 주는 메시지를 우리 모두가 의미 있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균형 감각이란 양극단의 정확한 중간지점에 가만히 서 있는 것이 아니다. 진정한 균형감각은 양극단을 오고 가면서 끊임없이 최적 점을 탐색해 나가는 과정이다. 균형감각은 정적인 개념이 아니라 동적인 개념이다. 두개의 선택 중에서 정답은 그 도중에 있게 마련인데 그건 상황에 따라서 역동적으로 바뀐다.

그러므로 그것을 찾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균형을 추구해 나가는 수밖에 없다. 이제는 지나치거나 모자라지도 않는 중용(中庸)의 문제를 넘어 최적 점을 향해 균형감각을 찾아 부단히 노력하고 열심히 뛰어야 하는 스마트한 세상이다.

제품을 파는 사람이 이윤을 너무 많이 남기면 사는 사람은 그만큼 손해를 보기 마련이다. 내가 너무 똑똑하면 상대가 바보가 되기 마련이고 내가 너무 잘하면 상대가 할 일이 없어진다. 이제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도 너무 잘하겠다는 욕심을 조금만 버리자. 그리고 지방의원들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들도 너무 잘하겠다는 욕심을 반만 버리자. 다음 세대들이 할 일이 없을 만큼 모두 다 해버리고 너무 잘하면 다음세대가 할 일이 없어진다. 그러면 그도 참 난감한 일이다.



밤새 고통스럽게 고민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평소에 가끔 찾아뵈던 노스님께서 "일은 되도록 돼있는만큼 되는 거다. 혼자 애쓰지 마라." 고 하더라는 이야기를 자신의 블로그에 올렸다. 세상사라는게 발버둥친다고 안 될 일이 되는 것도 아니고, 될 일이 안되지도 않는다는 말씀으로 알아 들었다고 한다. 이제 우리도 너무 발버둥치며 자기주장만하지 말고 자신이 다하려고 애쓰지도 말자. 그리고 우리 모두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의 절반만 잘하자. 지나침은 모자람만 못하기 때문이다.

## 〈 지면 보도 〉



# 매일경남



2009년 8월 10일 창간

☎ 055-638-0138 / FAX 055-638-9894

www.maeilgn.com

제30호

2010년 12월 13일 월요일 단가 434원 (음력 11월 8일)

## 이준모 칼럼

## 지나침은 모자람만 못하다



이 준 모

진해시민모임 집행위원장  
객원칼럼니스트

논어의 선진편(先進篇)에 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는 말이 나온다. 정도를 지나침은 미치지 못함과 같다는 뜻으로, 중용(中庸)이 중요함을 이르는 말이다.

중용(中庸)이란 지나치거나 모자라지도 아니하고 한쪽으로 치우치지도 아니한다는 뜻이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인간적 욕심과 도덕적 본성이 함께 내재되어 있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도 인간적 욕심이 없을 수 없으며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라도 도덕적 본성이 없을 수 없는데, 두 마음을 다스리는 이치가 중용이라 했다.

오히려 지나침은 모자람만 못하다고 했는 데 요즘 우리사회는 모두가 너무 차고 넘치

는 모양이다.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4대강을 모두 파헤치겠다고 하고 야당은 절대 안 된다고 아우성이다. 국회에서도 여당은 예산안을 법대로 처리하겠다고 하고 야당은 날치기 통과라며 난투극을 벌인다.

서울시장도 서울시의원들이 '전면무상 급식 조례안'을 야당 시의원들의 물리적 압력 행사에 의해 강제로 처리되었다며 밤잠도 이루지 못하고 분하다면서 시의회 출석을 거부했다. 경상남도의회도 무상급식과 어르신 돌봄 지원 사업 예산삭감 여부를 놓고 예결특위가 밤샘 공방을 이어갔다. 통합 창원시장은 의욕이 차고 넘치는지 시민들 의사도 무시하며 밀어붙이기식 막무가내 행보가 거침없어 보인다.

모두가 너무 잘하려는 과욕 때문이다. 무엇인가 너무 잘 해보려는 욕심이거나 자신의 인기 내에 특별한 일을 해내야 한다는 강박관념(強迫觀念)에 시달리는지도 모른다. 내가 아니라도 세상은 돌아가고 발전한다는 사실은 잊어버리고 모두가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착각을 하는 모양이다.

시대가 바뀌고 세상이 바뀌지만 우리나라의 정치풍토는 변화를 거부한다. 똑 같은 사실도 여와 아가 전혀 다르게 상반된 주장만

한다. 전 세계를 하나로 묶어 버린 인터넷 세상이 이제는 똑똑한 스마트폰 출현으로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소통공간의 생태계도 바꾸고 말았다.

SNS라는 새로운 소통공간이 생기면서 이제는 세상이 복잡해서 극단적으로 이쪽 아니면 저쪽이라고 쉽게 단정할 수 없다. 스마트한 세상을 흑백논리로 보는 건 굉장히 위험한 사고방식이다. 실시간으로 전 세계가 소통하는 융합시대의 시대정신은 수평적인 사고방식이다. 흑백논리는 머리 나쁜 사람들의 사고방식이다. 수평적인 사고방식은 균형 감각이 절대적 필요조건이다. 균형감각에 대한 참 좋은 표현 중의 하나로 일본 여류작가 '시오노 나나미'의 표현이 주는 메시지를 우리 모두가 의미 있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균형 감각이란 양극단의 정확한 중간지점에 가만히 서 있는 것이 아니다. 진정한 균형 감각은 양극단을 오고 가면서 끊임없이 최적점을 탐색해 나가는 과정이다. 균형감각은 정적인 개념이 아니라 동적인 개념이다. 두 개의 선택 중에서 정답은 그 도중에 있게 마련인데 그건 상황에 따라서 역동적으로 바뀐다. 그러므로 그것을 찾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균형을 추구해 나가는 수밖에 없다. 이제는 지나치거나 모자라지도 않는 중용(中庸)

의 문제를 넘어 최적점을 향해 균형감각을 찾아 부단히 노력하고 열심히 뛰어아가는 스마트한 세상이다.

제품을 파는 사람이 이유를 너무 많이 남기면 사는 사람은 그만큼 손해를 보기 마련이다. 내가 너무 똑똑하면 상대가 바보가 되기 마련이고 내가 너무 잘하면 상대가 할 일이 없어진다. 이제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도 너무 잘하겠다는 욕심을 조금만 버리자. 그리고 지방의원들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들도 너무 잘하겠다는 욕심을 반만 버리자. 다음 세대가 할 일이 없을 만큼 모두 다 해 버리고 너무 잘하면 다음세대가 할 일이 없어진다. 그러면 그도 참 난감한 일이다.

밤새 고통스럽게 고민한 오세훈 서울시장 이 평소에 가끔 찾아뵈던 노스님께서 "일은 되도록 돼있는만큼 되는 거다. 혼자 애쓰지 마라." 고 하더라는 이야기를 자신의 블로그에 올렸다. 세상사라는게 발버둥친다고 안 될 일이 되는 것도 아니고, 될 일이 안되지도 않는다는 말씀으로 알아 들었다고 한다.

이제 우리도 너무 발버둥치며 자기주장만 하지 말고 자신이 다하려고 애쓰지도 말자. 그리고 우리 모두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의 절반만 잘하자. 지나침은 모자람만 못하기 때문이다.

# 22

결론 없는 시대적 담론(談論), 정의(正義)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과연 『정의란 무엇인가』 나도 무척 궁금하던 질문이다. 얼마 전에는 평소 가깝게 지내던 사람이 마침 2010년의 우리사회 화두인 마이클 샌델의 정치철학서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50만부나 팔리면서 서점가의 베스트셀러로 인기가 한창이라는 이야기를 한다.

나는 보기보다 급한 성격만큼이나 아직도 버리지 못한 조금증 때문에 진득하게 책 한권을 제대로 읽지 못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책의 제목이 주는 매력 때문인지 책을 한번 빌려볼 요령으로 부탁을 해 보았지만 다른 누가 읽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후로는 소식이 없다.

아직은 『정의란 무엇인가』를 읽지 못했지만 내가하면 로맨스고 남이하면 불륜이라는 이야기같이 어차피 인간의 원초적 본능은 누구나 자기중심으로 세상을 살기 마련이다. 어쩌면 우리는 똑 같은 한 가지 사실 (fact)을 가지고 로맨스와 불륜의 극단적 시각에서 바라보면서도 모두가 자기를 중심으로 한 사고와 주장에 매몰된 착각 속에서 세상을 사는 것이다. 모두 자기 잘난 멋에 세상을 살고 자기가 가장 똑똑한 사람으로 착각하며 세상을 산다는 이야기다. 마치 정의도 맹인모상(盲人摸象)같이 장님이 코끼리 만지듯 각자가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결론 없는 주장이거나 이상일 뿐이라는 짐작이다.

다만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생각하는 '정의'는 다원주의적인 사회에 살면서 사람들이 서로 다른 윤리적 이상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이렇게 솔직한 의견 불일치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사회통합의 기초인 상식과 소통으로 협상과 계약에 의한 절제된 정의를 이야기할 뿐이다.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진정한 정의에 대한 명확한 근거는 없다는 생각이다. 이것이 또한 인간의 분명한 한계다.

최근에는 25만 건에 달하는 미국 외교전문 공개를 통해 세계 최고의 '이슈 메이커'로 떠오른 위키릭스 설립자인 줄리언 어산지(39)가 화제의 중심에 서있다. 위키릭스는 위키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위키피디아의 집단지성을 모델로 만들어진 웹사이트다. 2007년 개설된 위키릭스는 이라크 전쟁에서 미군의 잘못된 행위를 폭로하면서 세상에 이름을 알렸다.

어산지는 “우리의 목적은 권력 남용을 통해 사회를 반시민적으로 이끌려는 조직에 맞서는 것이다.”라고 주장하며 “법이란 힘 있는 사람이 ‘이것이 법이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힐러리 클린턴이 법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다.”라는 말을 하고 있다. 사회적 약속과 질서를 이유로 권력의 남용을 용인할 것인지 아니면 잘못된 사실을 공개하는 것이 죄가 되는지 하는 문제도 정의라는 잣대로 쉽게 가늠하기 어렵다.

공평한 사회를 최고의 가치로 삼는 사회주의 집단인 북한에서는 공평하지 못한 권력의 3대 세습이 진행되고 있다. 경쟁을 통한 부의 축적을 사회발전의 가치로 삼는 자본주의 집단인 대한민국에서는 경쟁 없는 부의 3대 세습이 아무렇지 않게 용인되고 있다. 무고한 연평도 주민들을 무차별 포격한 사실을 현역 육군 장

교가 “서해 연평도 포격 책임은 남한에 있다.” 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올리고, 매 한 대에 100만원이라는 재벌2세와 노조원의 비대칭적인 신분과 강요된 계약이 보여주듯 어떤 경우라도 인간은 자기 나름으로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이미 모순으로 얼룩지고 엉크러진 원칙과 상식 없는 변명까지 준비하기 마련이다.

“처녀가 임신해도 할 말이 있다.” 는 이야기는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나 단순히 지어낸 말이 아니라는 사실이 분명하다. 인간의 원초적 본능을 이야기하고 있다. 세상에는 음과 양이 있고 남녀가 있으며 정의와 불의가 있다. 음양과 남녀는 서로 조화를 이루는 보완의 관계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에는 남과 북이 충돌하며 여와 야가 타협할 줄 모르고 낙동강 물길마저 충돌하고 있다. 동서가 갈리고 진보와 보수가 갈리면서 원칙과 상식 없는 주장들만 난무한다. 마치 편을 가르고 줄서기에 전 국민이 목을 매는 현상이다.

이제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2010년 한 해 동안 센델의 『정의란 무엇인가』에 국가적 환호를 보내며 ‘정의’에 목을 매고 공정한 사회에 목말라하는 우리의 현실과 사회적 기표(奇表)를 바라본다. 이제 결론 없는 시대적 담론(談論)인 정의(正義)라는 거대담론은 잠시 접어 두자, 그리고 서로가 동의할 수 있는 보편타당한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우리 모두 소원 해 보자. 그리고 이제는 서로를 이해하고 인정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 매일경남

인기 아파트, 피서

검색

자세히



뉴스 / 오피니언 / 스포츠·연예 / 문화·생활 / 기획·특집 / 인물 / 인사·동정

로그인 회원가입

홈 > 뉴스 > 오피니언 > 이춘모 칼럼

뒤로가기 >

메일보내기 오류신고 프린트

가

가

## 결론 없는 시대적 담론(談論), 정의(正義)

이춘모 / 진해시민포럼 집행위원장·객원칼럼니스트

2010년 12월 05일 (일) 17:32:35

매일경남 ✉ webmaster@maeilgn.com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과연 『정의란 무엇인가』나도 무척 궁금하던 질문이다. 얼마 전에는 평소 가까이 지내던 사람이 마침 2010년의 우리사회 화두인 마이클 센델의 정치철학서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50만부나 팔리면서 서점가의 베스트셀러로 인기가 한창이라는 이야기를 한다.

나는 보기보다 급한 성격만큼이나 아직도 버리지 못한 조금증 때문에 진득하게 책 한권을 제대로 읽지



못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책의 제목이 주는 매력 때문인지 책을 한번 빌려볼 요청으로 부탁을 해 보았지만 다른 누가 읽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후로는 소식이 없다.

아직은 『정의란 무엇인가』를 읽지 못했지만 내가하면 로맨스고 남이하면 불륜이라는 이야기같이 어차피 인간의 원초적 본능은 누구나 자기중심으로 세상을 살기 마련이다. 어쩌면 우리는 똑 같은 한 가지 사실(fact)을 가지고 로맨스와 불륜의 극단적 시각에서 바라보면서도 모두가 자기를 중심으로 한 사고와 주장에 매몰된 착각 속에서 세상을 사는 것이다.

모두 자기 잘난 멋에 세상을 살고 자기가 가장 똑똑한 사람으로 착각하며 세상을 산다는 이야기다. 마치 정의도 맹인모상(盲人摸象)같이 장님이 코끼리 만지듯 각자가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결론 없는 주장이거나 이상일 뿐이라는 짐작이다.

다만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생각하는 '정의'는 다원주의적인 사회에 살면서 사람들이 서로 다른 윤리적 이상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이렇게 솔직한 의견 불일치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사회통합의 기초인 상식과 소통으로 협상과 계약에 의한 절제된 정의를 이야기할 뿐이다.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진정한 정의에 대한 명확한 근거는 없다는 생각이다. 이것이 또한 인간의 분명한 한계다.

최근에는 25만 건에 달하는 미국 외교전문 공개를 통해 세계 최고의 '이슈 메이커'로 떠오른 위키리크스 설립자인 줄리언 어산지(39)가 화제의 중심에 서있다. 위키리크스는 위키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위키피디아의 집단지성을 모델로 만들어진 웹사이트다. 2007년 개설된 위키리크스는 이라크 전쟁에서 미군의 잘못된 행위를 폭로하면서 세상에 이름을 알렸다.

어산지는 “우리의 목적은 권력 남용을 통해 사회를 반시민적으로 이끌려는 조직에 맞서는 것이다.”라고 주장하며 “법이란 힘 있는 사람이 ‘이것이 법이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할러리 클린턴이 법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다.”라는 말을 하고 있다. 사회적 약속과 질서를 이유로 권력의 남용을 용인할 것인지 아니면 잘못된 사실을 공개하는 것이 죄가 되는지 하는 문제도 정의라는 잣대로 쉽게 가능하기 어렵다.

공평한 사회를 최고의 가치로 삼는 사회주의 집단인 북한에서는 공평하지 못한 권력의 3대 세습이 진행되고 있다. 경쟁을 통한 부의 축적을 사회발전의 가치로 삼는 자본주의 집단인 대한민국에서는 경쟁 없는 부의 3대 세습이 아무렇지 않게 용인되고 있다.

무고한 연평도 주민들을 무차별 포격한 사실을 현역 육군 장교가 “서해 연평도 포격 책임은 남한에 있다.”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올리고, 매 한 대에 100만원이라는 재벌2세와 노조원의 비대칭적인 신분과 강요된 계약이 보여주듯 어떤 경우라도 인간은 자기 나름으로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이미 모순으로 얼룩지고 엉크러진 원칙과 상식 없는 변명까지 준비하기 마련이다.

“처녀가 임신해도 할 말이 있다.”는 이야기는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나 단순히 지어낸 말이 아니라는

사실이 분명하다. 인간의 원초적 본능을 이야기하고 있다. 세상에는 음과 양이 있고 남녀가 있으며 정의와 불의가 있다. 음양과 남녀는 서로 조화를 이루는 보완의 관계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에는 남과 북이 충돌하며 여와 아가 타협할 줄 모르고 낙동강 물길마저 충돌하고 있다.

동서가 갈리고 진보와 보수가 갈리면서 원칙과 상식 없는 주장들만 난무한다. 마치 편을 가르고 줄서기에 전 국민이 목을 매는 현상이다.

이제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2010년 한 해 동안 센델의 『정의란 무엇인가』에 국가적 환호를 보내며 ‘정의’에 목을 매고 공정한 사회에 목말라하는 우리의 현실과 사회적 기표(奇表)를 바라본다.

이제 결론 없는 시대적 담론(談論)인 정의(正義)라는 거대담론은 잠시 접어 두자. 그리고 서로가 동의할 수 있는 보편타당한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우리 모두 소원 해 보자. 그리고 서로를 이해하고 인정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 < 지면 보도 >



# 매일경남



2009년 8월 10일 창간

☎ 055-638-0138 / FAX 055-636-9894

www.maeiljeongnim.com

제303호

2010년 12월 6일 월요일 단가 434원 (윤역 11월 1일)

## 이준모 칼럼

## 결론 없는 시대적 담론(談論), 정의(正義)



이 준 모

진해시민포럼 집행위원장  
각원칼럼니스트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과연 ‘정의란 무엇인가’ 나도 무척 궁금하던 질문이다. 얼마 전에는 평소 가까이 지내던 사람이 마침 2010년의 우리사회 화두인 마이클 센델의 정치철학서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50만부나 팔리면서 서점가의 베스트셀러로 인기가 한창이라는 이야기를 한다.

나는 보기보다 급한 성격만큼이나 아직도 버리지 못한 조금의 때문에 잔뜩하게 책 한권을 제대로 읽지 못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책의 제목이 주는 매력 때문인지 책을 한번 빌려볼 요령으로 부탁을 해 보았지만 다른 누가 읽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후로는 소식이 없다.

아직은 ‘정의란 무엇인가’를 읽지 못했지

만 내가하면 로맨스고 남이하면 불륜이라는 이야기같이 어차피 인간의 원초적 본능은 누구나 자기중심으로 세상을 살기 마련이다. 어쩌면 우리는 똑 같은 한 가지 사실(fact)을 가지고 로맨스와 불륜의 극단적 시각에서 바라보면서도 모두가 자기를 중심으로 한 사고와 주장에 매몰된 착각 속에서 세상을 사는 것이다. 모두 자기 잘난 멋에 세상을 살고 자기가 가장 똑똑한 사람으로 착각하며 세상을 산다는 이야기다. 마치 정의도 맹인모상(盲人摸象)같이 장님이 코끼리 만지듯 각자가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결론 없는 주장이거나 이상일 뿐이라는 집착이다.

다만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생각하는 ‘정의’는 다원주의적인 사회에 살면서 사람들이 서로 다른 윤리적 이상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이렇게 솔직한 의견 불일치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사회통합의 기초인 상식과 소통으로 협상과 계약에 의한 절제된 정의를 이야기할 뿐이다.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진정한 정의에 대한 명확한 근거는 없다는 생각이다. 이것이 또한 인간의 분명한 한계다.

최근에는 25만 건에 달하는 미국 외교전문 공개를 통해 세계 최고의 ‘이슈 메이커’로 떠오른 위키릭스 설립자인 줄리언 어산지(39)가 화제의 중심에 서있다. 위키릭스는 위

키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위키피디아의 집단지성을 모델로 만들어진 웹사이트다. 2007년 개설된 위키릭스는 이라크 전쟁에서 미군의 잘못된 행위를 폭로하면서 세상에 이름을 알렸다.

어산지는 “우리의 목적은 권력 남용을 통해 사회를 반시민적으로 이끌려는 조직에 맞서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며 “법이란 힘 있는 사람이 ‘이것이 법이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힘러리 플린턴이 법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다.”라는 말을 하고 있다. 사회적 약속과 질서를 이유로 권력의 남용을 용인할 것인지 아니면 잘못된 사실을 공개하는 것이 죄가 되는지 하는 문제도 정의라는 것대로 쉽게 가능하기 어렵다.

공평한 사회를 최고의 가치로 삼는 사회주의 집단인 북한에서는 공평하지 못한 권력의 3대 세습이 진행되고 있다. 경쟁을 통한 부의 축적을 사회발전의 가치로 삼는 자본주의 집단인 대한민국에서는 경쟁 없는 부의 3대 세습이 아무렇지 않게 용인되고 있다. 무고한 연평도 주민들을 무차별 포격한 사실을 현역 육군 장교가 “서해 연평도 포격 책임은 남한에 있다.”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올리고, 매 한 대에 100만 원이라는 재벌2세와 노조원의 비대칭적인 신분과 강요된 계약이 보여 주듯 어떤 경우라도 인간은 자기 나름으로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이미 모순으로 얼룩지고 영크러진 원칙과 상식 없는 변명까지 준비하기 마련이다.

“쳐다봐도 읽히지 않을 법한 이야기.”는 이야기는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나 단순히 지어낸 말이 아니라는 사실이 분명하다. 인간의 원초적 본능을 이야기하고 있다. 세상에는 음과 양이 있고 남녀가 있으며 정의와 불의가 있다. 음양과 남녀는 서로 조화를 이루는 보완의 관계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에는 남과 북이 충돌하며 여와 아가 타협할 줄 모르고 낙동강 물길마저 충돌하고 있다. 동서가 갈리고 진보와 보수가 갈리면서 원칙과 상식 없는 주장들만 난무한다. 마치 편을 가르고 줄서기에 전 국민이 목을 매는 현상이다.

이제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2010년 한 해 동안 센델의 ‘정의란 무엇인가’에 국가적 환호를 보내며 ‘정의’에 목을 매고 공정한 사회에 목말라하는 우리의 현실과 사회적 기표(奇表)를 바라본다.

이제 결론 없는 시대적 담론(談論)인 정의(正義)라는 거대담론은 잠시 접어 두자. 그리고 서로가 동의할 수 있는 보편타당한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우리 모두 소원 해 보자. 그리고 서로를 이해하고 인정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 지방자치의 허와 실

블로그

장복산

<http://blog.daum.net/idel>

저자

장복산

발행일

2011.04.08 19:08:38

 블로그